

정책연구보고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2024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유의사항

1. 본 연구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2. 본 연구보고서는 정책입안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타기관에 불필요한 자료유출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책임연구원: 김병조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홍태영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오동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부 교수)

이상목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국 방 대 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발 간 사

글로벌 국제안보 질서와 한반도 질서 차원에서 탈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2차 냉전시대적 양상이 대두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유주의적 안보정책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접어두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 재현, 북한의 공세적 핵·대남전략에 대응하여 군사적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우방과의 안보협력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보에 대한 단결된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1989년부터 정례적으로 매년 국민과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범국민안보의식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의식 변화추이를 살피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할지를 성찰하고, 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본 조사의 의미와 가치가 더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은 높고,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사 결과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보에 위협을 주는 대외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직시하고 있고, 대내 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인구절벽’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을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안보 협력에 관하여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수행해온 전통 있는 조사입니다. 70여 개의 고정 설문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시의성 있는 현안 설문을 통해 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이 필요한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분야별 우수한 학자와 전문가에게 정책대안연구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정책당국을 대상으로 발표와 소통을 거친 후 좀 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본 보고서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가 안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들에게 기초자료가 되고, 아울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정책결정자분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박 영 준



- 1. 2024년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개요 1
- 2.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 홍태영 5
- 3. 국민의 대북 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 김병조 35
- 4.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군 신뢰도 제고 방안 / 오동진 .. 71
- 5. 병역제도와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 이상목 125



2024년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개요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국민 안보의식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안보정책 및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조사목적이 있다.

조사는 일반국민, 전문가, 군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일반국민	전문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표본수	1,200명	100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8\%p$ (일반국민)	
조사기간	2024년 6월 20일~7월 19일	

II. 조사방법

구분	간부	병사
표본수	912명	747명
조사방법	집단면접조사(QR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또는 우편조사 병행)	
조사부대	전 부대 중 일부 부대 선정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군별 계급별 할당표집(Quota Sampling)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3.25\%p$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3.59\%p$
조사기간	2024년 7월 18일~9월 11일	

Ⅲ.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1,300)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92.3
	전문가	(100)	7.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본인 안보수준	상	(389)	32.4
	중	(580)	48.3
	하	(231)	19.3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17)	18.1
	30대	(194)	16.2
	40대	(226)	18.8
	50대	(255)	21.3
	60대 이상	(308)	25.7
지역별	서울	(140)	11.7
	경기/인천	(245)	20.4
	부산/울산/경남	(208)	17.3
	대구/경북	(141)	11.8
	광주/전라	(170)	14.2
	대전/충청/세종	(205)	17.1
지역크기	강원/제주	(91)	7.6
	대도시	(524)	43.7
	중·소도시	(639)	53.3
직업별	읍/면	(37)	3.1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50)	4.2
	자영업자	(185)	15.4
	판매/서비스직	(194)	16.2
	기능/숙련공	(127)	10.6
	일반 노무직	(41)	3.4
	사무/기술직	(283)	23.6
	경영/관리직	(19)	1.6
	전문/자유직	(7)	0.6
	군인/경찰/소방	(-)	-
	전업주부	(169)	14.1
	학생	(73)	6.1
	무직/휴직/은퇴	(52)	4.3
	학력별	중졸 이하	(59)
고등학교		(440)	36.7
전문대		(266)	22.2
4년제 대학교		(427)	35.6
대학원 이상		(8)	0.7
생활수준별	상	(73)	6.1
	중	(544)	45.3
	하	(583)	48.6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 · 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인 SPSS로 분석하였다.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중 응답자 특성의 사례수가 30표본 미만인 경우, 모집단 정규 분포에 수렴하지 않아 이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별도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홍 태 영*

- I. 서론: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의 변화
- II. 국민안보의식 변화 추세
- III. 한미동맹 인식 변화
- IV. 정책 대안 모색

요약문

현 시점에서 주목할만한 국제적 사건은 두 개의 전쟁, 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이 두 개의 전쟁은 국제적인 세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제적 여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이 교란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북한군의 파병 이면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친밀성의 증대가 가져올 효과가 그것이다. 최근 북한 화성 19형 ICBM의 발사실험은 고체연료 미사일로의 세대교체와 다 탄두 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이고, 이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통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즉 핵잠수함 등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북한-중국-러시아의 연대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응 필요성을 가져오고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 1기 트럼프 시기 미국과 북한의 대화 및 협상을 이끌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할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2024년 국민안보의식 조사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때, 특이할만한 사항은 지난 정부에 비하여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호적 입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협력 관계가 최근 상당한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한미일 우호관계의 돈독함이 증대되고 또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미동맹을 비롯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가 중요한 어젠다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의 추구, 즉 관세의 보편적 인상,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 가능성이 높다. 그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 중국에 대한 특별관세 등 - 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경제안보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분명하다. 트럼프행정부 방위비협상 결과를 일종의 행정협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재협상의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한미연합 훈련, 미군주둔, 미군의 전략자산 등등의 문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1. 서론: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 변화

최근의 다양한 국제적 사건들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정세 및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작업은 한국의 안보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안보의식 조사를 통해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를 안보정책 구상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실행과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1년 코로나 19의 팬데믹 종식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2여년 간의 팬데믹 상황은 이전과는 달라진 국제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국가들은 자국이기주의 및 국가주의가 강화되었고, 국제협력은 약화되고 세계화 역시 주춤하였다. 팬데믹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더욱 더 주목을 받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더 절실해졌다. 따라서 안보개념에 있어서도 팬데믹과 같은 보건안보의 영역,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테러 등 비전통적 영역의 안보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것은 인간안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안보의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¹⁾

특히 최근에는 ‘경제안보’의 영역은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역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의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중간의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반도체는 민간기술 및 산업의 영역은 물론 첨단 정밀무기 및 네트워크 등 군사장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23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우려대상국의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해외투자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투자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우려대상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쓰이지 않도록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²⁾ 곧이어 반도체 부문 수출통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를 강화하여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민군겸용 품목과 해당 품목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차세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보낼 수 없다. 이 같은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국 간 반도체 무역이 감소해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 법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거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정책이었던 ‘반도체지원법’ 즉 미국에 건설한 반도체 제조시

1) 홍규덕 “비전통적 안보의 재조명: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방정책연구』, 통권 129호, 2020.

2) 윤승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현황과 전망: 반도체를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27권 2호, 2024.

설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을 폐지할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이렇듯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속적인 전쟁, 그리고 이란의 개입 등에 따른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며, 세계경제의 불확정성을 증가시키는 사건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자 지구의 피해는 공공시설, 학교, 도로 등 7-8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³⁾ 전쟁당사자의 엄청난 피해는 물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

경제안보는 물론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건으로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NATO의 동진에 대한 구소련 공화국의 충돌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⁴⁾ 현재 양측 간의 전쟁은 뚜렷한 성과나 승패를 도출하지 못한 채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국제질서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각각 강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관심을 분산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의 유럽-대서양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에 대응하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등을 내세우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⁵⁾ 특히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와중에 러시아 측에 1만여명의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결을 강조해 왔던 만큼, 현실적으로 미국은 종전으로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변화, 러시아-유럽의 긴장 정도 등등의 변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전환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변화 역시 뚜렷하다. 2023년 이해 북한은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궤멸’을 선언하고 있다. 2024년 2월 8일 국방성 연설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북한에게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3) 2023년 10월 7일 발생한 이 전쟁의 1년 결산을 보면,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아동사망자 1만 7019명을 포함하여 4만 2천여 명, 이스라엘의 경우 1139명 사망과 87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년, 숫자로 본 핏빛 전쟁” <중앙일보> 2024.10.7.

4)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국제질서의 변화”. 『슬라브학보』, 38권 4호. 2023. 최근의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무기는 물론 북한군 사망자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 북한이 무기지원은 물론 파병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JTBC> 2024.10.5.

5) 제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38권 4호. 2023. 695쪽.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을 “국시”로 정했으며, “동적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과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을 추진해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고”, “언제든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⁶⁾ ‘1민족 1국가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북한이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선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내부적 결속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적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0월 미국 정부가 “정권종말”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이후 한국의 북한의 핵무력의 제2사명을 결행할 수 있는 적국으로 규정하면서부터이다.⁷⁾ ‘대한민국의 궤멸’이라는 북한의 핵위협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전략의 강화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긴장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새로운 통일비전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첫 대응으로서 나온 것이 2024년 광복절기념식에서 제시된 ‘8.15 통일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이다. <8.15 통일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과 추진전략, 7대 통일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강조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일 국가에서 구성원 모두가 자유가 실현되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대결구도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연대의 강화 즉 북·중·러의 관계의 강화에 대비되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연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의 강화와 대립의 표출은 경제적, 군사적 이익의 충돌과 더불어 가치와 원칙의 대립, 즉 자유주의적 질서와 권위주의적 질서의 대립이기도 하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간 협의에 의한 공약’을 채택하면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 간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삼국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체계 등을 명시한 3개 문서가 채택되었는데, 몇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강조를 통해 그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유지를 강조한 것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삼국의 공통의 이익을 확장하고자 한 것이며, 안보는 물론 경제 및 무역 등 비전통안보에 대한 공동의 해결노력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한·미·일 삼국이 새로운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6) 하영선, 김양규.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바로 읽기: 대한민국의 궤멸 vs. 김정은 정권의 종말,” 『EAI 이슈브리핑』, 2023. 2. 3쪽.

7) 하영선, 김양규. 위의 글, 5쪽.

8) 통일부. 『8.15통일독트린 -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2024.

으로 볼 수 있다.⁹⁾

최근 일본의 수상에 새로이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총재는 미국의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 “일본의 외교정책의 장래”에서 ‘아시아판 NATO’ 창설을 주장하였다.¹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며, 또한 미국과의 핵공유와 핵무기 반입,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괌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고 한다. NATO의 경우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를 전체 회원국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종전 이후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자국 방어를 위한 전수방위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사공격이나 전쟁 개시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평화안전법제’를 개정하여 자위권의 일부를 확장하였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시게루 총리의 주장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가 필요한지에 대한 불확신, 즉 집단안보체제가 제기할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의 개입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제안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구상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시바 시게루 수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미일 군사관계가 역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새로운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을해 10월 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내용은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기존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하고, 또한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협정이 적용되는 최초 년도인 2026년 총액은 1조5192억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재협상의 가능성이 강해졌고, 한국의 분담금은 훨씬 많아질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5배 증가를 요구 - 이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 간에 체결된 한미 FTA가 트럼프 대통령 등장과 함께 재협상을 추진하여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재체결된 선례가 있

9) 박인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32권 2호, 2023. 65쪽.

10)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을 유추해보면, ‘아시아판 NATO’의 구성은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강성웅. “日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노컷뉴스> 2024.10.7.

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의 거래를 시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변화도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국제정세의 변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국가 간 연대의 변화, 다양한 안보 요소들의 등장은 2024년 한 해에 해당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특정한 요소들이 강화되거나 부침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장기적 흐름과 변화를 읽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매년 국민들과 안보전문가, 그리고 군인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조사를 진행해 왔고, 그 변화의 추이는 분석하고 안보정책 수립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항상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국제정세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제정세, 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세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달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의식 역시 대내외적 요인들의 작동에 의해 달리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러한 변화의 방향성과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고, 또한 그 변화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인과관계들을 설정해 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진행해 온 국민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안해 왔다.

이 글은 2024년 국민안보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경향이나 주목할만한 점을 중심으로 그러한 변화가 현재의 국제질서와 안보환경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2장에서 전반적인 국민 안보 의식의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과 이어서 3장에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뒤, 국민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국방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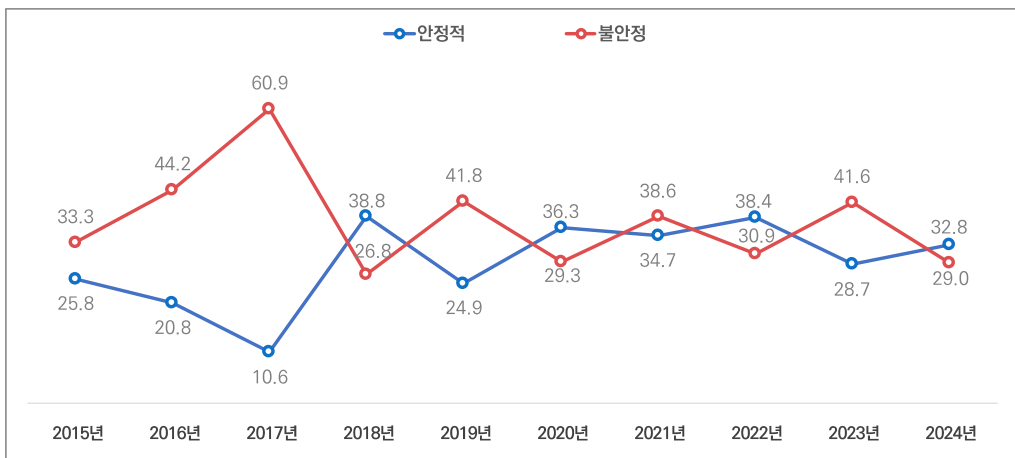
II. 국민안보의식의 변화 추세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앞서 전반적인 안보의식과 시각을 묻는 설문은 전반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의 추이는 파악하는 것은 전반적인 안보상황의 변화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식 수준

2024년 안보의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안정적(32.8%)이라고 평가하는 인식이 ‘불안정’(29.0%)하다고 평가하는 인식보다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이는 2023년의 불안정(41.6%)이라는 평가가 안정적(28.7%)이라고 보았던 수치에 비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안보상황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이 북으로부터 넘어오긴 해도 불안정하다고 볼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보문제가 앞으로 볼 것처럼, 남북한 대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갈수록 신형안보의 요소들이 중요한 위치, 즉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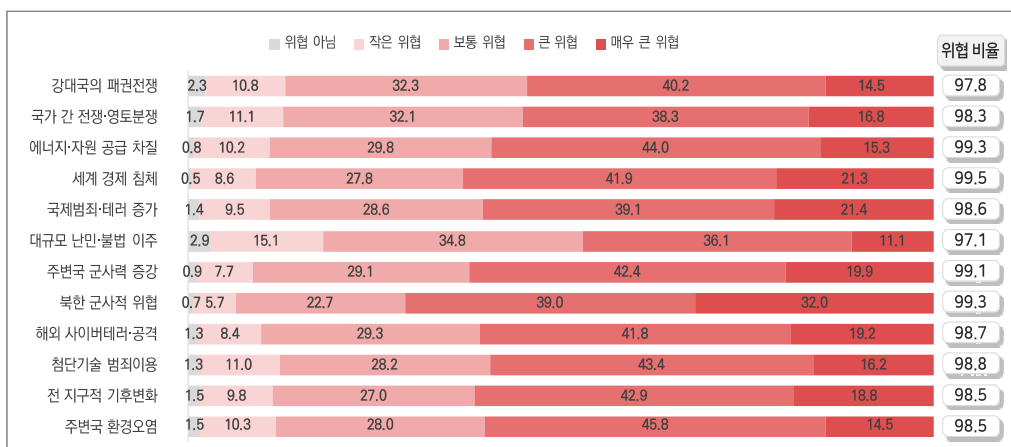
〈그림 1-1〉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 인식 변화 추이: 일반국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대외적, 대내적 요인에 대한 설문은 현재 안보와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을 반영하고 설문을 작성하였다. 〈그림 1-2〉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사결과 중의 하나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에 대한 평가에서 비록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99.3%)’과 함께 약간 높은 수치로 ‘세계경제침체’(99.5%)’를 들고 있고, 그와 함께 ‘주변국 군사력 증가’(99.1%) ‘에너지.자원공급 차질’(99.3%) 등을 선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최근 한반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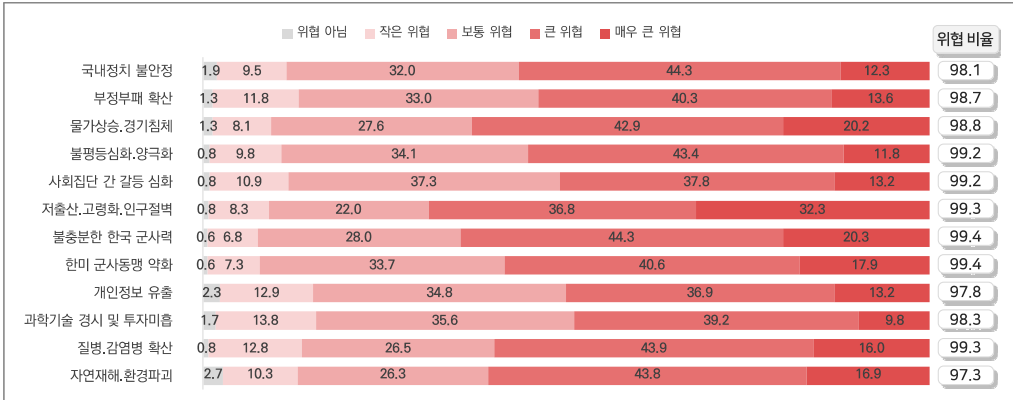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 문제 등 경제적 안보와 관련한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경험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다양한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및 원유 공급의 차질 등을 직접 경험한 2024년 한 해였다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 외에도 강대국의 패권전쟁이나 국제범죄 및 테러의 증가, 대규모 난민 및 불법이주에 대한 국민들의 위협인식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즉 최근 들어 안보의 위협 요인이 군사적 긴장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 대한 우려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안보위협요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층적이고, 새로운 안보위협요소들에 대한 인식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결과는 현재 국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의 정치사회적 갈등 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정치의 불안정, 불평등 심화 및 양극화, 부정부패, 사회집단 갈등 심화 등,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절벽 등의 요인,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환경파괴, 감염병 확산 등의 요인, 군사적 요인으로 한국 군사력의 불충분 및 한미군사동맹 약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등이 고르게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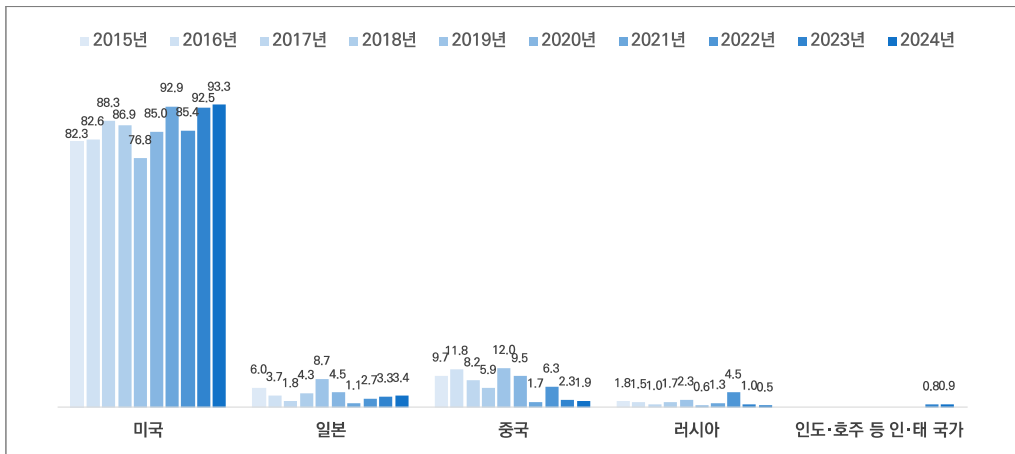
2. 주변국에 대한 인식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미국’을 선택한 국민들의 수치는 변함없이 1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최근 경향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4〉). 2024년에 미국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비율은 2015년에 비하여 11%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즉 2015년 대비 2024년은 7.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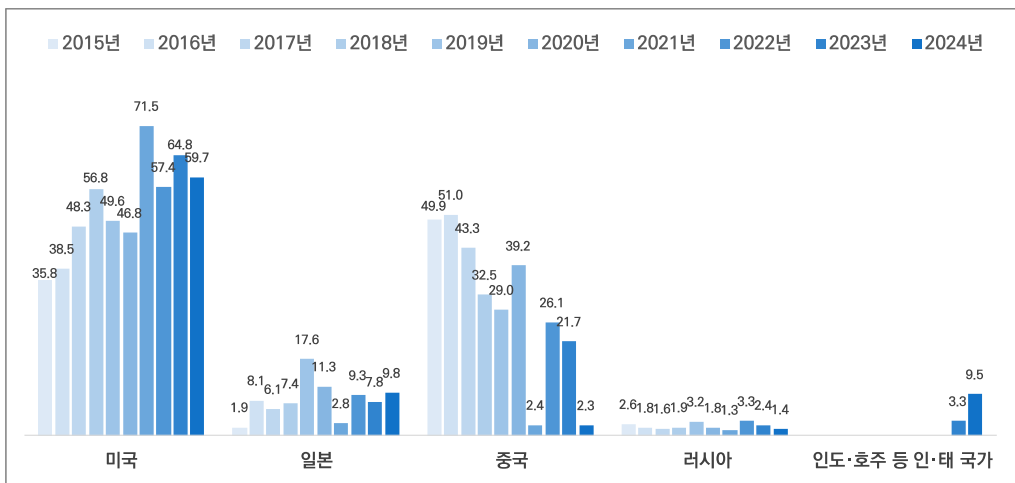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의 비율이 변화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이 경향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우하향 추세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그림 1-5〉 참조). 즉 미국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은 2015년 대비 2024년에 23.9% 증가하였고, 중국의 중요도는 같은 시기 비교했을 때, 29.6% 감소하였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또한 코로나 19 이후 중국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리두기가 실현되고, 공급망이나 원자재 등의 수출입 경로의 다변화에 성공한 한국경제가 오히려 안정적이 되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와 함께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점 중의 하나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인도, 호주 등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예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의 폐쇄적인 모습이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수출입 국가의 다각화라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동남아, 인도, 태평양 국가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4〉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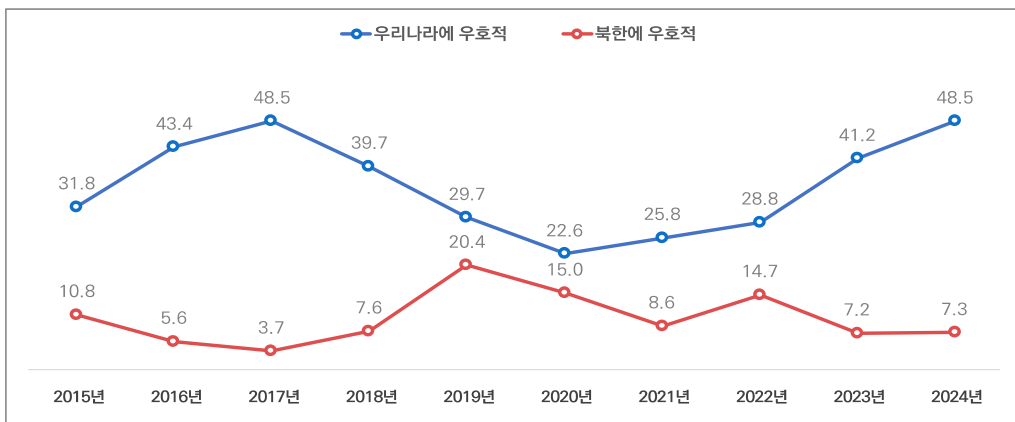
〈그림 1-5〉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 일반국민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시 주변국의 태도와 관련한 설문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일반 국민은 90.8%이고, 전문가는 98.0%였다는 점은 가능한 범위 내의 차이일 수 있다. 하지만, 위기발생 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일반국민 비율은 48.5%인 반면에 전문가는 73.0%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대한 기대치의 상당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일반국민 사이에서의 반일감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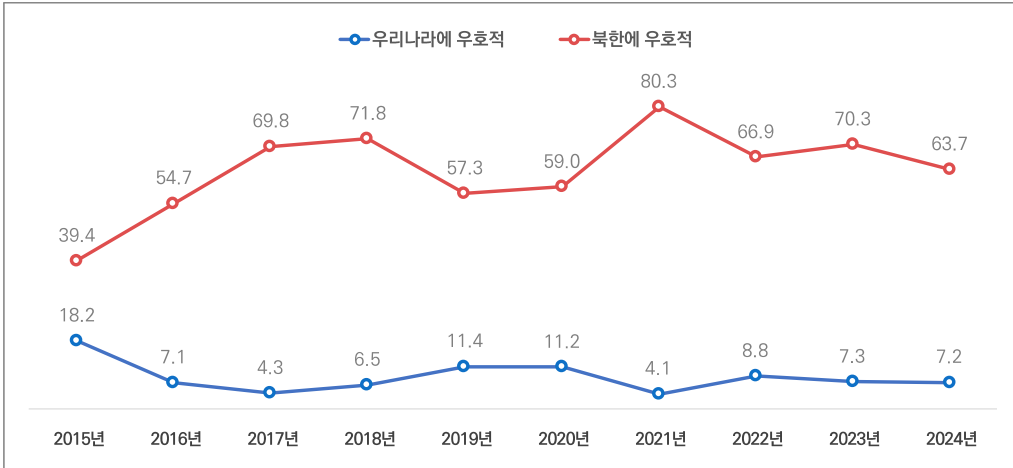
〈그림 1-6〉은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변화를 연도별로 비교해 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면, 일본에 대한 반응은 정권의 시기에 따라 상당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즉 박근혜 정권 말기에 40%를 상회했던 일본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20%로 하락하다가, 다시 현정부 들어서 한일 외교의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40%대로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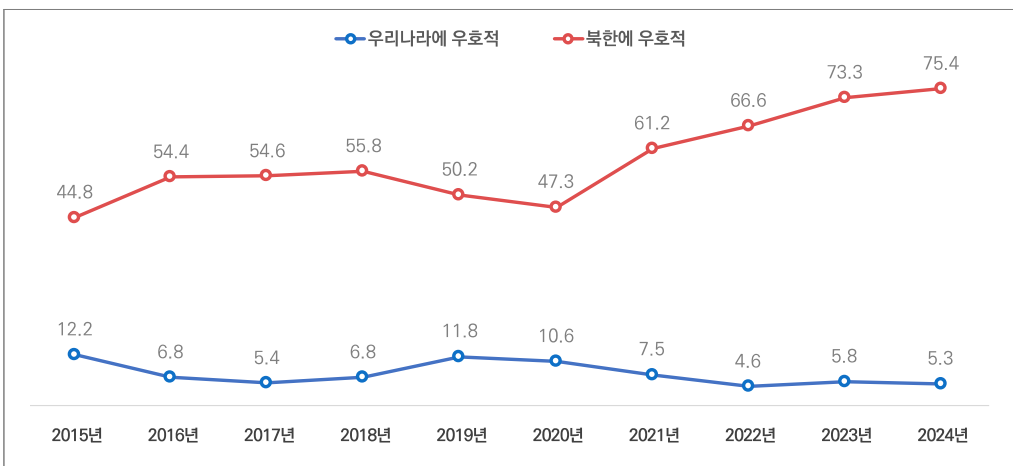
이와 대비되어 〈그림 1-7〉이 보여주고 있듯이,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중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2015년 대비 2024년에는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3%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1.0% 감소하였다. 일본에 대한 우호적 답변이 증가한 반면에, 중국에 대한 우호적 답변은 뚜렷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중국의 태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그림 1-8〉은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러시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돈독해 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이다. 즉 2015년 대비하여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6% 증가하여 75.4%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 감소하여 5.3%에 그치고 있다.

〈그림 1-8〉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러시아의 태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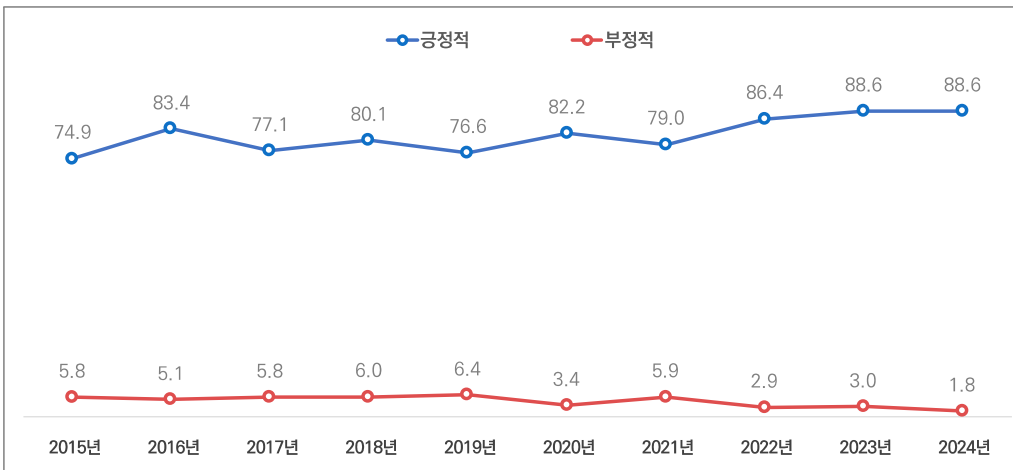


위기발생 시 중국의 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는 큰 변화가 없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다양한 수준에서 친밀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반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2024년 조사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긍정적’ 이라는 답변이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국민은 88.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전문가는 85.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이라는 답변의 경우 일반국민은 1.2%가, 전문가는 8.0%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여기서 전문가의 답변에서 ‘부정적’이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미국의 군사대국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9〉가 보여주고 있듯이,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앞선 설문과 유사한 경향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88.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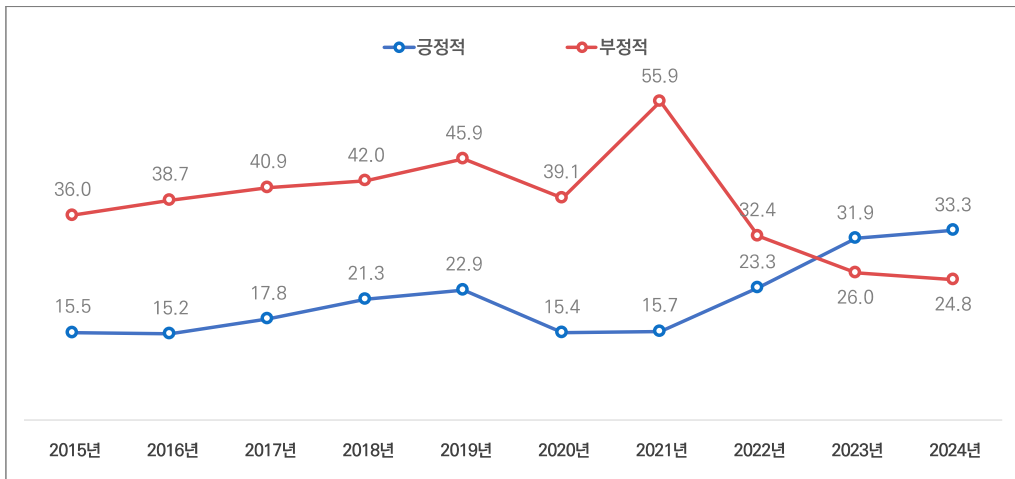
〈그림 1-9〉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그림 1-10〉은 일본의 군사력 증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국민의 평가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앞서 한반도 위기 발생시 일본의 태도에 대한 기대를 물었을 때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

다 항상 우위를 점해왔지만, 2023년부터 역전이 발생하였다. 즉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1.9%와 부정적 평가가 26.0%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3.3%,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24.8%로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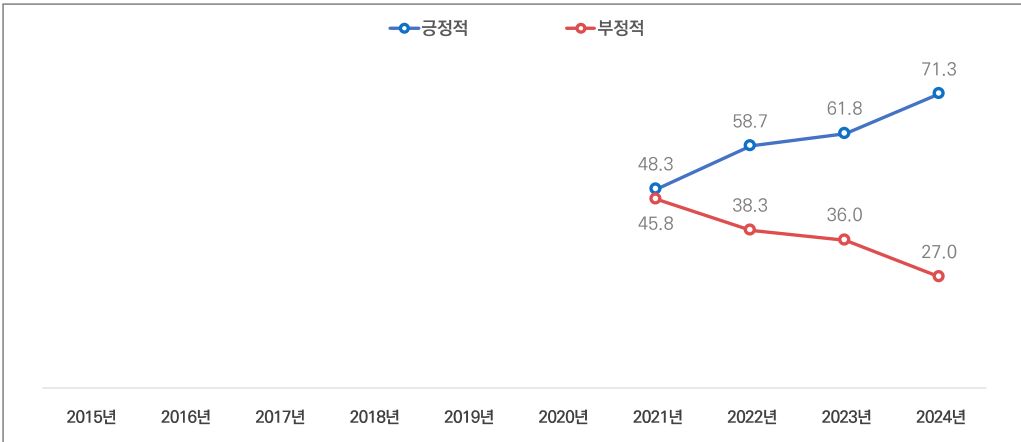
〈그림 1-10〉 일본의 군사력 증가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3.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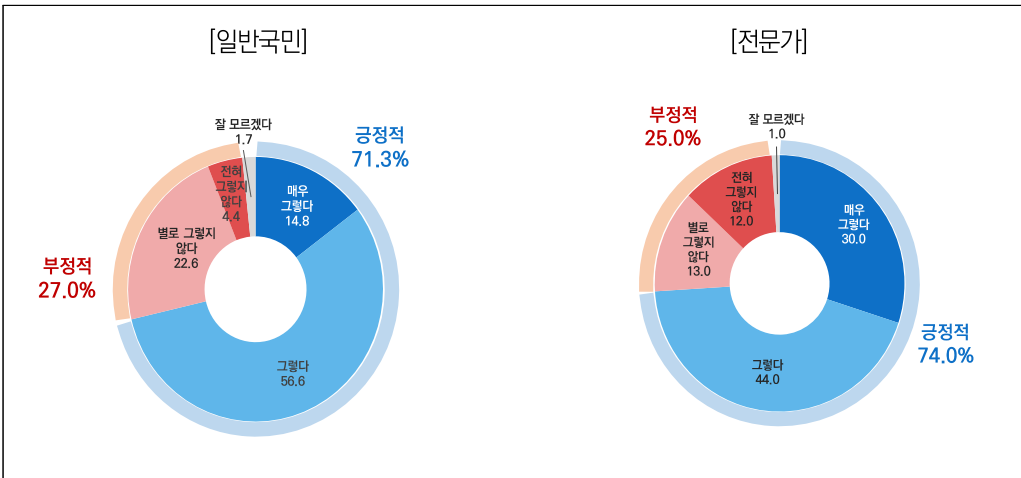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변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설문에도 반영된다.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설문 문항이 2021년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11〉 참조).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의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그림 1-12〉 참조).

〈그림 1-11〉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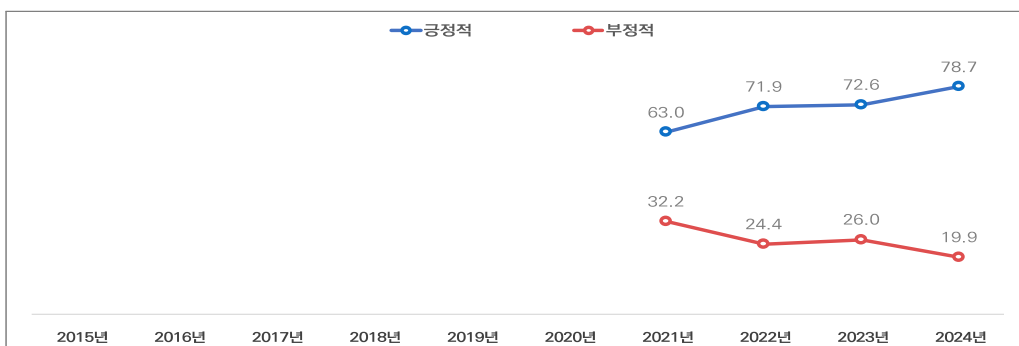
〈그림 1-12〉 한·일 양국 간 군사안보 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



그와 더불어 〈그림 1-13〉이 보여주고 있듯이,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 역시 긍정적 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이 성과없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대북관련 압박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 집단이 긍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3〉 한·미·일 3개국의 대북 관련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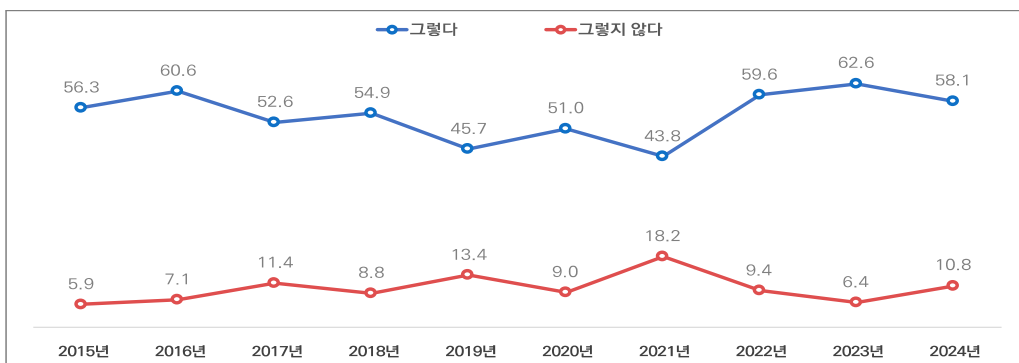
Ⅲ. 한미동맹 인식 변화

1. 한미동맹의 견고성과 한미동맹의 저해요인

윤석열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한미군사훈련의 강화는 물론 다양한 수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반국민들 역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높은 경향의 답변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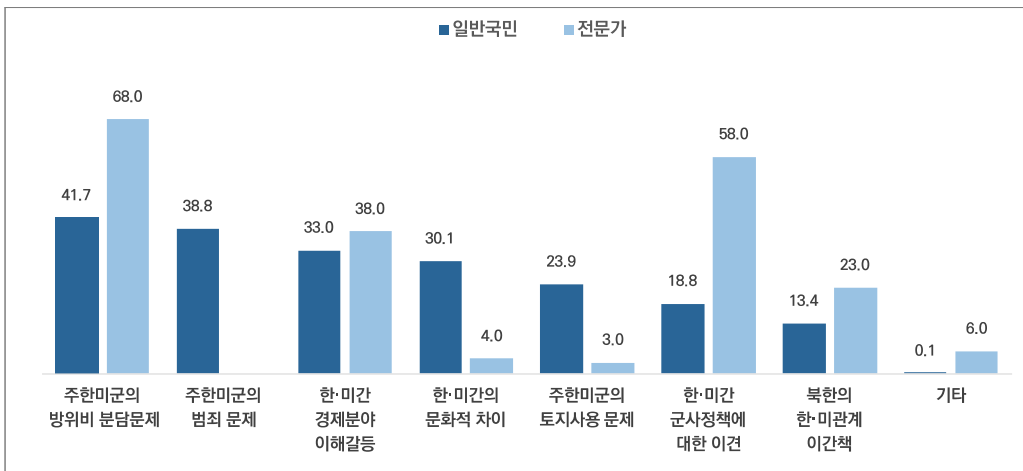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의 연도별 추이는 〈그림 1-14〉이 보여주고 있다. 비록 2024년의 답변이 지난 최근 2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4〉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함 정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한미동맹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 발전의 저해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41.7%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문제’라고 답변하였고, 전문가들은 68.0%가 방위비분담문제를 요인으로 들었다(〈그림 1-15〉 참조). 그 다음 순위는 일반국민들은 ‘주한미군 범죄문제’(38.8%)를 요인으로 꼽은 반면에 전문가들은 ‘한미간 군사정책에 대한 이견’(58.0%)를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느끼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경우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15〉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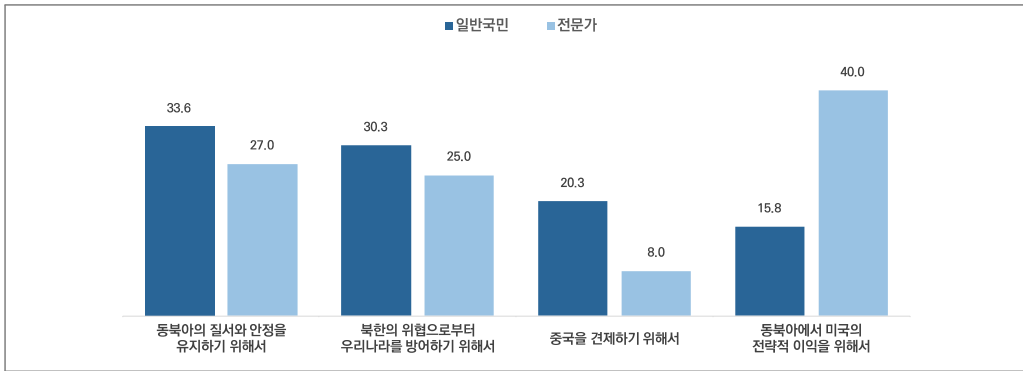


2.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하여 한반도에 주둔하여 왔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6.25 한국전쟁 이후 전쟁이 더 이상 발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지력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 결과에 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그림 1-16〉이 보여주고 있듯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40.0%에 이르지만, 일반 국민에 그러한 이유는 15.8%만이 응답하였고, 대신에 일반국민들은 “동북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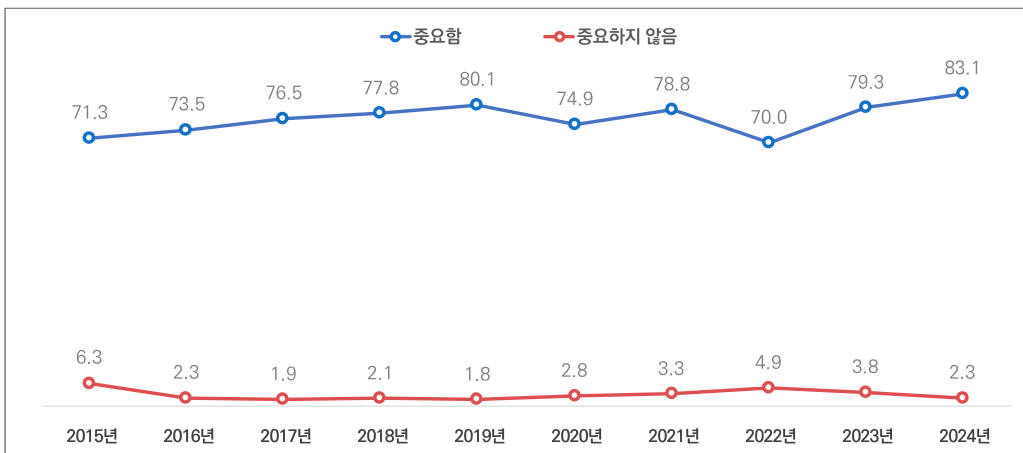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 및 현실주의적 이익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6〉 주한미군 주둔 이유



〈그림 1-17〉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큰 변화의 폭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점점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7〉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일반국민 연도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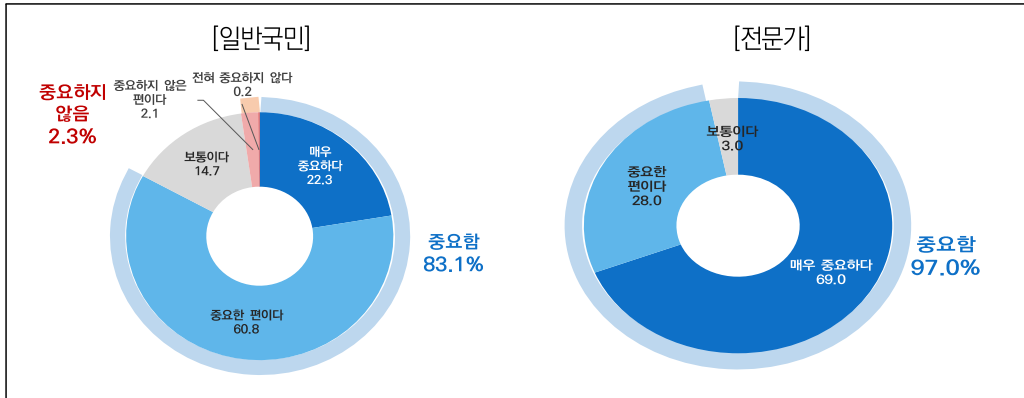


또한 〈그림 1-18〉이 보여주고 있듯이, 국민들의 경우 83.1%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면, 전문가들의 경우 97.0%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사안이다. 전문가들

의 경우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 세력균형이나, 중국의 확장, 북한의 핵실험 및 핵 투발 수단
의 진화 등을 평가하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아
주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18〉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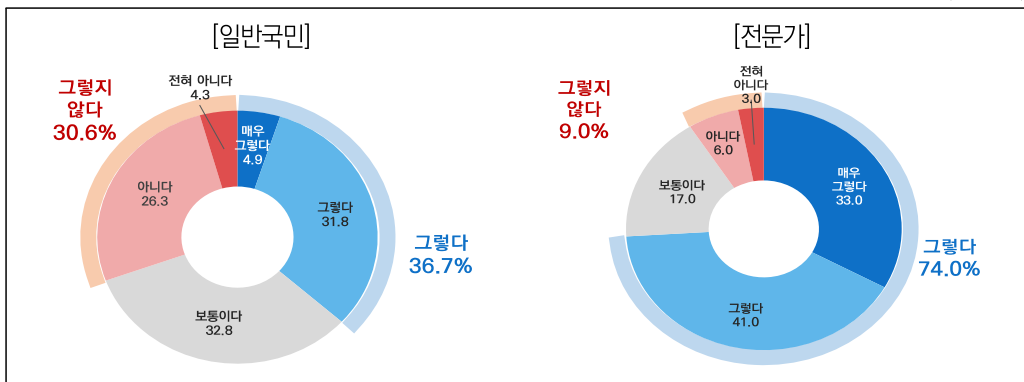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1-19〉가 보여주고 있듯이, 일반 국민은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의 절감에 대
해서는 ‘그렇다’라는 답변은 36.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긍정 답변 74.0%
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림 1-19〉 주한미군 관련 의견: 주한미군으로 인한 안보비용 절약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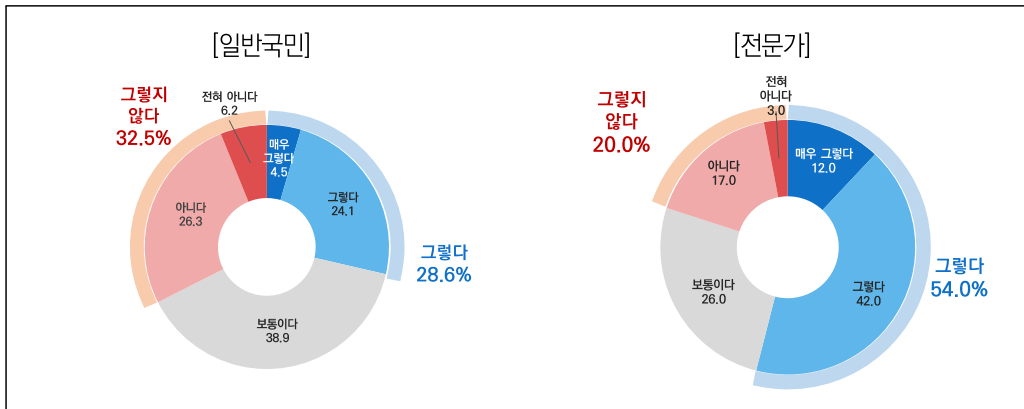
(단위: %)



일반 국민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가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28.6%만이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54.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일반국민은 32.5%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으며, 동일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0.0%에 그치고 있다(〈그림 1-20〉 참조).

〈그림 1-20〉 주한미군 관련 의견: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적절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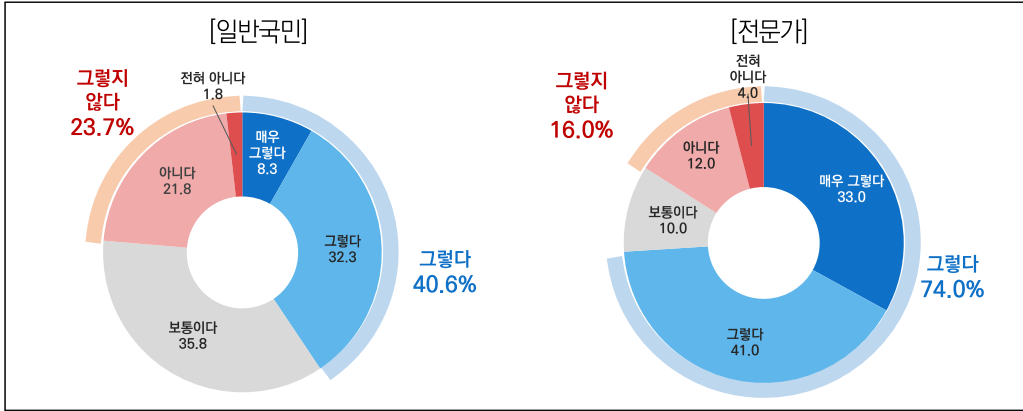


주한미군에 대한 이중적 입장, 즉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주둔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위를 차지하는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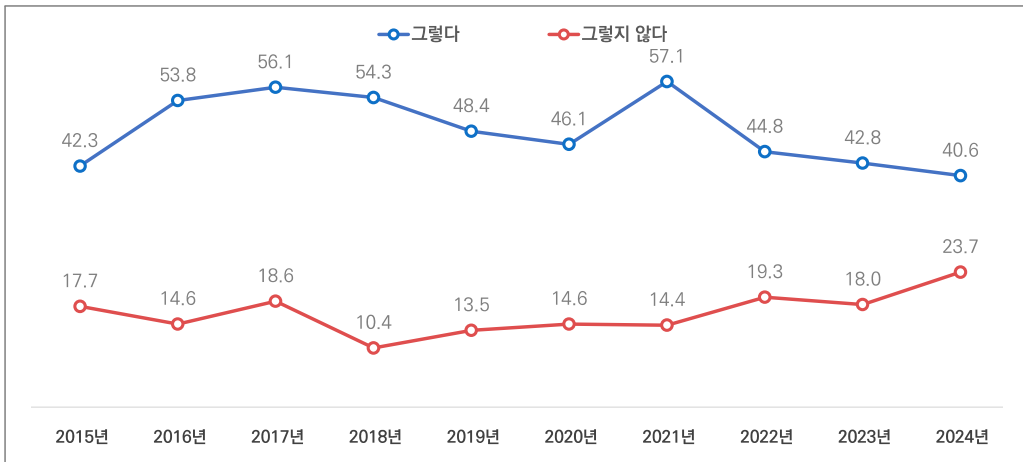
〈그림 1-21〉은 주한미군이 감축 시 한국군의 전쟁도발 능력이 감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일반 국민의 비율은 40.6%, 전문가들의 경우 74.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그림 1-22〉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주한미군의 감축시 한국군의 전쟁도발 억제능력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1〉 주한미군 관련 의견: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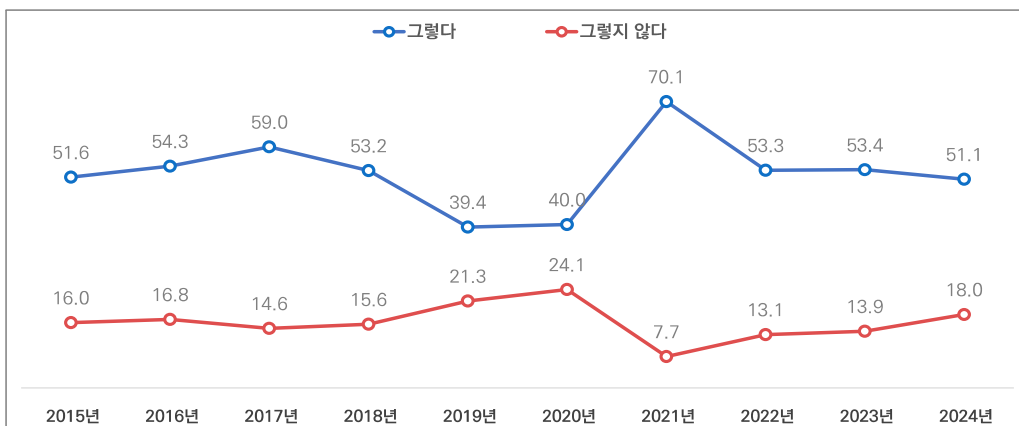


〈그림 1-22〉 주한미군 관련 의견-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전쟁도발 억제능력 감소 정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그리고 〈그림 1-23〉은 주한미군이 철수 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일반국민의 비율은 51.1%에 그친 반면에 전문가들은 85.0%가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즉 여전히 일반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3〉 주한미군 관련 의견: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정세 불안정 정도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이러한 견해 차이와 일반 국민들의 견해의 변화는 정보의 제한성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전장의 변화 및 무기체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6.25 한국전쟁과 같은 근접전이나 병력이 총동원되는 방식이 전쟁보다는 다양한 원거리 무기,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물론 초음속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운용이 최근의 전장의 모습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군이 갖는 전쟁역지력은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3.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현 정부 들어서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은 지난 정부 시절의 감소분을 충분히 회복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기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코로나 19의 창궐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은 상반기 연합훈련에서는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전구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우주군과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한 다영역적 위협에 대한 대비훈련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행하였다.¹¹⁾ 그리고 2024년 8월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UFS)로 명명된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합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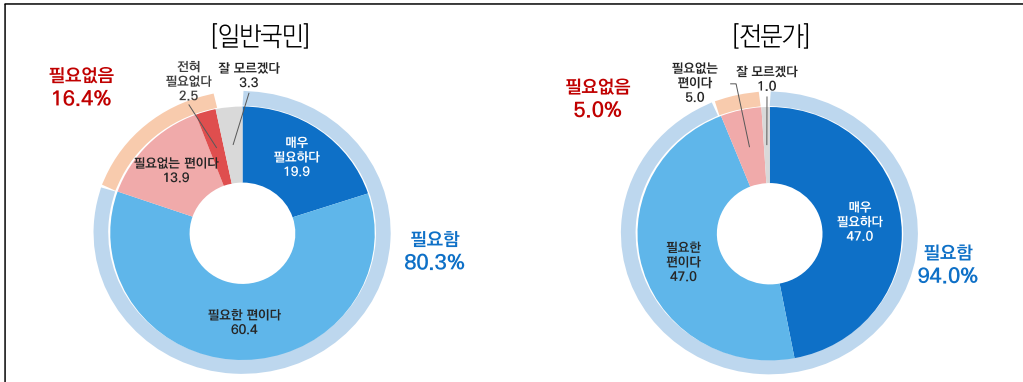
11) 이상범,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2023』,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문제연구소, p.47.

행하고, “핵기반동맹”으로 격상된 한미의 일체형 확장 억제 재확인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의 참여도 확인되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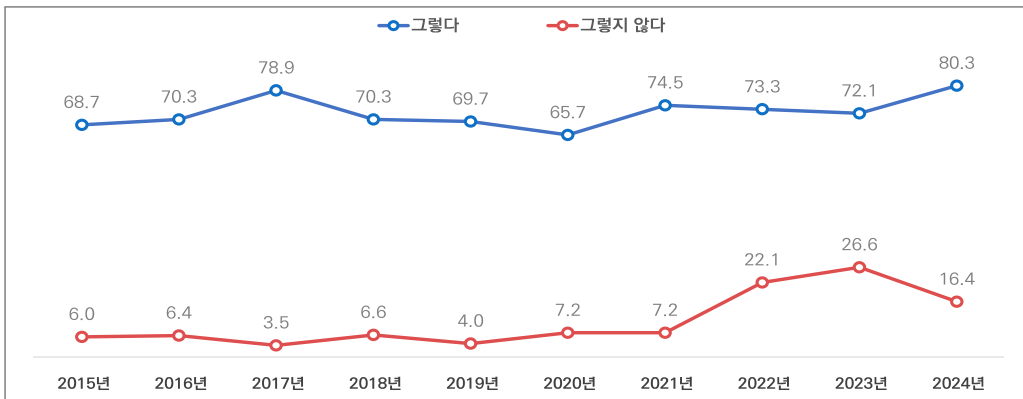
한미동맹이 일정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4.5%, ‘필여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인 반면에, 일반국민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3%에 그치고,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그림 1-24〉 참조). 하지만, 〈그림 1-25〉가 보여주고 있듯이, 한미연합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은 경향적으로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남북의 긴장이나 북한의 도발적 태도로 인한 긴장 조성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4〉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단위: %)



〈그림 1-25〉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필요성: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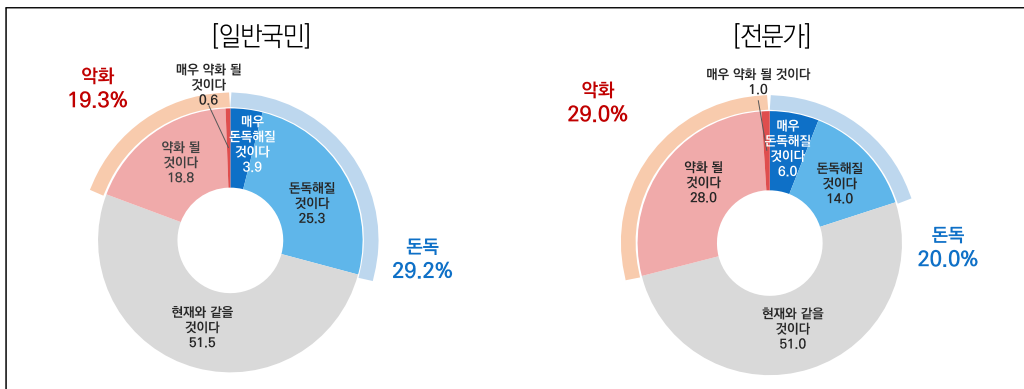


12) 이성훈, 김보미, “8월 한미연합훈련(UFS) 시행의 의미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58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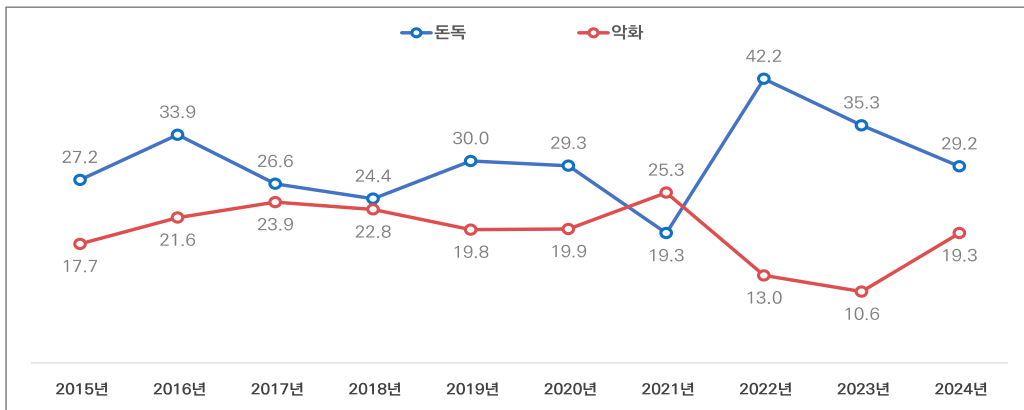
〈그림 1-26〉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국민들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변화에 대해 ‘돈독’하다는 응답이 29.2%로 ‘약화’(19.3%)라는 응답보다 9.9%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 ‘약화’라는 응답이 29.0%로 ‘돈독’(20.0%)라는 응답보다 9.0%p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단위: %)



〈그림 1-2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그림 1-27〉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동맹의 관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2023년 대비 ‘돈독’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p (2023년

35.3%) 감소했으며, ‘약화’는 8.7%p (2023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정책 대안 모색

1.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식

2020년부터 코로나 19의 창궐이 3여년간 지속되고, 기후변화의 위기에 따른 다양한 환경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분쟁 등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그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의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즉 북한이나 한반도 주변의 긴장만을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다양한 경제적 위협들, 즉 반도체 등의 공급망 위기, 에너지 자원 확보의 문제, 다양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인구절벽,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경제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병력 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 이른바 비전통적 안보 혹은 신흥안보라는 개념이 더욱 더 중요성을 갖고 등장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이나 안보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각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인식과 그것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실에 ‘경제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대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안보’의 측면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사후적 대처를 넘어서 적극적 전망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들어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협요인이다. 사드 위기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듯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공급망은 물론 수출다변화 등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가치공유국을 넘어서 이익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접근은 불가피하다.

2. 한반도 주변국 인식

최근의 변화하는 안보문제의 복잡성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변화도 주목할만하다.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안보와 관련하여서는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사드 사태 이후 연속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우호적’이라는 답변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도 있고, 또한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한미일 관계 역시 우호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시 러시아가 북한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반응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상승하면서 2023년부터 ‘부정적’이라는 답변을 넘어서고 있다. 나아가 한일 양국 간의 군사안보 협력에 대해 일반국민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고,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북중러의 친밀성이 증대하고 있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우호적인 입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측면을 물론이거니와 군사협력에 있어서도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과 서구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더리스크링(de-risking)’ 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수출을 제한하며, 중국 시장과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³⁾ 이 정책은 전면적인 탈중국화라기 보다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함으로써 공급망, 첨단기술, 군사안보 영역 등에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일 관계는 군사안보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가치와 이념의 측면 등 다각적인 연결고리를 공고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북아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을 억지하는데 미국의 일정한 역할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현재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

13) 정덕구 외,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잡성과 새로운 균형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3-37, 2024, 36쪽.

의 경제적 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판NATO’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는 아시아판 NATO의 예상 회원국일 수 있는 필리핀, 호주 등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상 회원국들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적에 대한 충분한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신뢰의 조성이라는 전제조건들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동아시아 안보협력에서 어떠한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등장할 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 북한 변수는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화성 19형 ICBM의 성공이 고체연료 미사일로의 세대교체와 다탄두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단계는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가능성, 특히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한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새로운 대화 재개의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 또한 열려 있으며, 이는 러시아-북한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 전환 역시 가능할 수 있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전혀 다른 정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3. 한미동맹 인식변화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적시한 최초의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은 양국 최고 리더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핵협의그룹회(NCG)을 통한 핵전략 기회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가시성 확대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 동맹으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2024년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히 공동 대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한반도 핵작전 지침〉을 추인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¹⁴⁾

최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하는 등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돈독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안보 협력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정부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라는 측면도 있고,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 즉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따른 반향의 측면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의 당선은 이러한 기류에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조기종결 가능성,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동북아 안정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노력의 필요성 등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겠지만, 미국에 의한 가시적인 이익의 요구,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의 가능성은 농후하다.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모두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한미동맹 관계 발전의 저해요인 중 1순위로 꼽는 사안이다. 하지만 새로이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협상 결과를 일종의 '행정협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1기만큼 강경 일변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 주둔군 분담금 문제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재협상의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한미연합 훈련, 미군주둔, 미군의 전략자산 등등의 문제가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한미연합 훈련이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의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분명하고, 또한 점점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지만 또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갈수록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백선우, 이성훈, "NCG 제3차 회의의 의미 및 향후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573호> 2024.7.17.

참고문헌

- 강성웅. “日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노컷뉴스> 2024. 10. 7.
- 김성진.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국제질서의 변화,” 『슬라브학보』. 38권 4호.
- 박인휘. 2023.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32권 2호.
- 백선우, 이성훈. 2024. “NCG 제3차 회의의 의미 및 향후 정책과제,” <이슈브리프 57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유상범. 2023.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변화와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2023 국민안보 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연구 2023』.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윤승환. 2024.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현황과 전망: 반도체를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27권 2호.
- 이성훈, 김보미. 2024. “8월 한미연합훈련(UFS) 시행의 의미 및 시사점,” <이슈브리프 58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정덕구, 강준영, 장영희, 변정아, 유다인. 2024. 『시진핑 신시대 한미중 삼각관계의 복잡성과 새로운 균형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3-37.
- 제성훈.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반도: 세계질서, 안보딜레마, 정체성,” 『슬라브학보』. 38권 4호.
- 중앙일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년, 숫자로 본 핏빛 전쟁,” 2024. 10. 7.
- 통일부. 2014. 『8.15통일독트린-자유 평화 변영의 통일 대한민국』.
- 하영선, 김양규. 2023.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바로 읽기: 대한민국의 궤멸vs. 김정은 정권의 종말,” 『EAI 이슈브리핑』.
- 홍규덕. 2020. “비전통적 안보의 재조명: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방정책연구』. 통권 129호.

국민의 대북 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김 병 조*

- I. 서론
- II. 국민 대북인식 변화 분석
- III. 정책제언: 국방정책 추진 방향

요약문

2023년 북한의 남북관계를 재정의하고 대남정책 전환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정책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1)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3) 한국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4)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북한 정권(북한군 포함)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수 위협대상, 소수 협력대상, 극소수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협력대상, 지원대상, 위협대상 등 다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위협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다. 2024년 조사를 2023년 조사

*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와 비교하면,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 정권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강화는 정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변화로 보고, 북한 주민에게는 아직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대남강경책이 북한 대남강경책이 무력도발 가능성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내세울 때,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이 잦았다. 북한의 대남강경책 시기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우위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북한의 핵심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이 가장 심각한 대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에 북한은 민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이유로 오물풍선을 빈번하게 날려 보내고 있다. 과반수 국민이 오물풍선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같은 기존 방식은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의견이 크게 갈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책이 자칫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핵무기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낮은 수준의 비전통적인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국방정책에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

셋째,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화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기초로 하되, 외교와 남북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인이 다양한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은 자칫 특정 정책만 고집하면 남남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북 군사정책도 포괄적인 안보전략 기초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국민은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등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는 시기에는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상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넷째, 남북한 통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기 바라는 국민이 다수이다.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변화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 한편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통일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이 다소 있었다. 일반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역설적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통일비용을 준비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통일이 국가이익 및 개인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일반국민은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 ‘통일이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모두 줄고 있다. 반면, 전문가는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변함없이 압도적인 의견을 차지하고,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도 많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 해당한다.

통일방식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 북한체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북한은 동일민족으로 통일의 대상이며 남북한 통합의 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참여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지만, 동시에 대결과 충돌을 고려한 정책을 편다.

그리고 북한은 대남정책으로 온건과 강경을 반복한다. 북한이 대남정책이 변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양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이 온탕 냉탕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변한다. 정부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일관된 대북정책을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의 의견을 중시한다. 협력과 대결이라는 남북한 간의 이중적 관계 속에서 국민의 대북인식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결과 대북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남남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북정책, 변화하는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국민의 대북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1) 대북위협 인식은 제한적 재강화, (2)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 지속, (3) 통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줄어들고 흡수통일보다는 안정적인 공존을 지지한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다(안경모, 2020).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식이 분화되어있음도 알 수 있는 데, 대북인식에서는 위협대상과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으로 나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의견과 불안정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한국이 우월함이 증명되자 북한 주민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증가하고, 엘리트층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 일부는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한다. 이에 김정은 북한 정권은 한국과 관계 맺기를 주저하면서, 경제 희생과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는 경제·핵병진 노선을 추진한다.

김정은 정권에서 핵무기 개발은 자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경제발전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다. 김정은은 대북제재가 경제발전을 만든다고 평가하고 2018년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고 대북 경제제재 해소를 목표로 북미회담을 시도한다. 그러나 2019년 봄에 개최된 하노이 북미회담이 실패하면서, 북한 정권은 2019년 말 자력갱생은 원칙으로 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다.

2020년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강경책 일변으로 치달게 된다. 그리고, 2023년 북한의 남북관계를 재정의하고 대남정책 전환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그동안 남북한 간에 존재했던 연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접경지역 남북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편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정책이 크게 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024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2023년에 비해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적합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에 활용된 질문의 범주를 준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1)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3) 한국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4)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II. 국민 대북인식 변화분석

1. 북한에 대한 인식

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한국인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을 때, ‘북한’이라는 용어에서 무엇을 떠오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다. 남북한은 5000년 역사를 함께 한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상잔 비극인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머물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남북관계에대한 법률』, 2005년 12월 29일 제정, 법률 제7763호).

‘북한’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다양한 인식 편차는 탈냉전 시대에 보다 확대되었다. 스미스(Hezel Smith, 2000)는 외부에서 북한을 ‘나쁜(bad),’ ‘미친(mad),’ ‘불쌍한(sad),’ 그리고 ‘합리적인(rational)’ 행위자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스미스가 제시한 북한 인식의 다양성은 한국인의 대북인식 특성 분석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 논의에서 간과한 것은, 스미스는 북한을 단일 행위자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에서 특정 국가를 분석할 때, 단일 행위자인 것처럼 간주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내정치를 고려하여 특정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보면, 단일 행위자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북한의 경우 단순화하면 행위자는 북한정권(북한군 포함)과 북한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행위자가 단일 행위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표 2-1〉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북한정권(북한군 포함)’과 ‘북한주민’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1〉 북한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및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북한정권	북한주민	북한정권	북한주민
위협대상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63.6	24.1	87.0	6.0
협력대상 (힘을합쳐 협력해야할 대상)	24.8	33.8	10.0	33.0
지원대상 (도와주어야할 대상)	6.8	31.5	1.0	57.0
잘 모르겠다	4.8	10.6	2.0	4.0
계	100.0	100.0	100.0	100.0

일반국민은 북한 정권에 대해 2/3에 가까운 63.6%가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이어서 1/4 정도인 24.8%가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 정권을 지원대상을 보는 경우는 4.8%로 매우 적다. 일반국민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다수 위협대상, 소수 협력대상, 그리고 극소수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문가는 북한정권에 대해 압도적 다수인 87%가 위협대상으로 보고, 일부가 협력대상으로 본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비교하면 전문가의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국민보다 적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국민을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북한 정권을 위협적이라고 보는 인식이 높은 집단은 지역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지역이며, 직업별로는 일반노무직에서, 그리고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었다.¹⁾

한편, 일반국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협력대상(33.8%), 지원대상(31.5%), 위협대상(24.2%) 등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일반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협력대상, 지원대상, 위협대상이 섞인 상태로 매우 다원적이다. 반면에 전문가는 북한 주민에 대해 과반수 57%가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고, 1/3인 33%가 협력대상으로 인식한다. 북한주민을 위협대상을 보는 전문가는 매우 적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비교하면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북한주민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국민 하위집단 중에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북한주민을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북한주민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농업과 무직/휴직/은퇴에서 북한주민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1)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도 표본 수가 적은 경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하 하위집단에 대한 분석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북한 김정은은 2023년 총화(결산) 회의 시정연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2023.12.26~30)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통일노선’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2024년을 시작하는 회의 시정연설(최고인민회의 제14차 회의, 2024.1.15.)에서는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영역에서…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접경지역 남북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남북한 간에 군사 대립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세운다. 2024년에 10월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 구체적인 군사 충돌은 없지만,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거듭해왔다.

〈표 2-2〉는 2023년과 2024년 일반국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정권이 위협대상이라는 인식은 57.0%에서 63.6%로 6.6%p 증가하였고, 반대로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30.9%에서 24.8%로 6.1%p 감소하였다. 일반국민의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에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협력인식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북한주민이 위협대상이라는 인식은 2023년 23.2%, 2024년 24.1%로 거의 같다. 북한주민이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37.1%에서 33.8%로 조금 낮아졌지만, 북한주민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27.8%에서 31.5%로 오히려 조금 증가하였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이라고 재정의하고 관련된 행태를 보이면서, 한국인들의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인은 한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정책이 북한 정권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정권의 대남 적대 정책이 강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오히려 2024년에 증가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북한체제이탈 및 한국입국이 북한주민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다.²⁾

2)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이일규참사이다. 이일규 참사는 2023년 11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하였고, 2024년에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서 이일규 참사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김정은의 통일정책 폐기가 북한주민에게 원망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표 2-2〉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 2023년~2024년 일반국민 (%)

	북한정권		북한주민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위협대상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대상)	57.0	63.6	23.2	24.1
협력대상 (힘을합쳐 협력해야할 대상)	30.9	24.8	37.1	33.8
지원대상 (도와주어야할 대상)	7.1	6.8	27.8	31.5
잘 모르겠다	5.0	4.8	12.0	10.6
계	100.0	100.0	100.0	100.0

나. 북한체제 안정성과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재정의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향후 5년 내에 북한(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표 2-3〉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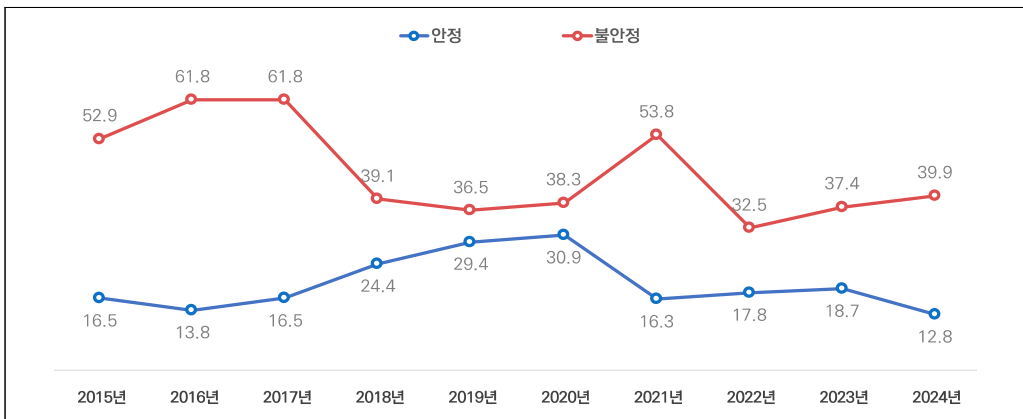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체제가 ‘안정’하다는 의견이 2023년 18.7%에서 2024년 12.8%로 5.9%p 줄어들고, 대신 ‘현재와 비슷’하다가 2.4%p, ‘불안정’하다가 2.5%p 증가하였다. 일반국민은 북한이 대남정책변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정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안정’하다는 의견이 2023년 16.0%에서 2024년 18.0%로 약간 증가한다. 그러나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2023년 26.0%에서 2024년 33.0%로 9.0% 증가한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북한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지만,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북한체제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다.

〈표 2-3〉 북한(김정은) 체제전망: 2023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안정(매우 안정적+안정적)	18.7	12.8	16.0	18.0
현재와 비슷	43.9	47.3	58.0	49.0
불안정(불안정+매우 불안정)	37.4	39.9	26.0	33.0
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2-1〉 북한(김정은 체제) 전망: 일반국민 연도별 비교 (%)



〈그림 2-1〉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시계열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국민은 북한체제에 대해 안정적이라기보다 불안정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점을 알려준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는 등 온건한 대남정책을 펼 때는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낮아졌다가, 핵실험 등 대남강경책으로 나오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높아진다. 결국, 한국인은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펴는 것은 북한체제가 불안한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석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보면,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펴는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면서 북한 내부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4〉는 김정은 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2023년과 2024년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2024년에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없어져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2023년에는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33.8%)’는 의견이 ‘낮다(27.6%)’보다 많았으나, 2024년에는 ‘높다(46.2%)’보다 ‘낮다

(53.8%)’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는 2023년에는 ‘높다(35.0%)’보다 ‘낮다(43.0%)’가 많았지만, 2024년에는 ‘높다(53.0%)’가 ‘낮다(47.0%)’보다 많다.

〈표 2-4〉 김정은 체제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2023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높다(매우 높다+높다)	33.8	46.2	35.0	53.0
보통이다	38.7	-	22.0	-
낮다(낮다+매우 낮다)	27.6	53.8	43.0	47.0
계	100.0	100.0	100.0	100.0

북한이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반국민이 북한정권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늘어났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북한정권이 남북한관계를 재정의한 이유가 북한 체제 내부 불안을 수습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지 않고, 체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일반국민보다 북한정권을 위협대상이라고 보는 보는 인식이 높은 전문가는 북한의 대남 강경책이 북한체제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반국민과 유사하지만, 북한체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달리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어느 것이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내세울 때, 한국에 대해 잦은 무력도발이 존재했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은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펴는 시기에 북한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일반국민과 한국군 사이에 부분적인 인식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남강경책 시기에 북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가) 북한 군사위협 평가

한국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024년도의 경우 일반국민의 71.0%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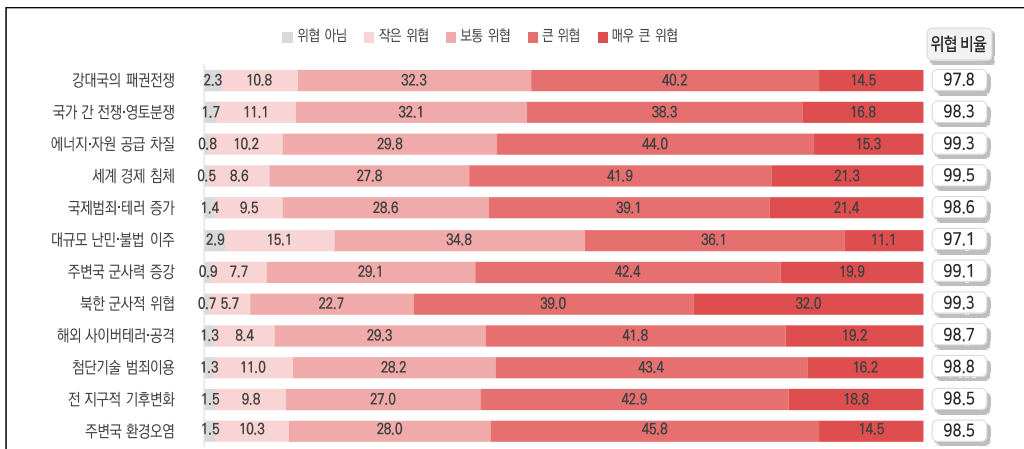
한국 안보에 큰 위협(매우 큰 위협+큰 위협)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전문가는 87.0%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매우 큰 위협+큰 위협)이라고 평가한다(〈표 2-5〉 참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북한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매우 큰 위협+큰 위협)이라는 인식은 일반국민이 67.6%, 72.9%, 71.0%이며, 전문가는 80.0% 89.0%, 87.0%로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여타 대외 안보위협 요인과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나타난다.

〈표 2-5〉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적 요인: 2024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큰 위협(매우 큰+큰)	67.6	72.9	71.0	80.0	89.0	87.0
매우 큰 위협	22.0	31.8	32.0	49.0	52.0	60.0
큰 위협	45.6	41.1	39.0	31.0	37.0	27.0
보통 위협	24.6	20.8	22.7	19.0	8.0	12.0
작은 위협	7.3	5.8	5.7	1.0	3.0	1.0
위협 아님	0.6	0.5	0.7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2-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외요인: 2024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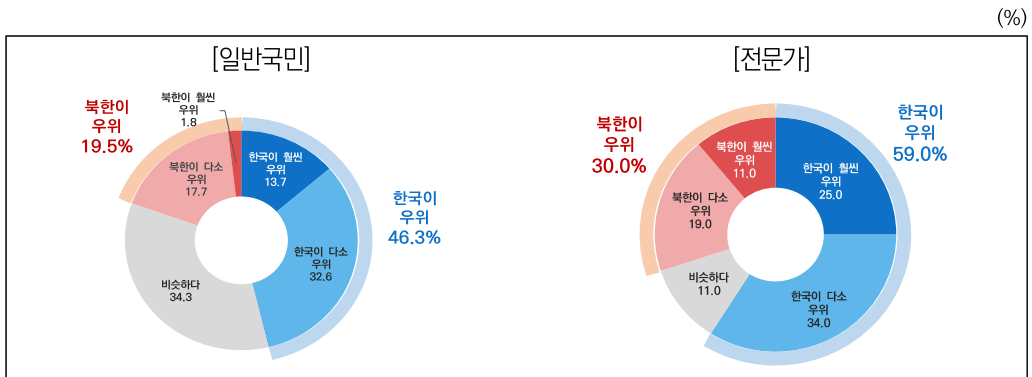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12개 대외 안보위협요인 중에서, 일반국민은 32%가 '북한 군사적 위협'을 한국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으며, 북한 군사적

위협을 제외한 다른 대외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이라는 평가는 모두 25% 미만이다. 위협의 정도를 ‘큰 위협(매우 큰 위협+큰 위협)’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큰 위협(매우 큰 위협+큰 위협)’이라는 평가가 71.0%이지만, 여타 대외 안보위협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평가는 최대가 63.2%(세계경제 침체)에 불과하다. 한국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외 안보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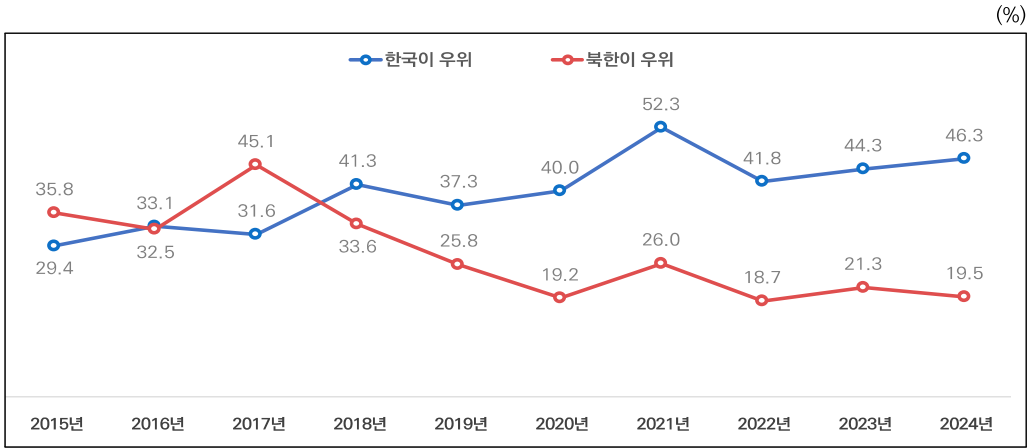
나)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할까?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한국이 우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2-3> 참조). 주한미군을 제외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일반국민은 ‘한국이 우위’ 46.3%, ‘비슷하다’ 34.3%, ‘북한이 우위’ 19.5%로,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많다. 전문가는 ‘한국이 우위’ 59.0%, ‘비슷하다’ 11.0%, ‘북한이 우위’ 30.0%로 전문가도 ‘한국이 우위’라는 응답이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 ‘북한이 우위’라는 응답도 30.0%로, 다수는 아니지만, 전문가 중에서 상당수는 북한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보다 높다고 평가한다. 이는 ‘북한의 핵전력’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전문가 내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평가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은 주한미국 전력을 제외하고 또한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한 의견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림 2-3>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주한미군 제외):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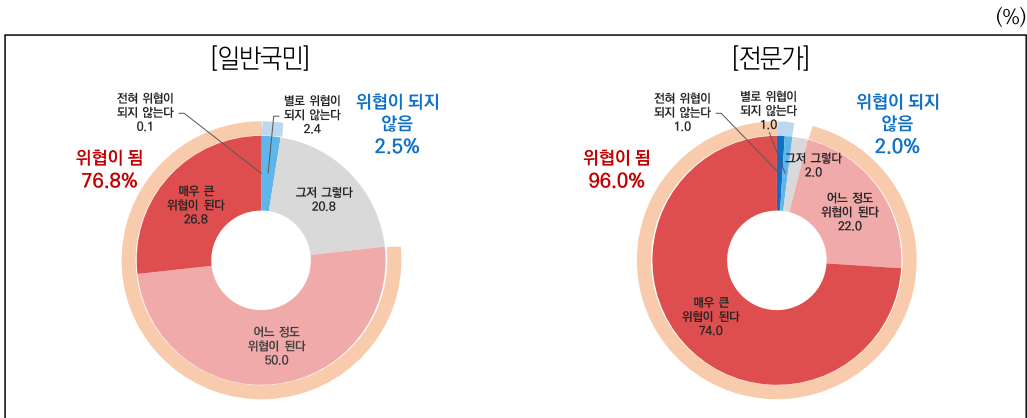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주한미군 제외): 2015년~2024년 일반국민



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안보위협과 핵 폐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북한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그림 2-5〉는 2024년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일반국민과 전문가 안보위협인식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안보위협(매우 큰 위협 +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평가가 일반국민은 76.8%이며, 전문가는 96.0%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반국민의 안보위협 평가가 전문가에 비교하여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5〉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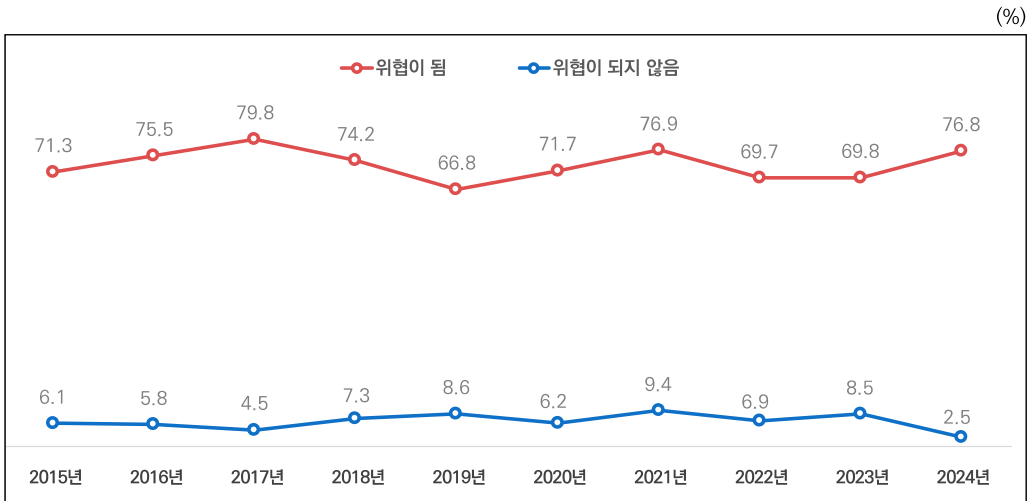


전문가는 절대다수가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에, 일반국민에 한해서 지난 10년간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2-6〉참조). 일반국민의 경우 대체로 70% 전후로 북한 핵무기가 안보위협이 된다고 인식하

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핵 개발이 한국에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은 10% 미만이다.

2024년의 경우 일반국민의 56.8%, 전문가 80%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다(〈표 2-6 참조〉). 2022년, 2023년,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하다. 일반국민은 50~60%가 전문가는 70~80%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함을 말해 준다.

〈그림 2-6〉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2015년~2024년 일반국민



〈표 2-6〉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의사: 2022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14.7	16.5	20.9	10.0	8.0	6.0
보통이다	31.9	22.2	22.3	9.0	15.0	14.0
아니다(아니다+전혀 아니다)	53.4	61.3	56.8	81.0	77.0	8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북한이 전쟁 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22년의 경우 전쟁 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 55.5%, 전문가 46.0%로, 일반국민이 전문가보다 전쟁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표 2-7〉 참조).

〈표 2-7〉 전쟁 시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2022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일반국민			전문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사용할 것 (반드시 사용+가능성 높다)	42.3	41.9	55.5	42.0	43.0	46.0
반반이다	32.1	35.4	31.1	25.0	28.0	23.0
사용하지 않을 것 (가능성 낮다+사용하지 않을 것)	25.6	22.7	13.4	33.0	29.0	3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2년, 2023년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40% 정도가 전쟁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2024년에 전문가 의견은 변하지 않았으나, 일반국민은 북한이 전쟁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전쟁에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쟁 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이 보다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모집단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중요한 시안일 경우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개발이 안보 위협이라고 보는 국민이 70% 이상이고, 북한 핵개발이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10% 미만이라는 조사결과에 대해서, 한국인은 북한 핵개발이 한국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전쟁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일반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인식

북한정권은 2024년 5월부터 민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에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돌발형식이다. 예상하지 못한 도발이어서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어느 정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오물풍선에 대한 한국 대응의 하나인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한국갤럽이 2024년 6월에 조사한 자료가 있어 제시하고자 한다.

〈표 2-8〉을 보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위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0%, ‘위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6%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적으로는 40-50대보다, 20-30대와 60대이상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위험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 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2-8〉 북한 오물풍선 관련 국민인식 (% , N=1,000명)

최근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위험적이다	위험적이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계
	60	36	4	100
북한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2022.4월 조사)	위험적이다	위험적이지 않다	모름/응답거절	계
	71	24	5	100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잘한 일	잘못한 일	모름/응답거절	계
	55	32	22	100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아야한다	막아선 안된다	모름/응답거절	계
	60	30	10	100

출처: 한국갤럽. 2024. 『데일리 오피니언』 제586호에서 정리³⁾

한편, 2022년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을 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험적이다’라고 생각한 국민은 71%였고, ‘위험적이지 않다’는 국민이 24%였다. 그리고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국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은 76.8%였다(〈그림 2-5〉참조).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위협인식은 북한 핵개발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보다는 낮은 위협인식이다. 그러나 ‘위험적이다’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과반수라는 점에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비한 안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55%,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가 32%이다.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은 40-50대보다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높다. 그러나 인구학적 변수보다 의견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념성향별 차이이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

3) 질문이 길어 다소 줄여서 제시하였다.

개에 대해 보수는 7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중도는 5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보는 37%만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의견 60%, ‘막아선 안된다’는 의견이 30%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이념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가 크다.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수에서는 51%, 중도는 62%, 진보는 73%이다.

오물풍선에 대한 위협인식에는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대북 확성기 재’나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이념성향별로 의견이 매우 달랐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핵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낮지만,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오물풍선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반수이니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게 하는 정책과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가.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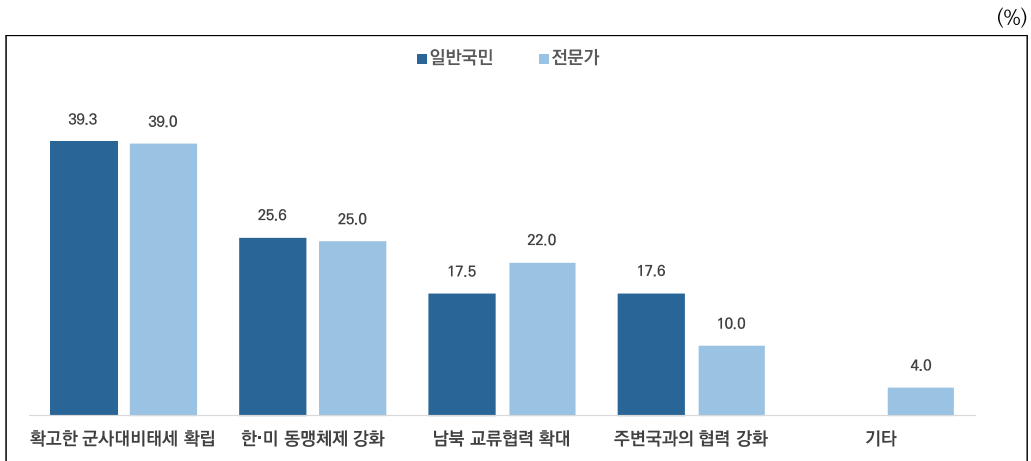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이중적 성격은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북정책 역시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과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및 대북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정책은 일견 상반되고 모순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동전의 양면처럼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정책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정책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식에 대한 인식,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림 2-7>은 2024년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남북한 간의 안보위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처

하는 게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일반국민=39.3%, 전문가 39.0%)’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다수이기는 하지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보다는 적지만 ‘한미동맹체제 강화(일반국민=25.6%, 전문가 25.0%)’와 ‘남북교류협력 확대(일반국민=17.5%, 전문가=22.0%)’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하고, ‘주변국과의 협력확대(일반국민=17.6%, 전문가=10.0%)’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한 간의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유사하게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면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에는 대결정책 일변도보다 화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그림 2-7〉 남북한 간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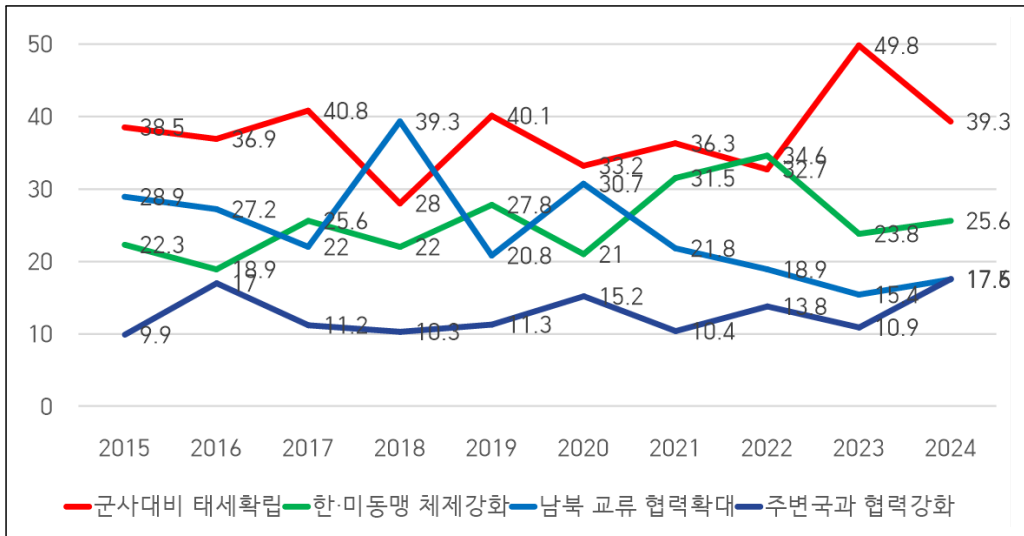


일반국민이 남북한 간에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2-8〉이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은 ‘남북교류 협력 확대’가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이는 예외적이다. 남북한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사대비태세 확립’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제시하는 비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군사정책 이외에 외교와 남북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다양한 안보전략 중에서 한가지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특정 시점에 특정 정책을 집중해서 추진해도,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8〉 남북한 간의 안보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일반국민 2015~2024년 (%)



둘째, 그렇다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표 2-9〉는 2024년 조사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정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명쾌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협의하여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대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18.%, 전문가는 8.0%가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남북한 직접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10년간 일반국민의 의견제시 추세를 보아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35.5%)을 제외하면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직접 대화/협상이 유효하다는 의견은 25% 미만이다.

〈표 2-9〉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2024년 %

	일반국민	전문가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 대화	18.5	8.0
6자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25.4	39.0
6자회담을 통한 해결	16.1	3.0
미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17.0	24.0
주변국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경제제재	13.0	19.0
주변국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군사제재	8.4	7.0
특별한 대응은 필요없다	8.4	7.0
계	100.0	100.0

따라서 한국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한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추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6자회담(6자회담과 북한과 직접 대화 병행 포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일반국민 41.5%, 전문가 42.0%로,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사실 6자회담을 활용하여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고, 2005년에는 일정 수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이 일반국민은 17.0%, 전문가는 24.0%이다. 전문가의 1/4 정도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보다 제재(경제제재, 군사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일반국민 21.4%, 전문가 26.0%로 이 의견도 다수는 아니다. 이는 한국인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재보다는 협상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은 남북한 직접회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6자회담 등 국제공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협조만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국민도 소수이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국민도 있지만 소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제재보다 협상을 선호한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남북한 간에 긴장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특정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선호도가 명확한 상태는 아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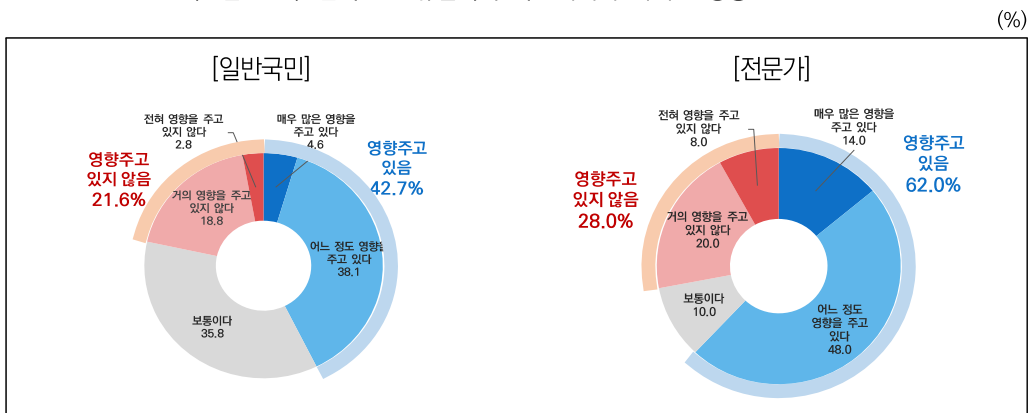
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되, 전체적으로 보면 제재보다는 협상 방식을 국민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남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통일을 대비한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을 하거나 대북지원을 하는 것은 다양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하면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기 어려울 것, 남북한 간에 이해를 제고시킬 것, 남북한 이질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부분적으로 한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등이다. 그리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변화하리라는 기대가 있다.

〈그림 2-9〉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해 일반국민은 42.7%가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매우 많은 영향+어느 정도 영향)’고 인식하고, 35.8%는 ‘보통이다’, 그리고 21.6%는 북한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거의 영향 주고 있지 않음+전혀 영향 주고 있지 않음)’고 인식하고 있다.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남북한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영향이 없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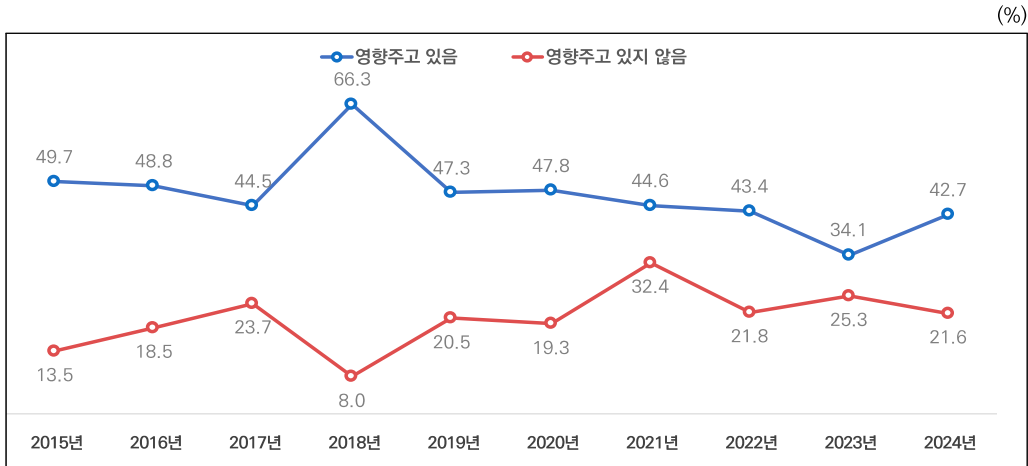
〈그림 2-9〉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그리고 전문가는 62.0%가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10.0%는 ‘보통이다’, 그리고 28.0%는 북한체제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는 ‘보통이다’라는 막연한 인식이 적다. 이는 북한에 대해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도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남북한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영향이 없다는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형 미치지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일반국민은 2015년이래 2024년까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의 변화에 영향일 미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항상 많았다(〈그림 2-10〉 참조). 특히 2018년 남북교류가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는데,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 교류가 매우 긴밀했다. 한국인은 남북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한다. 이는 반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진다.

〈그림 2-10〉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2015년~2024년 일반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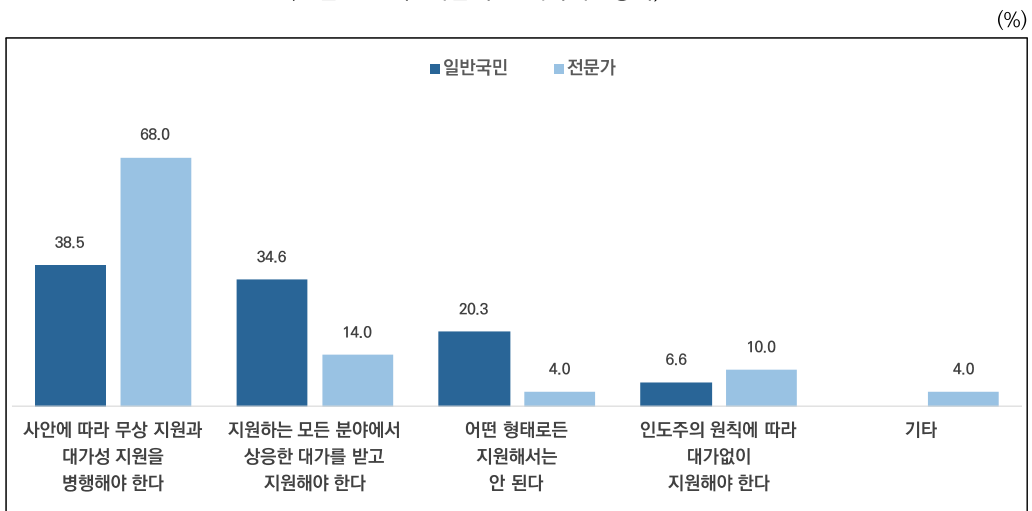


결국 남북한교류가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질문은 조사 시점의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평가로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것은, 한국인이 교류협력이 활발한 남북관계를 경색된 남북관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인이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면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남북한 경제 격차가 확대된 1990년대 이후 ‘인도적 지원’에 바탕을 두고 대북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대북지원정책은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이래 정부 정책으로 정착되었다. 인도적 원칙에 의해 대북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면서 대북지원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대북지원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이 나뉘면서 ‘남남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

〈그림 2-11〉은 2024년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일반국민은 ‘사안에 따라 무상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38.5%)’와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응한 대가를 받고 지원해야 한다(34.6%)’는 의견이 각각 많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20.3%)’는 의견이 1/5정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6.6%)’는 의견은 소수이다. 대북지원정책이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시작되었지만,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소수이다.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대북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양극적인 의견보다, 대북지원을 하되 무상지원보다는 대가를 받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러나 대가성 지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분야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이 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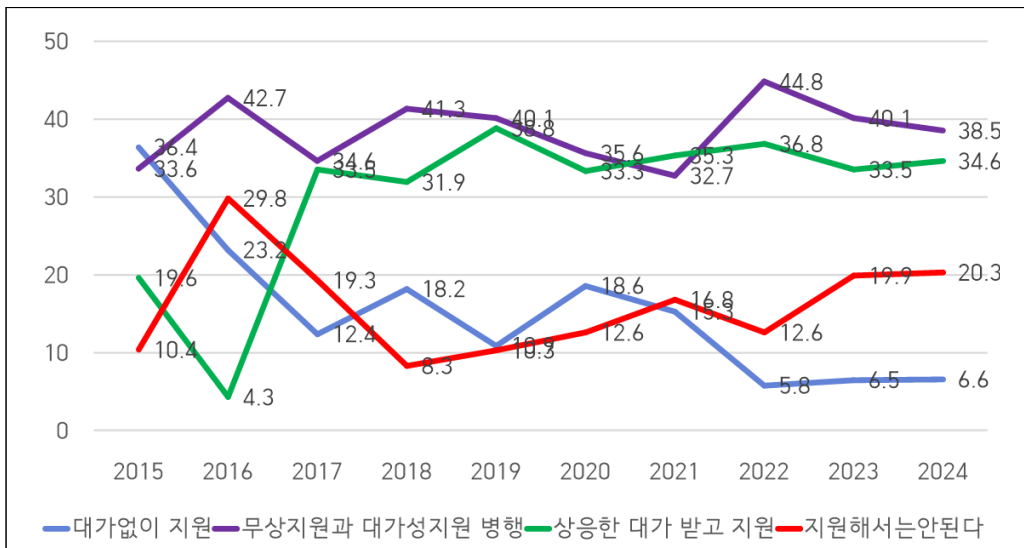
〈그림 2-11〉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2024년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데 반하여,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68.0%)’는 의견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10.0%)’는의견은 일반국민에 비해 조금 많고,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서는 안 된다(4.0%)’는의견은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적다.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허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2>는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의견 추세이다. 일반국민도 ‘사안에 따라 무가성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2021년 이후 적대적 대남정책을 강화하는 경우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늘고 ‘대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줄어든다. 북한 정권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을 펴면, 대북지원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늘어난다.

<그림 2-12>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 일반국민 2015년~2024년 (%)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경제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북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을 거부하거나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등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면 남북

한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상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4.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가.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용 지불의지

군사안보 확보를 중심 임무로 하는 국방부가 직접 통일정책을 관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군사정책은 핵심 고려대상이 북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국방·군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

〈표 2-10〉은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응답 결과이다. 일반국민 중에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일 이상주의는 10% 미만 소수이다. 오히려 ‘통일은 불필요하다’는 통일 부정론자보다 적다. 다만, 2024년 조사의 경우 60세 이상에서는 16.9%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9.4%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고연령층에서는 통일 이상주의가 통일 부정론자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을 포함하여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통일 이상론, 통일 부정론처럼 통일에 대해 양극적인 의견을 갖는 국민보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료가 좋다’는 의견을 갖는 국민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다수이다.

〈표 2-10〉 평화통일 필요성: 2023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7.3	9.2	22.0	25.0
통일은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	35.1	32.0	55.0	62.0
언젠가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대료가 좋다	39.8	39.0	18.0	9.0
통일은 불필요하다	14.3	14.1	2.0	4.0
잘 모르겠다	3.6	5.8	3.0	0.0
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 전문가 중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에도 ‘통일이 필요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에서, 전문가도 일반국민보다 약하지만 급격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23년부터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한 평화통일 정책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변화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할 때 보다, 일반국민의 경우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들었다. 이 점이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고 있다. ‘통일과정에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2024년의 경우 ‘의지가 있다(적극적 의지가 있다+의지가 있다)’는 의견이 24.8%, ‘의지가 없다(의지가 없다+전혀 의지가 없다)’는 의견이 36.2%이다.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국민보다 부담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많다. 한편, 전문가는 2024년 조사에서 ‘의지가 있다’ 82.0%, ‘의자가 없다’ 3.0%로 전문가의 경우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비용 부담 의지 간에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2023년과 2024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견이 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표 2-13>을 보면, 일반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없다는 의견 2023년 28.3%에서 36.2%로 증가한 반면, 전문가는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다는 의견이 2023년 73.0%에서 2024년 82.0%로 증가하였다.

<표 2-11> 통일비용 부담 의지: 2023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적극적 의지가 있다	1.3	3.3	14.0	28.0
의지가 있다	29.4	21.5	59.0	54.0
그저 그렇다	41.0	39.0	19.0	15.0
의지가 없다	24.0	26.6	4.0	3.0
전혀 의지가 없다	4.3	9.6	4.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북한의 민족개념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북한

의 통일정책전환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역설적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통일비용을 준비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의미를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 통일과 이익: 국가 및 개인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용 부담의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달랐다. 이는 통일이 국가와 개인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표 2-12〉는 ‘통일이 한국(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24년 조사에서 일반국민은 ‘이익이 될 것(매우 이익+다소 이익)’ 50.4%, ‘이익이 되지 않을 것(별로+전혀)’ 49.6%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한편, 전문가는 ‘이익이 될 것(매우 이익+다소 이익)’ 97.0%, ‘이익이 되지 않을 것(별로+전혀)’ 3.0%로,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이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 필요성이나 통일비용 부담 의지와 마찬가지로 통일과 국가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표 2-12〉 통일과 국가이익: 2022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우 이익이 될 것	7.8	11.2	9.3	65.0	48.0	60.0
다소 이익이 될 것	49.6	54.6	41.1	29.0	41.0	37.0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37.2	32.3	35.7	6.0	11.0	3.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5.4	2.0	13.9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일과 국가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조사하였다. 지난 3년간의 조사추세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22년 57.4%, 2023년 65.8%, 2024년 50.4%로, 2024년 통일이 국가이익된다는 의견이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22년 94.0%, 2023년 89.0%, 2024년 97.0%로, 전문가는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변하지 않고 압도적인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3〉은 ‘통일이 자신(개인)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024년 조사에서 일반국민은 ‘이익이 될 것(매우 이익+다소 이익)’ 30.2%, ‘이익이 되지 않을 것(별로+전혀)’ 69.8%로,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견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다. 전문가는 ‘이익이 될 것(매우 이익+다소 이익)’ 67.0%, ‘이익이 되지 않을 것(별로+전혀)’ 33.0%로, 전문가는 일반국민과 반대로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가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다. 통일과 개인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

그리고 지난 3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22년 38.5%, 2023년 36.4%, 2024년 30.2%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22년 64.0%, 2023년 64.0%, 2024년 67.0%로 변하지 않고 있다. 일반국민 중에서는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전문가는 과반수가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표 2-13〉 통일과 개인이익: 2022년~2024년 일반국민, 전문가 (%)

	일반국민			전문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우 이익이 될 것	2.5	2.1	2.7	19.0	21.0	26.0
다소 이익이 될 것	36.0	34.3	27.5	45.0	43.0	41.0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48.8	56.8	48.3	32.0	33.0	30.0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	12.1	6.8	21.6	4.0	3.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통일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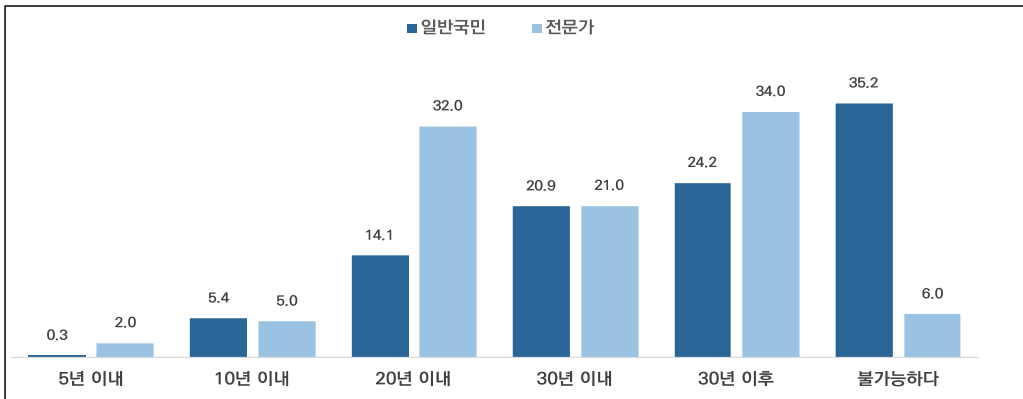
〈그림 2-13〉은 “한반도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응답이다. 2024년 조사에서 일반국민 중에 통일이 ‘불가능하다(35.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30년 이후(24.2%)’를 57.4%이다. 국민의 1/2 정도가 통일이 한 세대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6.0%)’는 의견은 적지만, ‘30년이후(34.0%)’에 통일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전문가 중에는 통일이 ‘20년내(32.0%)’에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일반국민(14.1%)’ 보다 많다. 통일 전망에 대한 의견에서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긍정적이다. 이는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통일이 필하다고 생각하고,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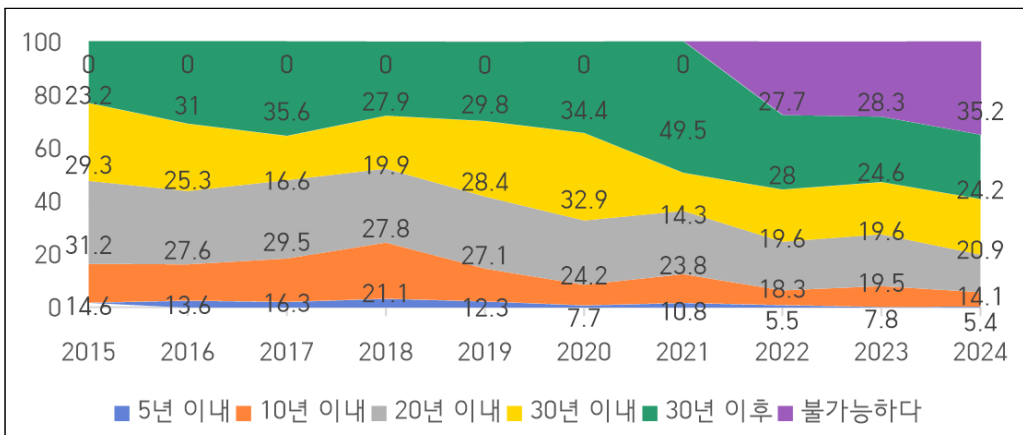
일이 국가나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한편,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모두 10년 이내(5년 이내 포함)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은 각각 5.7%, 7.0%로 소수이다. 전문가의 2/1이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50%)’을 전망하지만, 10년 이내 통일될 것으로 보는 국민이 적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13〉 한반도 통일 전망, 2024년



〈그림 2-14〉 한반도 통일 전망: 일반국민 2015년~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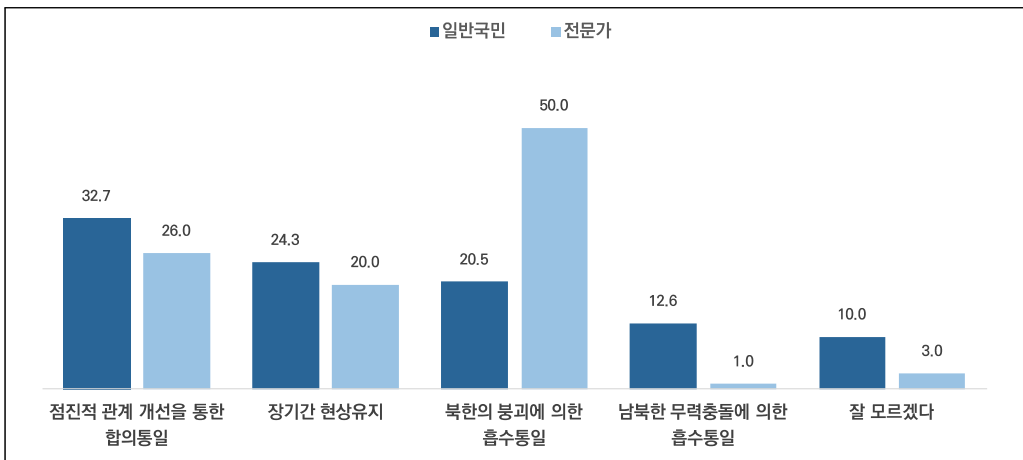
〈그림 2-14〉는 한반도 통일 시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통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통일방식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그림 2-15〉는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응답이다. 일반국민은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32.7%)’을 전망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 이어서 ‘장기간 현상 유지(24.3%)’,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 통일(20.5%)’,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12.6%)’을 전망하고 있다. ‘합의통일’에 대한 전망이 가장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방식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은 특정한 방식으로 예상하기보다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50.0%)’이 가장 많고, 다음이 ‘개선을 통한 합의 통일(26.0%)’, ‘장기간 현상 유지(20.0%)’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1.0%)’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이다.

〈그림 2-15〉 한반도 통일방식, 2024년



통일전망과 관련해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에 의견 차이가 크다. 일반국민의 ‘통일전망’ 의견에는 ‘전망’ 속에 ‘희망’이 담겨있다. 바람직한 통일과정으로서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통일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가는 현실적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대립이 지속되면, 통일은 북한 체제 붕괴로 흡수통일되거나 아니면 통일되기보다 현재와 같은 남북대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남북한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체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일 사례 등을 참고로 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4〉는 한반도 통일방식 전망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일반국민의 경우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2017년을 제외하면, ‘점진적 관계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의견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방식에 대한 전망 속에 ‘희망’하는 통일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반 국민 상당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4〉 한반도 통일방식: 일반국민 2015년~2024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3.0	30.3	42.0	21.6	22.1	19.0	27.0	17.8	22.3	20.5
남북한 무력충돌에 의한 흡수통일	18.3	15.8	10.7	8.4	18.3	12.3	5.6	11.8	12.1	12.6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한 합의통일	50.3	43.9	36.3	58.8	46.3	43.1	36.1	38.3	38.4	32.7
장기간 현상 유지	-	-	-	-	-	20.9	20.2	22.9	20.8	24.3
잘 모르겠다	8.5	10.1	11.1	11.2	13.4	4.8	11.2	9.2	6.4	1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2019년 ‘장기간 현상유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일반국민의 20%정도는 통일이 되기보다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국민의 경우 남북한이 통일되기보다는 70년이상 지속되는 남북한 휴전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보다 현재와 같은 상황 유지를 선호하는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III. 정책 제언: 국방정책 추진 방향

북한 정권은 2019년 대북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북미대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 그 이후 북한은 자력갱생을 기본 축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적대 정책을 편다. 그리고 2023년 말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공식화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군사 대립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 강화에 대해 한국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가? 특히 2023년 조사와 2024년 조사 사이에 나타난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의 대북인식 특질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북한 정권(북한군 포함)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다수 위협대상, 소수 협력대상, 극소수 지원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협력대상, 지원대상, 위협대상 등 다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위협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다. 2024년 조사를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 정권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강화는 정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로 보고, 북한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가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볼 때, 일반 국민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가가 북한 정권의 대남정책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남강경책이 북한체제 불안정성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강경책이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 북한의 대남강경책이 북한체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는 일반국민과 동일하지만,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달리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대남강경책을 내세울 때,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이 잦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국민보다 전문가의 평가가 현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남강경책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낮게 생각하는 일반국민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안보불감증 현상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강경책 시기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강경책 시기에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에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요인 중에서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우위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북한이 우위라고 평가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많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 중에서 핵심은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안보위협이다.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전쟁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대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비를 치밀하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에 북한은 민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이유로 들면서 오물풍선을 빈번하게 날려 보내고 있다. 오물풍선은 기존의 군사적 도발에 비하면 낮은 강도의 도발이다. 오물풍선에 대해 국민은 핵·미사일 위협 보다는 낮은 위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 국민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나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같은 기존 방식에 대해서, 이념성향에 따라 찬반의견이 크게 갈린다.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책이 자칫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책은 그 효과를 세밀하게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새롭게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오물풍선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핵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낮은 수준의 비전통적인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이다. 국방정책에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응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화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기초로 하되, 외교와 남북교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인이 다양한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은 자칫 특정 정책만 고집하면 남남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북 군사정책도 포괄적인 안보전략 기조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특정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선호도가 명확한 상태는 아니다. 남북한 직접회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 6자회담 등 국제공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미국과의 협조만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국민도 소수이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국민도 있지만 소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제재보다 협상을 선호한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되, 전체적으로 보면 제재보다는 협상 방식을 국민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국인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다. 교류협력이 활발한 남북관계를 경색된 남북관계 보다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대북지원정책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데 반하여,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무상 지원과 대가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집중되어 있다.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허용적이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정책을 거부하고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등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면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진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상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반국민의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이나 대북지원정책 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통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다수이다. 전문가는 일반국민에 비해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전문가도 급격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23년부터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한 평화통일 정책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은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변화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한편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통일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이 다소 있었다. 일반국민은 통일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역설적으로 통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통일비용을 준비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가 남북한 통일에 주는 의미를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데, 이는 통일이 국가이익 및 개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일반국민의 경우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 ‘통일이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 모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전문가는 통일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변하지 않고 압도적인 의견을 차지하고 있고,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우가 ‘통일이 개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다. 통일과 개인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에 해당한다.

통일방식에 대해서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다. 통일방식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은 특정한 방식으로 예상하기보다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가장 많다. 일반국민의 통일전망 의견에는 ‘전망’ 속에 ‘희망’이 담겨있다. 바람직한 통일과정으로서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통일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가는 현실적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대립이 지속되면, 통일은 북한 체제 붕괴로 흡수통일되거나 아니면 통일되기보다 현재와 같은 남북대립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체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 확보 외에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구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Smith, Hazel. 2000.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3, pp.593-617.
- 류동원. 박민형. 안경모. 정원호. 민정훈. 2020. 『2020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유상범. 류동원. 김태현. 이춘주. 김동삼. 2023. 『2023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한국갤럽. 2024. 『데일리 오피니언』 제586호. 한국갤럽..
- 홍태영. 유상범. 김병기, 김병조. 이상목. 이홍섭. 2021. 『2021 국민안보의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와 군 신뢰도 제고 방안

오 동 진*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국방정책 인식 분석
- IV. 정책적 제안

요약문

2024년 일반국민대상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국방정책에 관한 내용 중 군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의지, 전쟁 시 참전 의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 신뢰도'와 나머지 세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 국방예산 확대, 직업군인 추천의지, 전쟁 시 참전 의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군 신뢰도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에 매우 중요한 토대임을 의미한다.

국민의 군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군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북 핵 위협 인식',

* 국방대 국방관리학부

‘대북 군사력 우위’, ‘군 복무의 효용성’,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 ‘방위력 개선 사업의 공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군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방정책이 부정부패 없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결정 및 집행되고 있음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강조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잔존하는 병영부조리를 근절하고, 군 복무가 의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발전적 군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증거에 기반한 (evidence-based) 군의 정책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의 투입물(inputs) 중심의 정책평가에서 산출물(outputs) 및 산출결과(outcomes) 중심의 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방예산 규모(GDP의 2.22%, 57조원)의 적정성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3%로 2021년 4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단순한 진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여러 매체에서 접하는 안보관련 정보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 이어 더하여, 국방 및 안보분야 전문성이 뛰어난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한 전략적 소통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국방예산의 약 29%를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방혁신 4.0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역설하고,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체계에 대해 그 필요성과 효과성, 전략적 가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반국민의 직업군인 추천의지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직업군인을 추천하겠느냐는 설문에 일반국민은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만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12.3%보다 22%p 높았다. 하지만 2023년 결과 대비 ‘권장함’은 0.6%p 소폭 감소한 반면, ‘만류함’은 2.0%p 증가하였다. 일반국민의 직업군인 추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 신뢰도와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직업군인 추천 또는 지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영 내 잔존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전역 후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국가보훈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GI Bill과 제대군인 취업 우대정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군인의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중견간부의 조기 전역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의 처우 뿐 아니라 군인가족들의 복지도 향상시켜야 한다. 군인가

족 복지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담은 국방부 수준의 정책보고서와 관련 지시 문건을 발간하고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있는 군인가족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반 국민의 전시 참전의지를 분석한 결과,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을 묻는 설문에 일반국민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전시 참전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전장환경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정확히 제공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간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과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시 예비군의 역할과 전략적 중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1. 서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군(軍) 신뢰도는 민군관계 (civil-military relations) 뿐 아니라 정부신뢰 및 시민참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국방정책의 목적과 그 내용이 자신의 이해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국방정책에 대해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정책 이해도는 국방정책 및 군 조직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국민의 정책순응(compliance)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방정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군 신뢰도가 높은 국민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순응도가 높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을 변동시키기 위한 여러 행동을 취할 것이다. 기존 정책대안 연구들은 안보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어느 변수가 대군 신뢰도 및 국방정책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

화와 대군 신뢰도의 기술적 추이 분석 뿐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국방정책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군 신뢰도 및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일반국민대상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국방정책에 관한 내용 중 군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적 추세 분석에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근 10년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군 신뢰도, 국방비 확장,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 의향 등 주요 설문문항 간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등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횡단적 회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 신뢰도, 국방예산 확장,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 의향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어떤 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 포함된 설문문항 중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병역 이행여부, 정치성향 (진보 또는 보수)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가능성, 북핵 위협,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도, 개인의 안보의식 수준, 군 복무 경험에 대한 인식 등 대군 신뢰도 및 국방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술적 추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 군 신뢰도 및 국방정책 지지도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대군 신뢰도 및 주요 국방정책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바탕으로 전문가, 정책 실무자, 일반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실행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국방정책은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Huntington, 1961)¹⁾. 우리는 민군관계 측면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국방정책 인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군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으며,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병역 자원을 지원 받는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군 또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자원 (인력, 예산, 국민의 정책 지지도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resource-dependency), 외부 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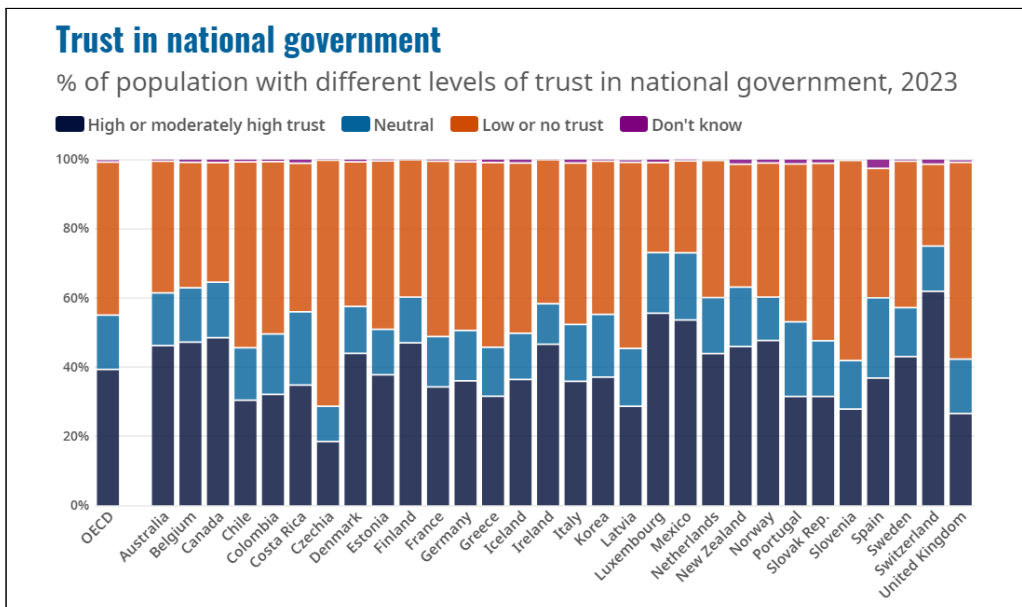
1) Huntington, S. P. 1961. *The Common Defense: Strategic programs in national politics*.

않으면 군 조직의 힘이 약해지고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점인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의지 등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제시한다.

1. 정부 신뢰와 군 신뢰

군 조직은 중앙정부에 속한 정부기관 중 하나이므로 군 신뢰도를 논하기 앞서 국민이 인식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옳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의미한다 (OECD, 2013, p.40)²⁾. 정부신뢰는 정치시스템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 중 하나로써, 정부가 강제적 공권력의 동원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복지에 필수적인 요소다 (OECD, 2013). 정부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시민과 기업의 선호도, 옳고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에 대한 해석이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OECD, 2013).

〈그림 3-1〉 OECD 회원국 정부 신뢰수준



2) OECD. 2013.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30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관한 202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신뢰가 전혀없다 라고 답한 비율(44%)이 정부에 대해 높거나 보통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4)³⁾. 생활비 상승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지역의 전쟁 상황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신뢰도는 소폭하락하는데 그쳤지만, 여성과 저학력자의 경우 5% 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OECD, 2024).

대한민국의 경우 37%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해 OECD 평균 39%에 비해 조금 낮았다. 이 수치는 2021년 이후 12%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데이터가 가용한 18개 OECD 국가의 평균 2.4% 포인트 감소에 비해 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에 대한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여성, 젊은 층,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정부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보다 정부 정책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해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9%가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중에서는 22%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OECD, 2024). 또한, 정부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의사결정과 전략적 소통이 국민의 정부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1%만이 정부가 의사 결정에 최선의 증거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39%만이 정책 혁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OECD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및 중앙 정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복잡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증거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ECD, 2024).

한국행정연구원은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군대, 노동조합, 시민단체, TV방송사, 신문사, 교육계, 의료계, 대기업, 종교계, 금융기관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기관의 평균 신뢰도는 51.1%로 2022년 52.8%보다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41.3%에 비해 약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표누리, 2024)⁴⁾. 군 조직의 2023년 신뢰도는 54.5%로 기관신뢰도 평균 51.1%보다 조금 높았으며, 조사 대상 16개 기관 중 다섯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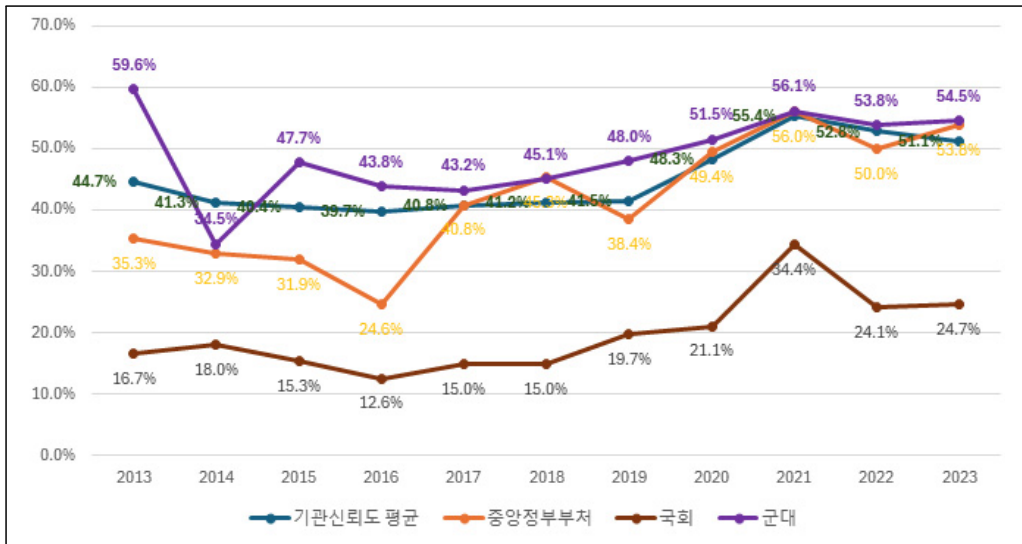
3) OECD. 2024.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2024 Results: Building Trust in a Complex Policy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a20554b-en>.

4) 지표누리. 2024. 『기관 신뢰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8&idxCd=8048>

로 높은 수치였다. 2013년~2023년 동안 기간별 신뢰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군 조직의 신뢰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기관 신뢰도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중앙정부부처, 국회에 대한 신뢰도 보다 항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기관별 신뢰도 비교 (2013~2023)



출처: 지표누리 (기관신뢰도) 데이터를 저자가 그래프로 작성함

2023년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군 (60% 신뢰)은 16개 조사 대상 기관 중 자영업자 (small business) (65% 신뢰) 다음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ad, 2023)⁶⁾. 군에 대한 신뢰도가 60%로 이렇게 낮았던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며, 58%가 신뢰한다고 답한 1988년 이후 이보다 낮은 수치는 없었다 (Younis, 2023)⁷⁾.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즉 냉전 시대와 이란 인질 사태를 비롯한 미국의 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던 시기에는 미국인의 50%에서 58%가 군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Younis, 2023).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 후 걸프전 승리(1991년 사상 최고치인 85%)와 9/11 테러 공격 이후 다시 급상승했다 (Younis, 2023). 신뢰도는 이후 20년 동안 대체로 70% 이상을 유지하다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2021년 69%로 하락했다 (Youn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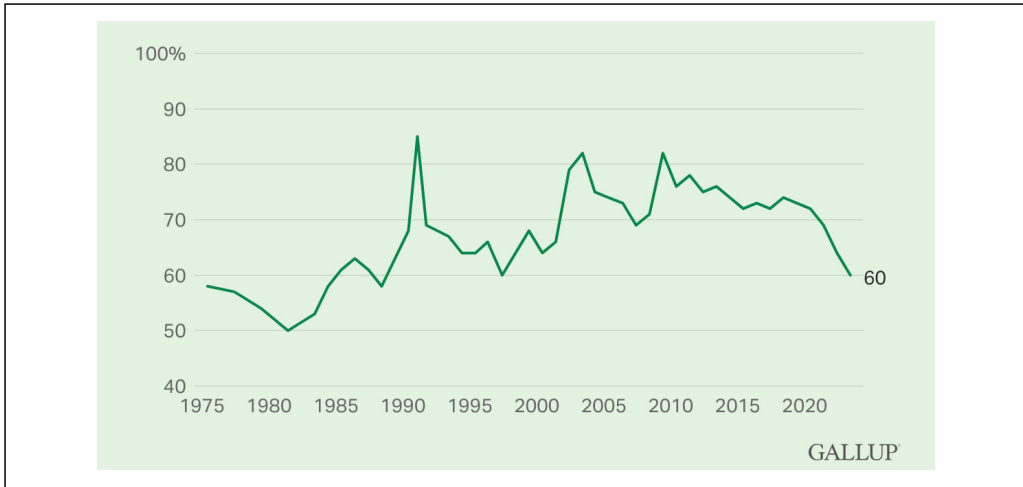
5)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8&idxCd=8048>

6) Saad, L. 2023. *Historically Low Faith in U.S. Institutions Continues*. GALLUP.

7) Younis, M. 2023. *Confidence in U.S. Military Lowest in Over Two Decades*.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509189/confidence-military-lowest-two-decades.aspx>

2023). 1975이후 현재까지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층보다 군을 신뢰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의 군 신뢰도는 2020년 91%에서 2023년 68%로 23%포인트 급락하였다 (Younis, 2023).

〈그림 3-3〉 미국 국민의 군 신뢰도



Margulies & Blankshain (2022)는 군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성과(performance), 전문성(professionalism), 설득력(persuasion), 개인적 유대(personal connection), 정치성향(partisanship)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⁸⁾ 성과(performance)는 군의 유능함과 전장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은 우수성을 증명하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반면, 작전적 실패나 스캔들 때문에 신뢰도를 잃기도 한다.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은 군이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예를 들어, 마약문제, 인종차별, 성폭력 등)에 대응하는 방식 및 능력을 의미한다. 설득(persuasion)은 군의 성과와 전문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전략적 소통을 의미하며, 이는 군의 우수 인력 모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개인적 유대관계(personal connection)은 개인의 군 복무 경험이나 군 조직과의 상호작용 등 경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 복무 경험한 국민은 군 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마지막 정치성향(partisanship)는 국민 개인이 공화당,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또는 중도층인지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군 신뢰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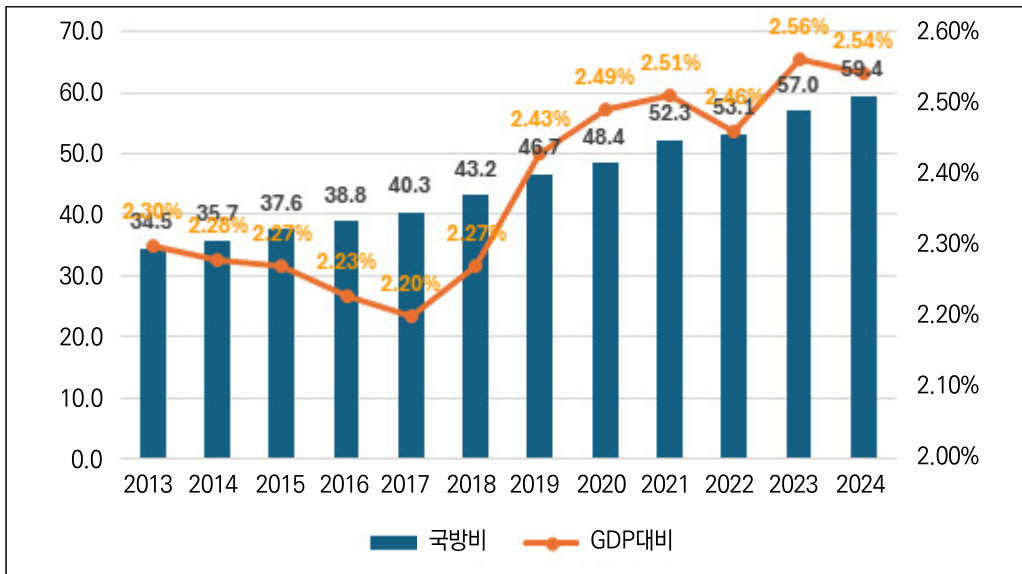
8) Margulies, M., & Blankshain, J. 2022. "Specific sources of trust in generals: Individual-level trust in the US military," *Daedalus*, 151(4), 254-275.

Garb & Malesic (2016)에 따르면, 군대에 대한 높은 신뢰도의 가장 큰 원인은 재난 구호 능력, 전문성과 높은 성과, 그리고 외부 국가위협에 대비한 군의 능력 등이 있으며, 불신의 주요 원인은 국방조달 과정의 낮은 투명성 수준, 군의 정치화 등이 있다.

2. 국방예산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59조 4200억 규모로 2023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가예산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4〉 연도별 국방예산 (2013~2024)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2024년 보다 3.6% (2조 1,634억원) 증가한 61조 5,878 억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한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 하여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국방부, 2024)⁹⁾. 특히,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국방부, 2024).

9) 국방부. 2024.08.27. “보도자료: 2025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6% 증가한 61.6조원”.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550>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 규모는 경제적 요인(국내총생산, GDP), 정치적 요인(우익정권, 국민 여론), 분쟁 및 외부 위협 수준, 군비경쟁, 동맹국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Droff & Malizard, 2022)¹⁰. Droff & Malizard (2022)는 1958년부터 2017년까지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방비 지출 수준은 국내 총생산량(GDP), NATO 회원국 지위, 해외파병 군사작전, 외부 위협 수준 등에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비 군사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에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Hartely & Russett (1992)¹¹와 Eichenberg & Stoll (2003)¹²은 국민여론이 국방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Hartely & Russett (1992)은 미국과 소련간의 군비경쟁이 한창이던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국방비 지출규모와 국민 여론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방비 지출 규모가 너무 적다(too little)는 응답비율이 많을수록, 다음 해 국방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ichenberg & Stoll (2003)는 1965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국방비 지출규모와 국민여론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¹³ 스웨덴을 제외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다라는 응답이 증가할수록 다음 해 실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군인 모집

최근 우리 군은 우수한 초급간부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관학교를 자퇴한 생도는 545명에 달했고 이중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2년 자퇴한 1학년 생도는 32명으로 육사의 학년별 정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2023.10.03)¹⁴. ROTC 후보생의 지원율도 급감하여 2015년 4.8 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급감하였고, 2023년에는 육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국방부는 2024년부터는 지원률 제고를 위해 ROTC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아일보, 2024.02.12.)¹⁵.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부사관 지원

10) Josselin, D., & Malizard, J. 2022. "Determinants of defense spending: the role of strategic factors in France," *Defence and Peace Economics*, 33(8), 938-955.

11) Hartley, T., & Russett, B. 1992. "Public opinion and the common defense: who governs military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905-915.

12) Eichenberg, R. C., & Stoll, R. 2003. "Representing defense: Democratic control of the defense budget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7(4), 399-422.

13) 국민 여론뿐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정치적 변수, 외부 위협, 동맹국 간의 관계도 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함.

14) 조선일보. 2023.10.03.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 1학년이 제일 많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03/YHQ52P2UOBEL5BLFDA6IXPCJNA/.

15) 동아일보. 2024.02.12. "지원율 급감에...ROTC 필기시험 15년만에 폐지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3/123500324/2_

율도 급감하고 있으며, 육군이 24년 1분기 단기복무전환·임기제 부사관을 모집한 결과 계획대비 약 63%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머니투데이, 2024.04.24.)¹⁶⁾.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제대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481명으로 2022년 대비 24.1% 증가하였으며, 이 중 5~10년간 복무간 중기복무 간부는 2022년 2999명 대비 35.4% 증가한 4061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2024.05.24.)¹⁷⁾.

직업군인에 지원하는 동기는 크게 외재적 동기 (e.g. 급여, 복지 혜택 등)와 내재적 동기 (e.g. 애국심, 의무 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oskos (1977)¹⁸⁾는 군 조직을 제도적 군대 (institutional model)과 직업적 군대 (occupational model)로 나누고, 군 조직이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제도적 군대에서 직업적 군대로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도(institution)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더 높은 선을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정당화 되며, 이는 의무, 명예, 조국과 같은 구호에 의해 잘 드러난다(Moskos 1977). 제도적 군대에 속한 구성원은 일반인과 다르고, 소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Moskos, 1986)¹⁹⁾. 급여가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더라도, 이는 비급여 복지혜택(e.g. 관사, PX, 피복 지원, 의료혜택 등)과 심리적 지원으로 보상되며, 불만이 있더라도 노조를 구성하기보다는 제도적 군대가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하에 상급자에게 건의한다 (Moskos, 1986). 직업(occupation)은 규범적 고려보다, 수요·공급과 같은 시장원리에 기초한다(Moskos, 1986).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가진 근로자는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회사와 급여를 협상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노조를 구성하기 한다 (Moskos, 1986). 직업적 군대모형은 비용-효과성 분석 측면에서 민간 기업과 군 조직이 차이가 없고, 군대의 보상이 가능한 현물보다는 현금 형태로 이뤄져 효율적인 시장원리가 적용되며, 급여가 계급과 근속연수가 아닌 전문성이나 능력 따라 결정된다는 핵심가정에 기초한다 (Moskos, 1977). 직업적 군대 모형은 미국의 1970년 모병제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보고서 (Gates Commission Report)의 철학적 논거를 뒷받침하였는데, 보고서에서는 의무, 명예, 조국과 같은 제도의 규범적 가치 대신, 시장 기준에 부합한 금전적 유인책에 따라 병력 모집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Moskos, 1977). 제도적 군대와 직업적 군대와의 차이점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16) 머니투데이. 2024.04.24. "싸울 군인이 없다...육군 부사관, 부대 모집계획 절반도 못 채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317383136186>

17) 한국경제신문. 2024.05.24. "군간부 9000명 전역... '국방 허리' 휘청."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420071>

18) Moskos Jr, C. C. 1977. "From institution to occupation: Trends in military organization". *Armed forces & society*, 4(1), 41-50.

19) Moskos, C. C. 1986. "Institutional/occupational trends in armed forces: An update". *Armed Forces & Society*, 12(3), 377-382.

〈표 3-1〉 제도적 군대와 직업적 군대의 차이

특성	제도적 군대	직업적 군대
정당성	규범적 가치	시장경제
직무수행	광범위 (군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일)	구체적 (특정한 업무 수행)
보상의 기준	계급과 근속연수	개인 능력, 기술 수준
보상 방법	비금전적 보상 형태 (관사, 피복, 의료 혜택 등), 전역 후 보상 (연금 등)	급여와 성과급 보너스
보상 수준	낮은 급여	높은 급여
거주 형태	군무지와 거주지 인접	군무지와 거주지 분리
군인의 배우자	군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 (군 관련 봉사활동 참여)	군 공동체와 분리
사회적 인식	군 복무에 대한 존경	보상수준에 따른 위신
준거 집단	군 조직, 수직적 체계	군 외부 조직, 수평적 체계
성과 평가	총체적, 질적 평가 (전인적 평가)	부분적, 양적 평가 (업무 영역 객관적 평가)
사법 체계	군법 적용	일반 민·형사법 적용
제대 후 지위	제대군인 혜택 및 특권	민간인과 동일

출처: Moskos (1986, p.378)

Krebs & Ralston (2022)²⁰는 〈표 3-2〉에서와 같이 군 입대 결정의 유형을 군 입대 동기(내적 동기 또는 외적 동기)와 군 입대의 자발적 선택 정도 (높음, 낮음)의 두 가지 차원에 따라 “근로자(employee), 절박함 (desperate), 애국자(patriot), 모범 시민 (good citizen)” 등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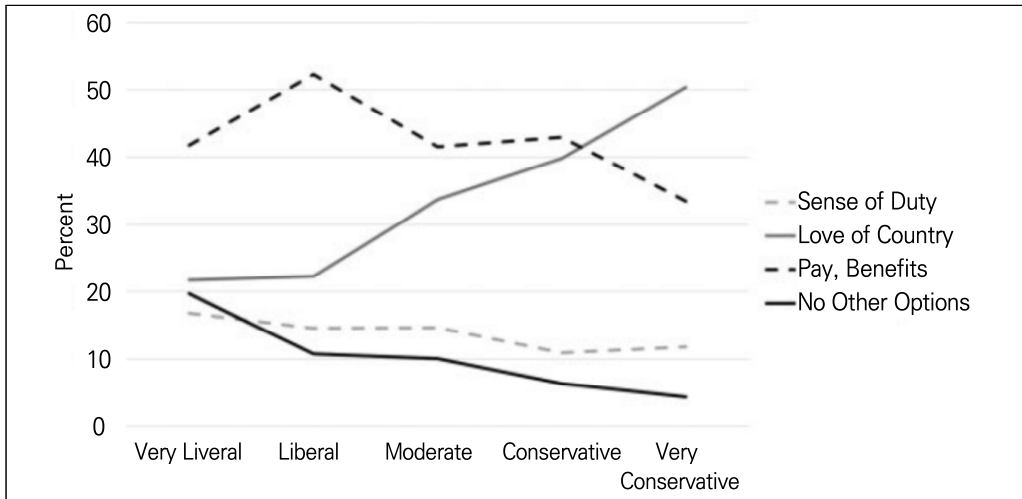
〈표 3-2〉 군 입대 결정 유형

구 분		군 입대 결정의 자율성 정도	
		높음	낮음
군 입대 동기	내재적	애국자 (조국에 대한 사랑)	모범 시민 (의무감)
	외재적	근로자 (급여, 복지)	절박함 (다른 대안 없음)

출처: Krebs & Ralston (2022, p.29)

20) Krebs, R. R., & Ralston, R. 2022. "Patriotism or paychecks: Who believes what about why soldiers serve," *Armed Forces & Society*, 48(1), 25-48.

〈그림 3-5〉 군 입대 결정 이유에 대한 인식과 정치성향



출처: Krebs & Ralston (2022,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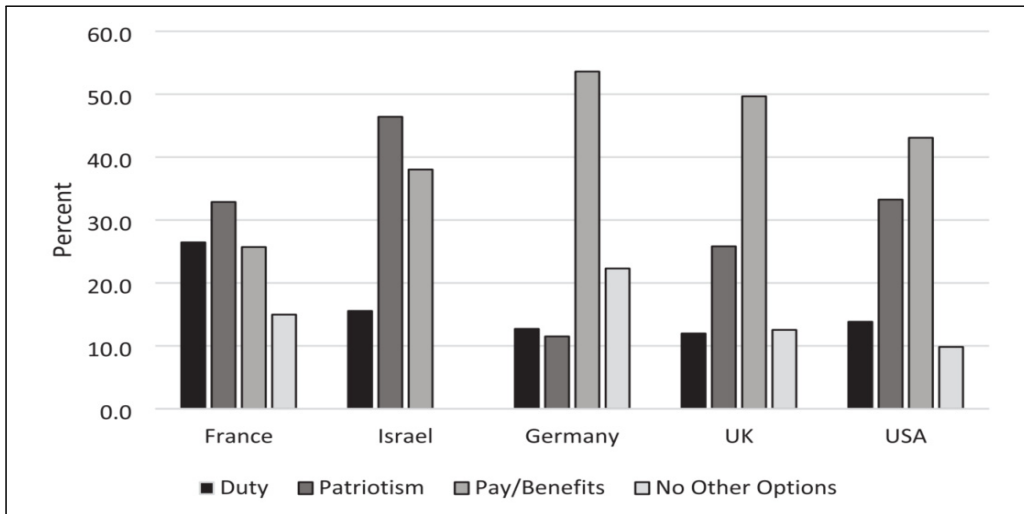
근로자 유형(외적 동기, 높은 자발적 선택)은 군이 제공하는 급여와 복지혜택, 모험심, 다양한 해외 복무 등 때문에 군 복무를 결심한다. 절박함 유형(외적 동기, 낮은 자발적 선택)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 출생지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군입대를 선택한다. 애국자 유형(내적 동기, 높은 자발적 선택)은 조국에 대한 애정 때문에 군 입대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모범 시민 유형(내적 동기, 낮은 자발적 선택)은 조국에 대한 의무감,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군 입대를 결정한다. Krebs & Ralston (2022)은 2018년 미국 국민 2,451명을 대상으로 군 입대 결정요인과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그림 3-5〉와 같이 대다수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군 입대 결정 요인을 애국심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비해, 대다수의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보수와 복지 혜택 등 외적 동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강한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거의 20%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군 입대를 결정한다고 답하였다.

Krebs et al.(2024)²¹⁾는 프랑스(1,089명), 독일(2,277명), 이스라엘(1,528명), 영국(2,448명), 미국(2,451명) 등 다섯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 입대 결정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6〉과 같이,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대다수 응답자는 애국심, 모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내적 동기라고 답하였고, 미국 응답자는 내적 동기와 외적

21) Krebs, R. R., Ralston, R., Balzacq, T., Blagden, D., Shenhav, S. R., & Steinbrecher, M. "Citizenship Traditions and Cultures of Military Service: Patriotism and Paychecks in Five Democracies". *Armed Forces & Society*, 0095327X241275635. 2024.

동기를 거의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응답자의 대다수는 외적 동기라고 답하였다.

〈그림 3-6〉 국가별 군 입대 동기에 대한 인식



출처: Krebs et al. (2024, p.7)

4. 전쟁 참여 의지 (willingness to fight)

전쟁 참여 의지 (willingness(will) to fight)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 군 조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전쟁 참여 의지는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거나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희생의 필요성이 증가하더라도 특정 목표를 위해 군사 및 기타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국가 정부의 결심”을 의미한다 (RAND, 2019)²²⁾. 군 조직 차원에서의 전쟁 참여 의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투에 임하고, 행동하며, 인내하려는 개인 및 부대의 성향과 결정”을 의미한다 (RAND, 2019). 개인적 차원의 전쟁 참여의지는 국가가 전쟁에 참여시 기꺼이 국가를 위해 참전할 개인의 의지를 의미한다(Inglehart, Puranen, & Welzel, 2015)²³⁾.

GALLUP International (2024)²⁴⁾이 2023년 46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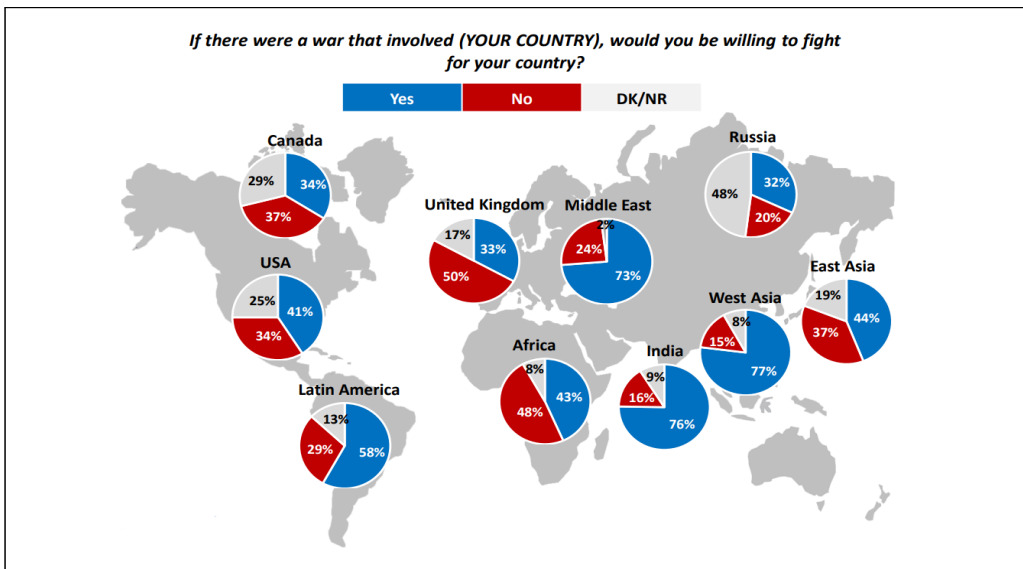
22) Rand Corporation. 2019. *Will to fight: returning to the human fundamentals of war*.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10040.html

23) Inglehart, R. F., Puranen, B., & Welzel, C. 2015. “Declining willingness to fight for one’s country: The individual-level basis of the long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52(4), 418-434.

24) Gallup International. 2024. *Fewer people are willing to fight for their country compared to ten*

조사에 따르면,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싸우겠는가?”라는 설문 문항에 52%는 그렇다, 33%는 아니다, 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4년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라는 응답 61%에 비해 9% 감소한 수치로, 최근 촉발된 여러 분쟁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태도에는 전 세계 남/동부와 북/서부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32%), 미국(41%), 캐나다(34%) 국민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국가를 위해 싸울 의향이 훨씬 적은 반면, 서아시아(77%),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73%), 인도(76%)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Gallup International, 2024). Inglehart et al. (2015)²⁵⁾의 주장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여러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쟁에서 생명을 희생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국가간 평화는 더 견고한 대중적 기반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림 3-7〉 국가별 일반국민의 전쟁 참여 의지



출처: Gallup International (2024)

years ago. <https://www.gallup-international.com/survey-results-and-news/survey-result/fewer-people-are-willing-to-fight-for-their-country-compared-to-ten-years-ago>
 25) Inglehart, R. F., Puranen, B., & Welzel, C. 2015. "Declining willingness to fight for one's country: The individual-level basis of the long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52(4), 418-434.

대한민국은 싸우겠다는 응답이 46%로 전세계 평균 52%보다 낮았으나, 미국 41%, 영국 33%, 러시아 32%, 일본 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병역법에 의거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가동원령 또는 부분동원령 발령을 통해 병력을 동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시, 일반국민 개개인의 전쟁참여의지는 동원응소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참전여의지는 사회적 정체성, 분쟁의 유형,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군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각된 집단행동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n et al., 2024; Wang et al., 2023). Simon et al.(2024)²⁶⁾은 미국 국민 2,171명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이민자 출신이 미국에서 출생한 국민보다 참전여의지가 더 강하다근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 중앙 행정부에 대한 신뢰, 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참전여의지가 증가하였다. 분쟁의 유형별로는 정규전에 대해서는 참전여의지가 낮은 반면, 테러나 내전(civil war) 발생시에 참전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imon et al., 2024).

Wang et al.(2023)²⁷⁾은 국민 개인은 다른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 싸울것이라고 인식할 때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각된 집단행동의 효과는 국가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의 결정을 고려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Wang et al., 2023).

III. 국방정책 인식 분석

본 조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 의해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 까지 수행된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국민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집적 면접조사하였으며, 전문가는 국방·안보정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6) Simon, C. A., Lovrich, N. P., Verboncoeur, K. G., & Moltz, M. C. 2024. "Re-examining Willingness to Fight for One's Country: Exploring Nature of Conflict and Citizenship Status Eff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med Forces & Society*, 0095327X241269905.

27) Wang, A. H.-E., & Eldemerdash, N. 2023. "National identity, willingness to fight, and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60(5), 745-759. <https://doi.org/10.1177/00223433221099058>

인테넷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일반국민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8\%p$ 이다.

1. 기술적 추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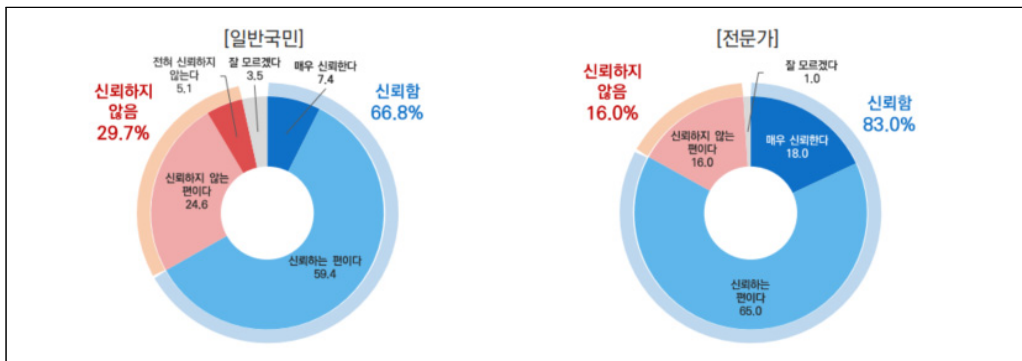
가. 군 신뢰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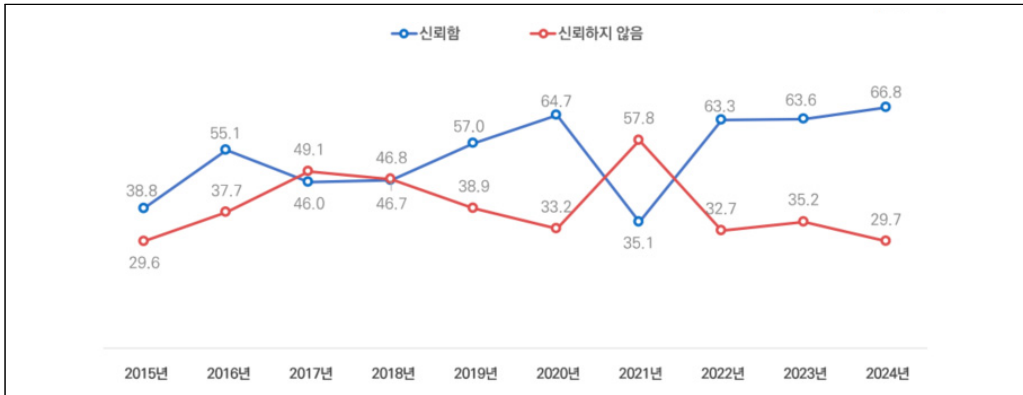
1) 군에 대한 신뢰도 변화

군에 대한 신뢰도는 “귀하는 우리 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8% (매우 신뢰 7.4%+신뢰함 66.8%)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 29.7% (전혀 신뢰하지 않음 5.1%+신뢰하지 않음 29.7%) 보다 32.7%p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p(2023년 63.6%) 증가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5.5%p(2023년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군 신뢰도 응답을 살펴보면,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83.0%)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16.0%)보다 67.0%p 높게 나타나, 일반국민보다 국방·안보정책 전문가 집단이 군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대군 신뢰도에 대한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은 최고 수준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2015년의 38.8% 대비 28.0%p 증가한 수치이다. 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 또한 29.7%로 최근 10년간의 조사에서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최고를 기록했던 2021년 (57.8%) 보다 28.1%p 감소하였다.

〈그림 3-8〉 군에 대한 신뢰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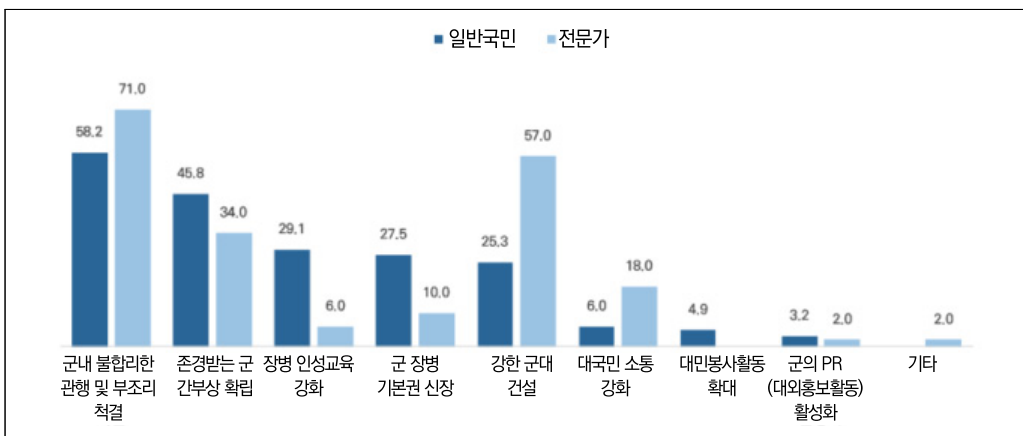




2) 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법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 (9개 중 1, 2순위 선택)에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라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58.2%로 가장 높았고, ‘존경 받는 군 간부상 확립’ 45.8% ‘장병 인성교육 강화’ 2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일반국민 응답 결과 대비하여 2024년 결과는 ‘존경 받는 군 간부상 확립’이 15.0%p (2023년 30.8%) 증가한 반면, ‘강한 군대 건설’은 7.3%p (2023년 3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1+2순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7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한 군대 건설’(5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일반국민의 응답결과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군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한 것은 징병제를 시행하여 만20세 이상 건강한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군대 내 인권향상 및 선진 병영문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대 내 병영부조리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 등이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는데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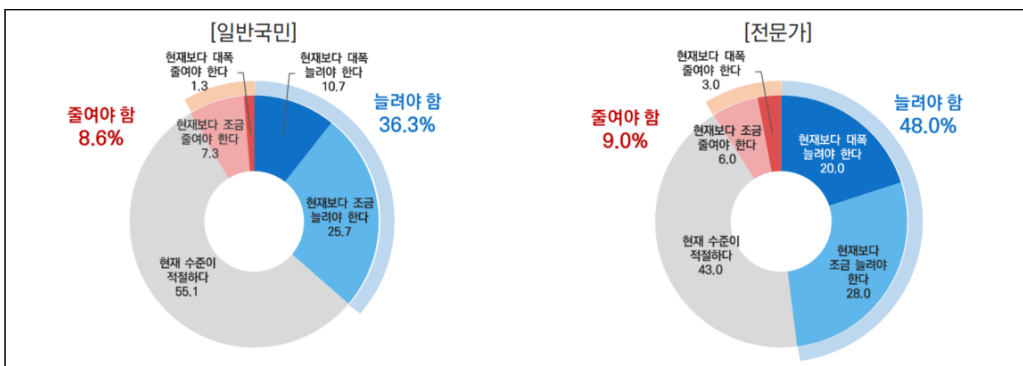
나. 국방예산 및 국방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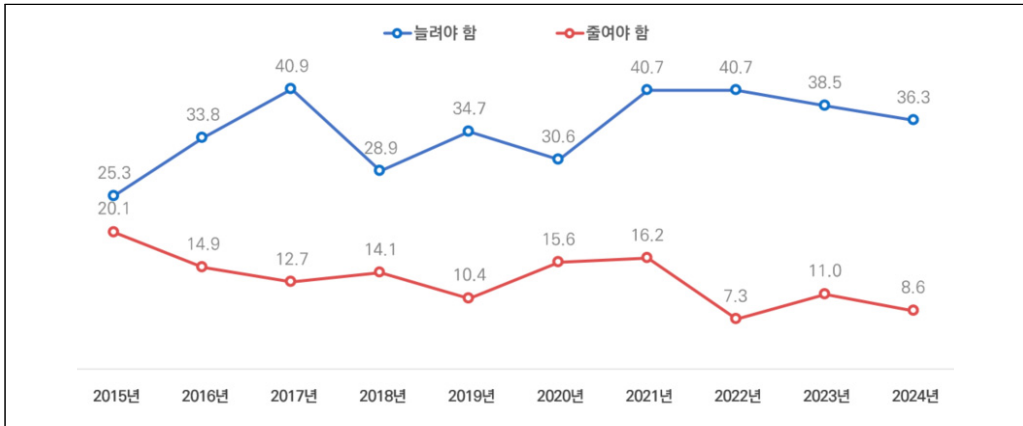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

2023년 기준 GDP의 2.55% 수준인 약 57조원 규모의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문문항에 일반국민 응답자 중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줄여야 함’(8.6%)보다 27.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늘려야 함’은 2023년(38.5%) 대비 2.2%p 감소했으며, ‘줄여야 함’은 2023년(11.0%) 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전인 2015년 대비 우리나라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p 증가했으며, ‘줄여야 한다’는 1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이번 설문에서 현재 국방예산을 ‘늘려야 함’은 48.0%로 ‘줄여야 함’(9.0%)보다 39.0%p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국방예산 확대를 더 지지하였다.

〈그림 3-10〉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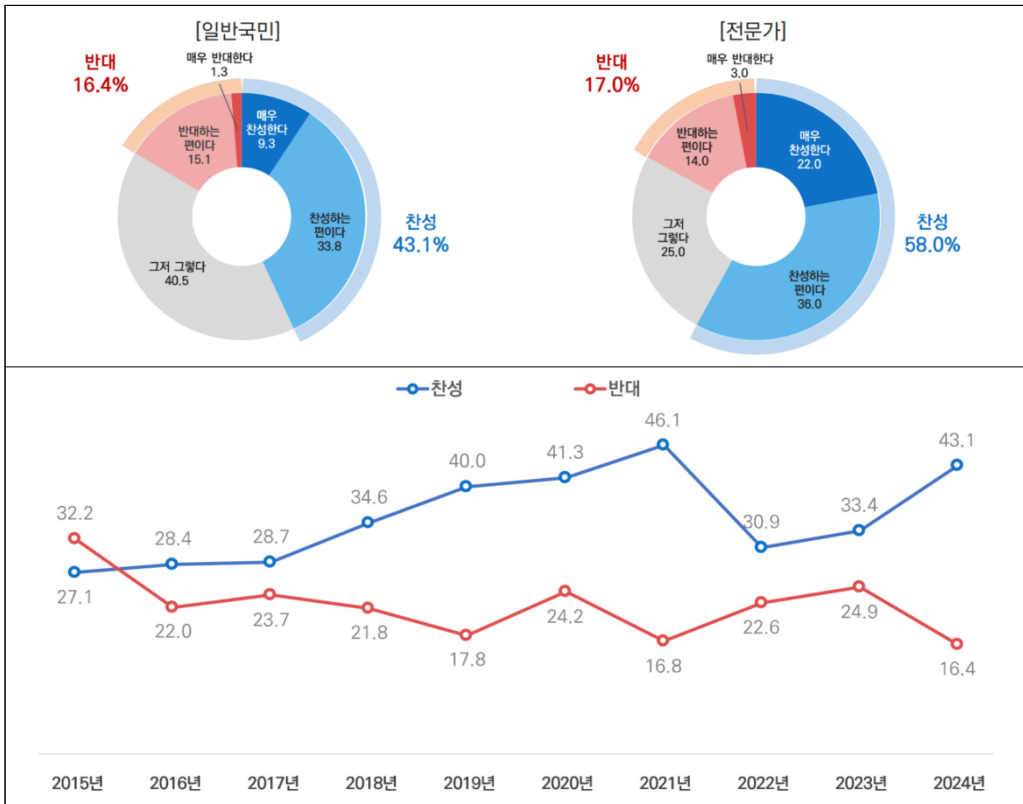




2) 국방예산 확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비율이 43.1%로 ‘반대’(16.4%)하는 비율보다 26.7%p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 설문결과 대비 ‘찬성’하는 비율은 2023년(33.4%) 대비 9.7%p 증가했으나, ‘반대’하는 비율은 2023년(24.9%) 대비 8.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문결과와 비교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16.0%p 증가했으나, ‘반대’하는 비율은 1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58.0%로 ‘반대’(17.0%)하는 비율보다 41.0%p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질문의 내용이 일부 변동되어 연도별 추세 분석간에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까지의 설문문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것으로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묻는 것이었다. 세금 추가 부담은 개인의 직접적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 신중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올해 설문은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결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국방예산 확대에 대해 설문하였기 때문에 추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더 정확한 추세 분석을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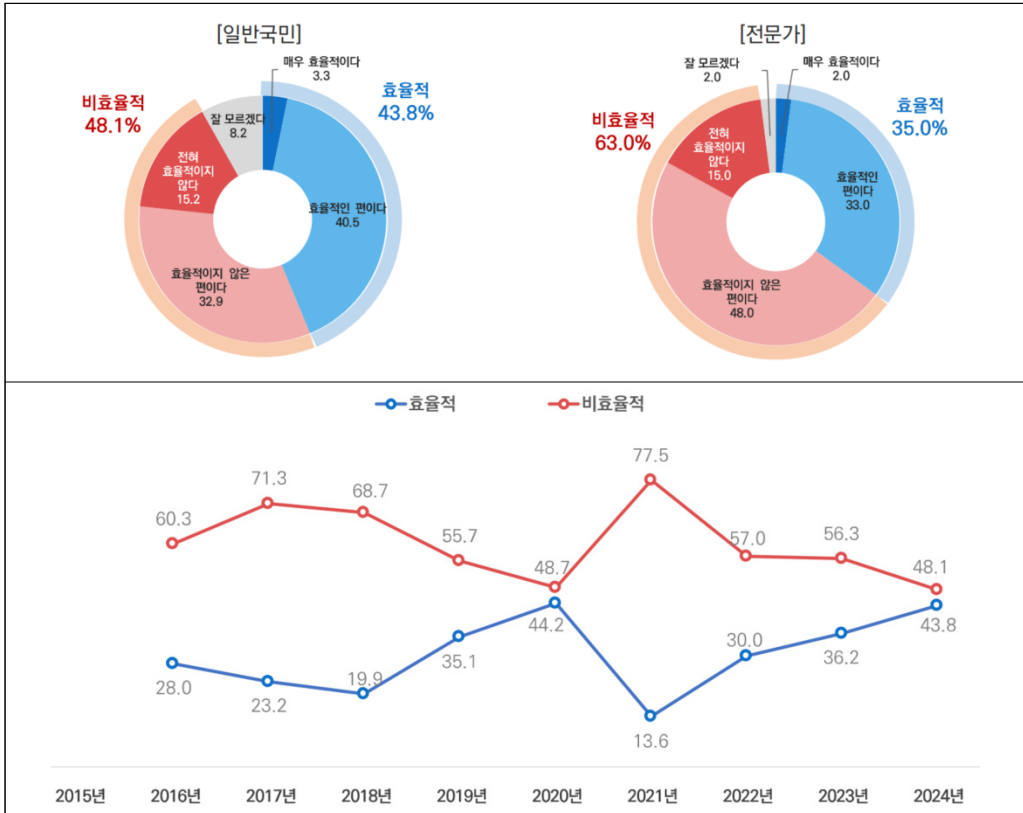
<그림 3-11>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인식



3)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우리 군이 국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일반국민은 ‘효율적이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1%로 ‘효율적’(43.8%)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4.3%p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 대비 ‘효율적이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2023년(56.3%) 대비 8.2%p 감소했으나,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2023년(36.2%) 대비 7.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설문결과와 비교시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p 증가했으나, ‘효율적이지 않음’은 1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올해 설문에서 ‘효율적이지 않음’이 63.0%로 ‘효율적’(35.0%)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28.0%p 더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에 비해 국방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국방예산 집행 효율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양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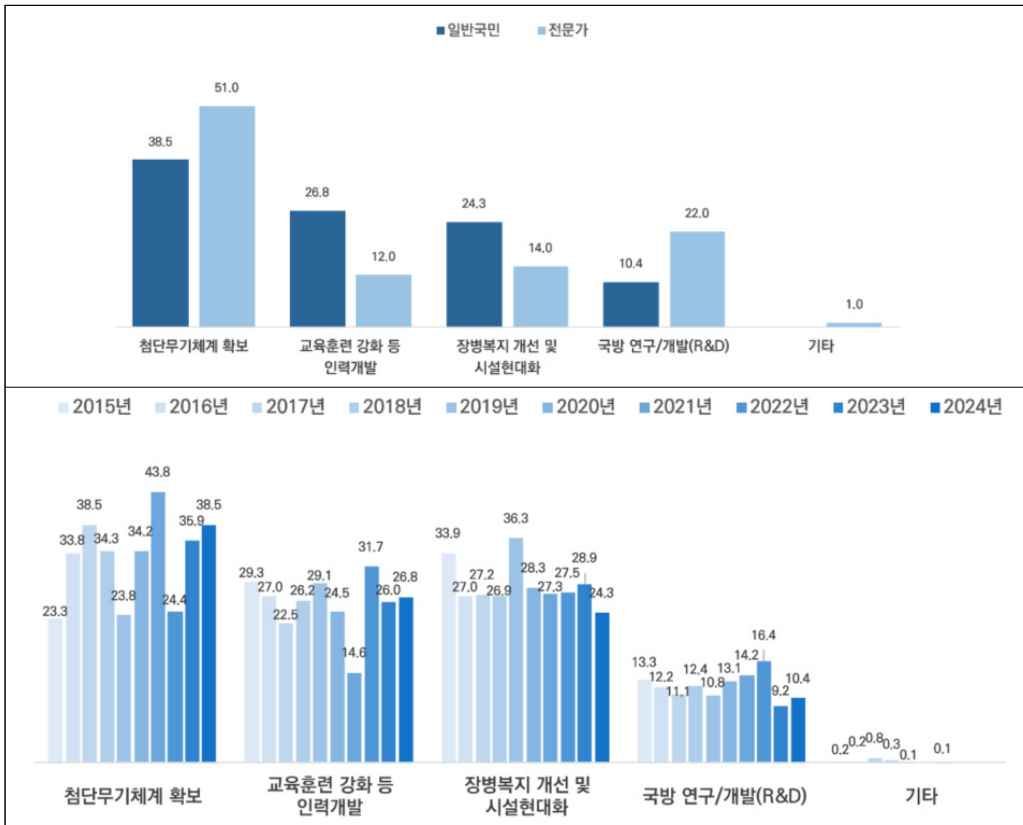
〈그림 3-12〉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4) 국방예산 투자 분야

향후 국방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첨단무기체계 확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 인력개발’(26.8%),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 대비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가 2023년(28.9%) 대비 4.6%p 감소했으나, ‘첨단무기체계 확보’는 2023년(35.9%) 대비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문결과와 비교시 ‘첨단무기체계 확보’는 15.2%p 증가했으나, ‘장병복지 개선 및 시설현대화’는 9.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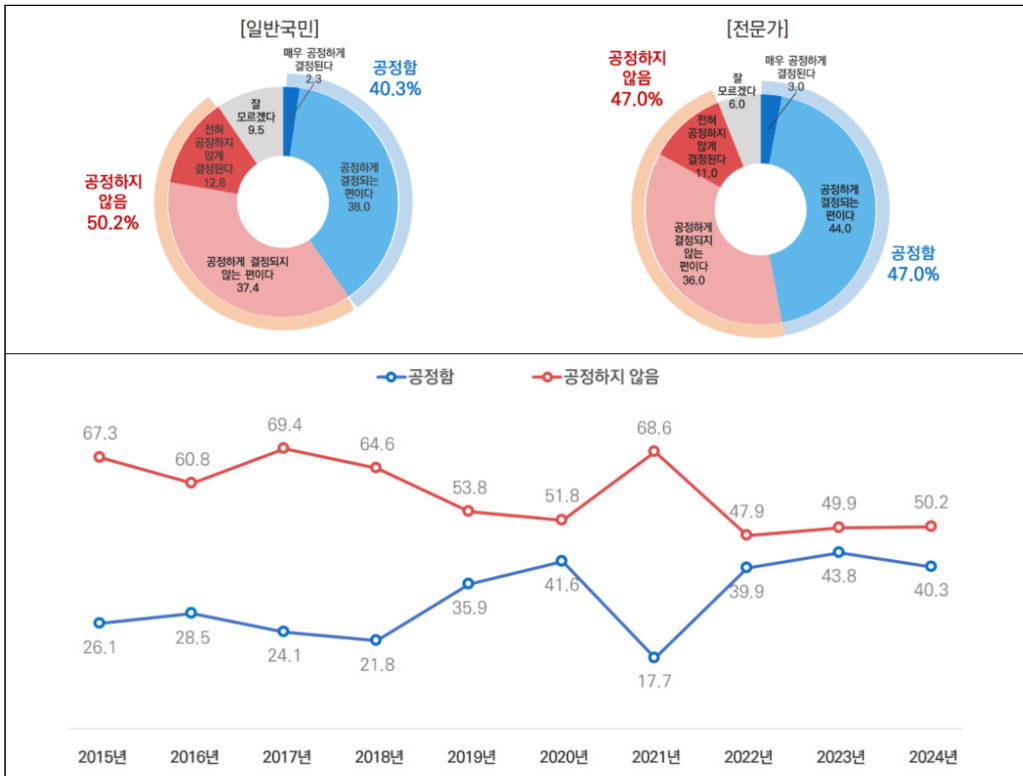
〈그림 3-13〉 향후 국방예산 투자분야



5)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군의 방위력 개선 추진과정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문항에 일반국민은 ‘공정하지 않음’이 50.2%로 ‘공정함’(40.3%)보다 9.9%p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 대비 ‘공정함’은 2023년(43.8%) 대비 3.5%p 감소했으며, ‘공정하지 않음’은 2023년(49.9%)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설문조사결과와 비교시,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p 증가했으나, ‘공정하지 않다’는 17.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음’은 47.0%로 ‘공정함’(47.0%)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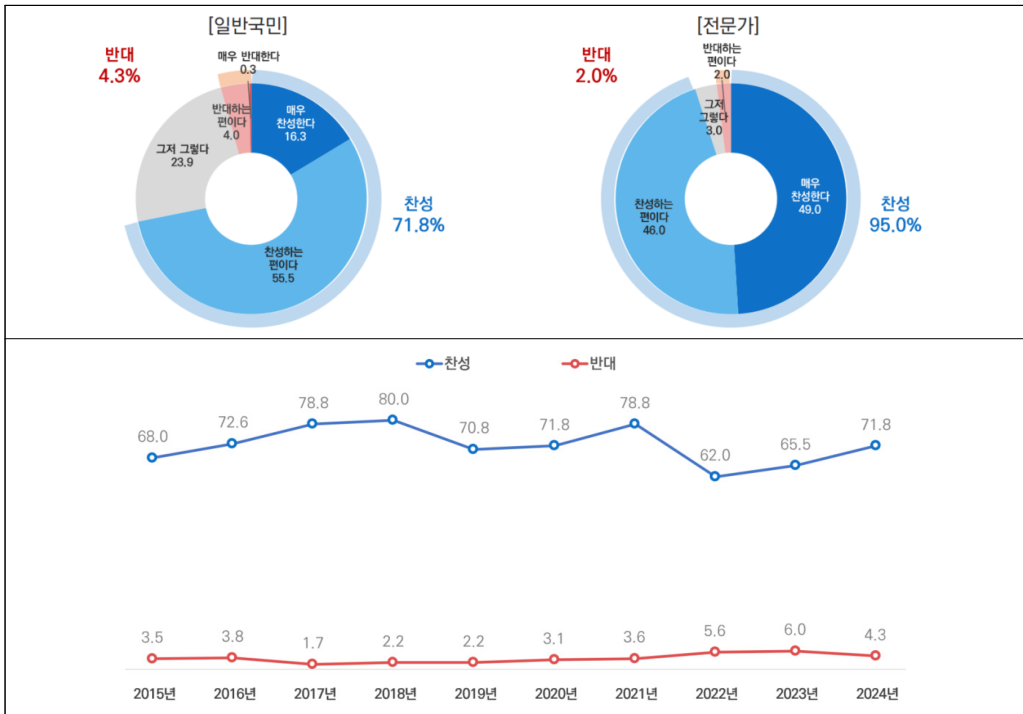
〈그림 3-14〉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6) 비전통 안보 위협 대비 필요성

군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의 비전통적 및 비 군사적 위협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찬성’하는 비율이 71.8%로 ‘반대’(4.3%)하는 비율보다 67.5%p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찬성’하는 비율이 2023년(65.5%) 대비 6.3%p 증가했으나, ‘반대’하는 비율은 2023년(6.0%) 대비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비전통적/비군사적 안보문제 대비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8%p 증가한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95.0%로 ‘반대’(2.0%)라는 응답보다 93.0%p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비전통/비 군사적 위협 대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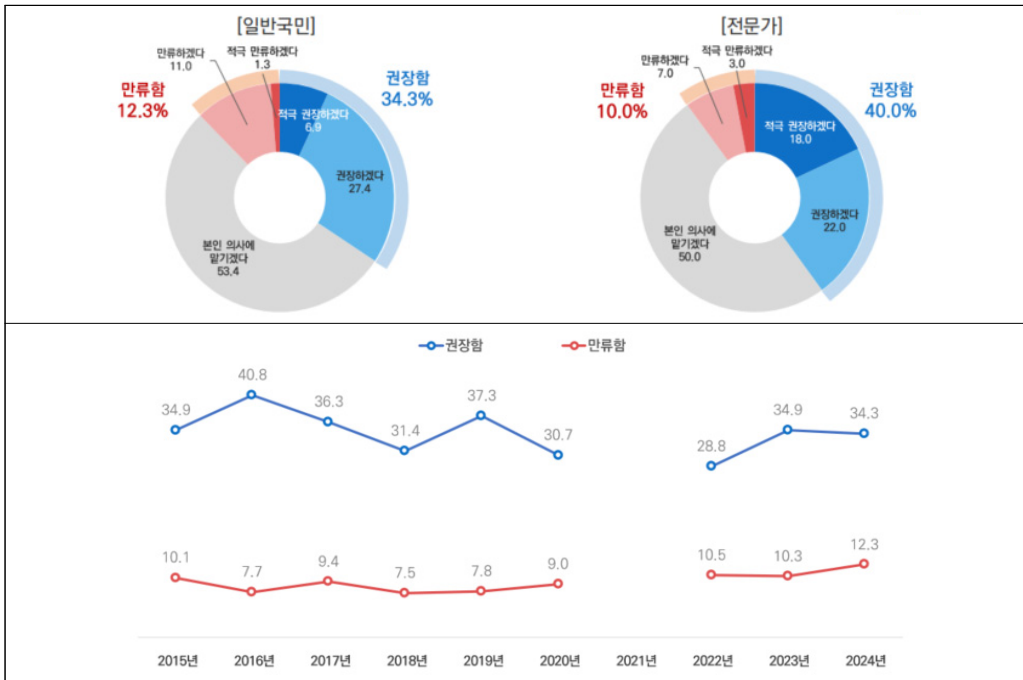


다. 군 복무에 대한 인식

1) 직업군인 추천 의지

가족이나 친지, 친구중에 직업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적극권장 6.9%+권장 34.3%)로 ‘만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12.3% (적극 만류 1.3%+만류 11.0%)보다 22.0%p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일반국민의 ‘권장함’ 응답비율은 2023년 34.9%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만류함’ 응답은 2023년 10.3% 대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6%p 소폭 감소했으나, ‘만류함’은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만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10.0%보다 30.0%p 높았으며, 직업군인을 적극 추천하는 경향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2) 군의 특수성 (제한성)과 적절한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타 직군과 다른 군인의 직접적 특수성(제한성)²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일반국민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5%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19.6%보다 49.9%p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특수성 (제한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8%로 ‘없다’라는 응답 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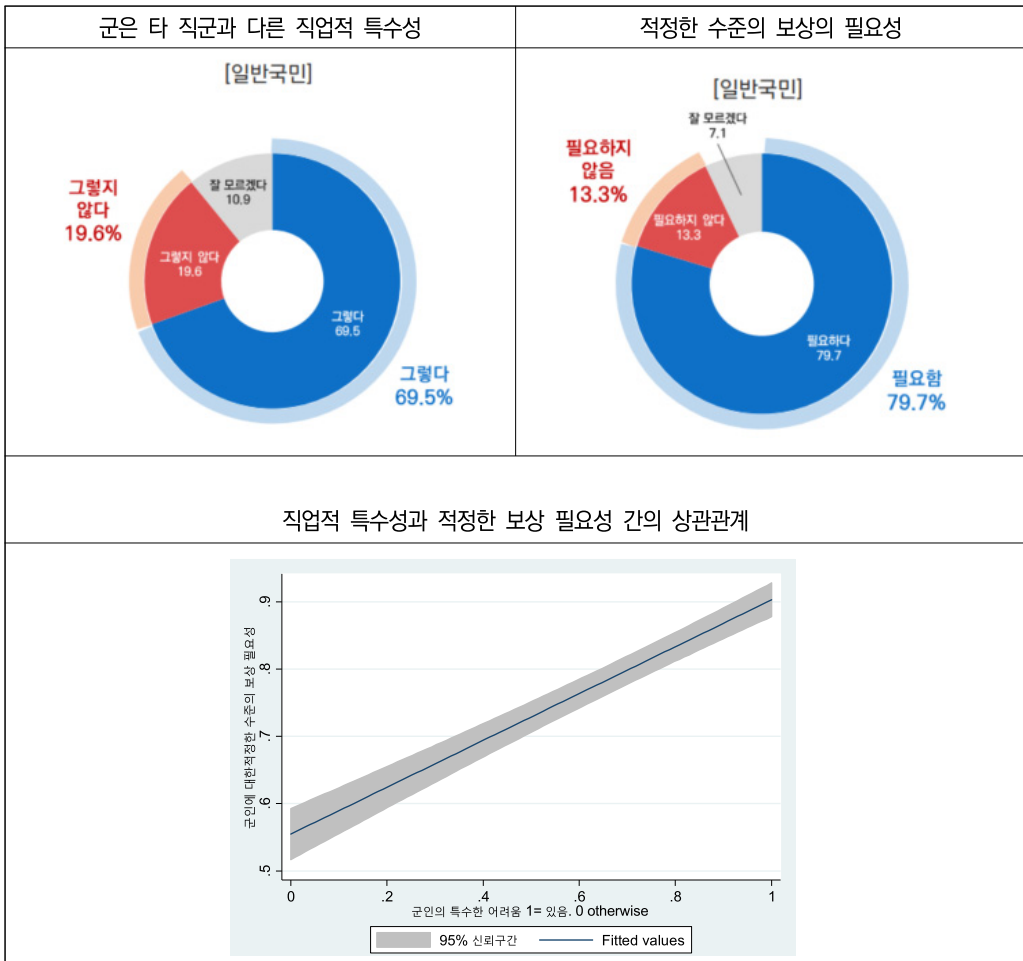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국민은 보상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3.3%보다 66.4%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자가 ‘군의 직업적 특수성’과 ‘군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 필요성’간의 상관관계²⁹⁾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0.398 (p-value<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인이라는 직업이 다른

28) 설문조사에서 군인 특수성을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임무·훈련, 24시간 비상대기(이동제한), 잦은 이사·주거지 제한, 가족과 별거, 연령정년제도로 인한 조기 퇴직” 등으로 제시하였다.

29) 군의 직업적 특수성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였다. 마찬가지로 군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였다.

직업에 비해 생명을 담보로하고, 비상대기 및 위수지역으로 인한 이동 제한, 잦은 이사, 연령정년제도로 인한 조기 퇴직 등 특수성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군인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3-17〉 군의 특수성과 적절한 보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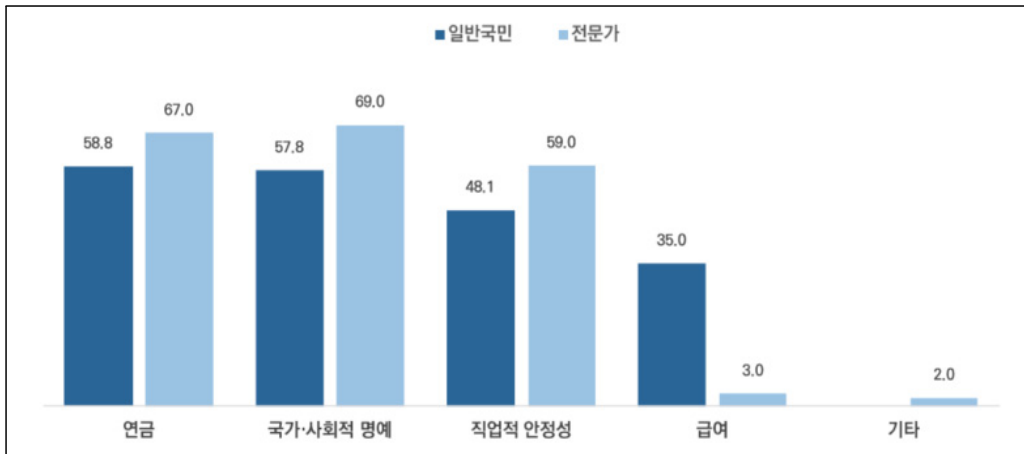


3)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군인의 직업적 매력 요소 중 가장 큰 강점 두 가지 선택을 묻는 문항에 일반국민은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연금’이 5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사회적 명예’(5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그룹은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중 ‘국가·사회적

명예'이 6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금'(6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급여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일반국민 35%, 전문가 3.0%로 급여를 군인의 매력적 요소로 보는 응답은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에서 가장 적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 대비 더딘 간부들의 봉급 인상 및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림 3-18〉 군인의 직업적 매력요소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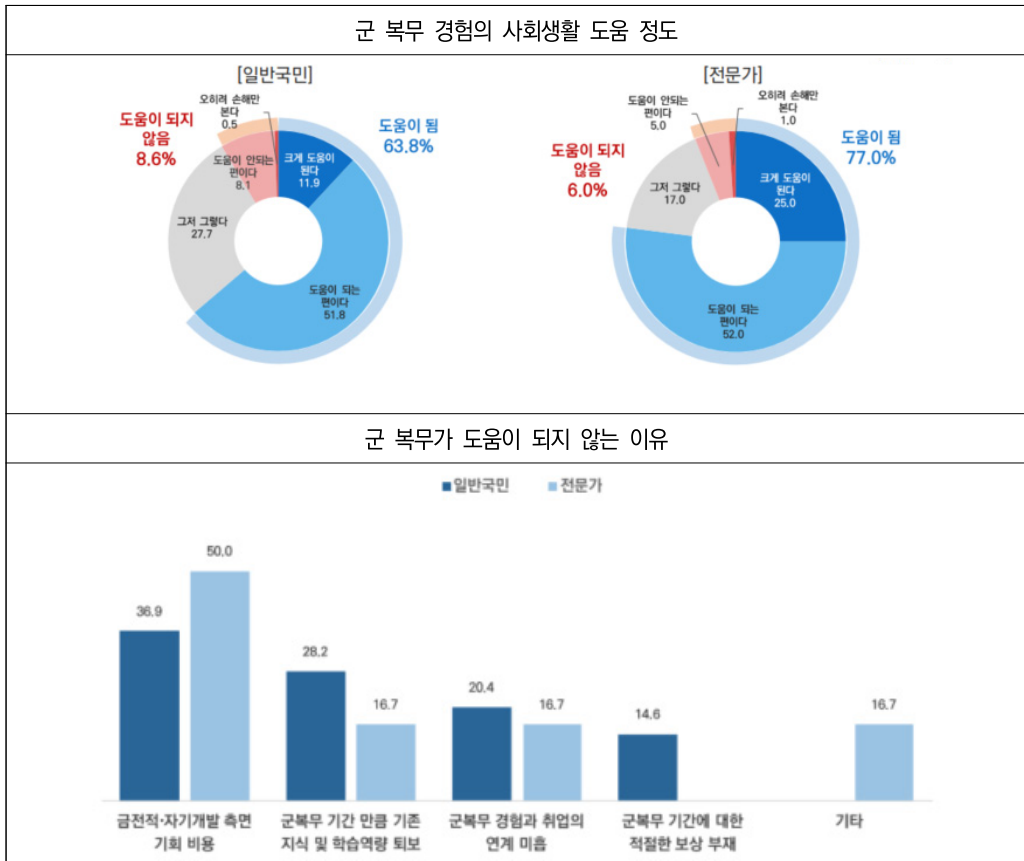
4) 군 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 일반국민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8%로 '도움이 되지 않음'(8.6%)보다 55.2%p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2023년 대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0.5%p(2023년 64.3%)감소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은 0.8%p(2023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을 설문에 포함한 2022년 결과와 대비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3%p 증가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은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도움이 됨'이 77.0%로 '도움이 되지 않음'(6.0%)보다 71.0%p 높게 나타났다.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일반국민은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2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이 21.1%p(2023년 41.5%) 감소했으며,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회 비용'은 17.8%p(2023년 19.1%) 감소한 것이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금전적·자기개발 측면 기

회 비용'이 5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 '기타'(각 1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9〉 군 복무 경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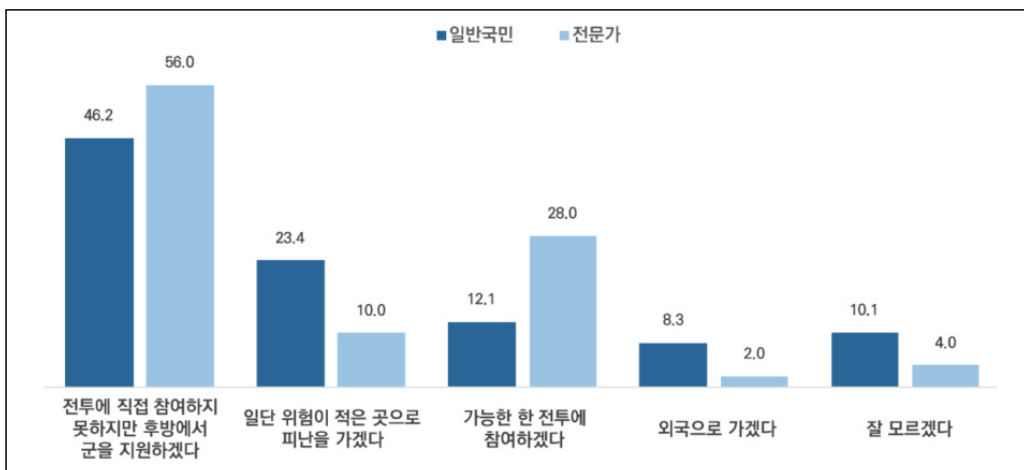
라. 전쟁시 참전 의지 (전시 인력 동원)

1) 전쟁 참전의지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2023년 (13.9%) 대비 1.8%p 감소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비율도 2023년(48.2%) 대비 2.0%p 감소한 반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2023년(3.2%)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시에도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5.6%p 감소한 반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비율은 2.8%p 증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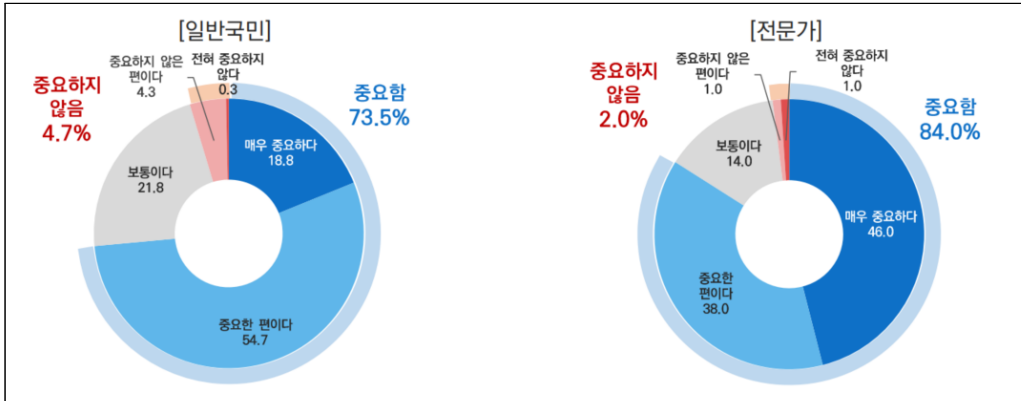
〈그림 3-20〉 전쟁 발발시 대처 방법



2) 동원예비군의 중요성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현재 예비군 제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3.5%로 '중요하지 않음'(4.7%)보다 68.8%p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3년 대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72.5%) 대비 4.8%p 감소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2023년(2.8%) 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현재 예비군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0.6%p 증가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중요'하다는 비율은 84.0%로 '중요하지 않다'(2.0%)는 비율보다 82.0%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1〉 예비전력의 중요성



2. 상관관계 분석

앞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군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국방예산에 대한 인식, 직업군인 추천 의도, 전쟁시 참전 의지 등에 대한 다년도 추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위 네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제시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가 정(+)적인지 아니면 부(-)적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가.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 일반국민」의 1차 데이터로 설문문항은 서열척도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서열척도는 5개 Likert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에서는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등으로 측정되었으나,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동의정도가 높아지도록 역변환 하였다. 일부 설문문항에서는 '⑤잘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어, ⑤번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서열 척도는 군 신뢰도에 대한 인식, 국방예산에 대한 인식, 직업군인 추천 의도, 전쟁시 참전 의지, 북한의 도발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한미동맹의 굳건함,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무기선정의 공정성, 군대 인권에 대한 인식 등 주요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명목척도는 성별, 병역의무 이행여부, 결혼 유무, 학력, 월 가구 소득, 정치적 성향(진보~보수)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주요 종속변수 중 첫 번째, 군 신뢰도는 “귀하는 우리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편입니까”에 대해 “①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③신뢰하는 편이다, ④매우 신뢰한다, ⑤잘모르겠다” 로 측정하였으며, 이 중 ⑤번 항목에 응답한 표본을 제외하고 1,15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국방예산은 두가지 항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은 “ 귀하는 현 GDP의 2.55% 수준인 약 57조원의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현재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②현재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 ③현재수준이 적절하다 ④현재보다 조금 늘려야 한다. ⑤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로 측정하였다.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은 “귀하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반대한다, ②반대하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찬성하는 편이다, ⑤매우 찬성한다”로 측정하였다. 세 번째, 직업군인 추천은 “귀하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중에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대해 “①적극 만류하겠다, ②만류하겠다, ③본인의사에 맡기겠다, ④권장하겠다, ⑤적극 권장하겠다”로 측정하였다. 네 번째, 전쟁 시 참전의지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에 “①외국으로 가겠다, ②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 ③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 ④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 ⑤잘 모르겠다”로 측정하였으며 이 중 ⑤번에 응답한 표본을 제외하고 1,07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주요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기술적 통계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3-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200)³⁰⁾

주요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군 신뢰도 (1:낮은 신뢰~4:높은 신뢰)	2.72	0.68	1	4	
	국방예 산	현재 국방예산 규모 (1:대폭 삭감~5: 대폭 증액)	3.37	0.82	1	5
		국방력 강화 위한 국방예산 증액 (1:매우 반대~5:매우찬성)	3.35	0.89	1	5
	직업군인 추천 (1:적극만류~5:적극추천)	3.28	0.80	1	5	
	전쟁시 참전의지 (1:외국도피~4:전투참여)	2.69	0.82	1	4	
독립 변수	안보상황 (1:매우 불안정~5:매우 안정)	3.03	0.87	1	5	
	본인 안보의식 (1:매우 낮음~5:매우 높음)	3.14	0.82	1	5	
	한미동맹 굳건함 (1:매우 약함~5:매우 굳건)	3.56	0.81	1	5	
	대북 군사력 (1:북한 훨씬 우위~5:한국 훨씬 우위)	3.39	0.99	1	5	

30) 일부 변수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문항은 제외하고 분석하여 표본이 1200개 보다 적음: 군 신뢰도 (n=1,158), 전쟁시 참전의지 (n=1,079), 국방비의 효율적 운용 (n=1,102), 무기선정의 공정성 (n=1,086)

주요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북핵 위협 (1:전혀 아님~5: 큰 위협)	4.01	0.76	1	5
	북한의 도발가능성 (1:매우 낮음~4:매우 높음)	2.49	0.84	1	4
	군대내 인권 (1:전혀 보장안됨~5: 매우 잘 보장)	3.02	0.83	1	5
	국방비의 효율성 (1:매우 비효율~4:매우 효율)	2.35	0.79	1	4
	무기선정의 공정성 (1:매우 불공정~4: 매우 공정)	2.33	0.75	1	4
	비전통 위협 대비 필요성 (1: 매우 반대~4: 매우 찬성)	3.84	0.75	1	5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 (1:매우 불공정~4: 매우 공정)	3.21	0.85	1	5
	군 복무 도움 (1:오히려 손해~5: 크게 도움)	3.67	0.81	1	5
	직업군인의 특수한 어려움 (1:있음, 0:없음 또는 모름)	0.7	0.46	0	1
	현재 병사 봉급수준 (1: 적어도 됨~5:많아야 함)	3.34	1.03	1	5
	직업군인의 매력 요소 (1: 급여수준, 0 나머지 항목)	0.16	0.37	0	1
통제 변수	거주지역 (1:대도시, 2:중소도시, 3:군·읍지역)	1.59	0.55	1	3
	성별 (1: 남성, 0: 여성)	0.60	0.49	0	1
	나이 (실제 만나이)	47.57	15.09	18	74
	교육수준 (1:중졸이하~5:대학원이상)	2.90	0.97	1	5
	결혼 유무 (1:기혼, 나머지:0)	0.71	0.46	0	1
	월 가계 소득 (1:100만원 이하~9:1000만원 이상)	4.97	1.55	1	9
	정치성향 (1: 매우 진보~5:매우 보수)	3.05	0.81	1	5
	군 복무 경험 (1: 복무, 0: 복무경험 없음)	0.55	0.50	0	1

나.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 정도를 확인하게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로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강하다³¹⁾. 부호는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음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변화의 방향이 반대임을 양의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임을 의미한다.

31) 남궁근. 2021. 『행정조사방법론(6판)』. 법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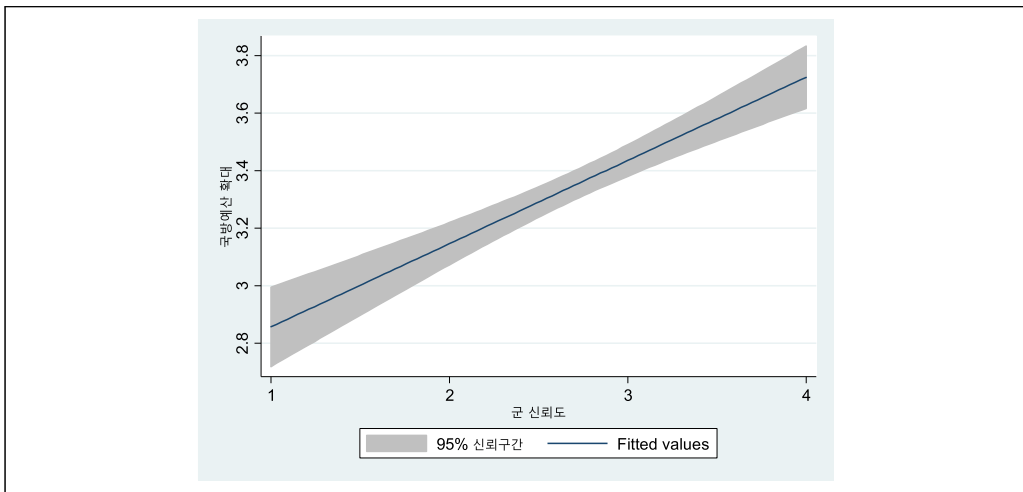
〈표 3-4〉 주요 종속변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	직업군인 추천	전쟁시 참전이지
군 신뢰도	1			
국방예산 확대	0.221***	1		
직업군인 추천	0.201***	0.053	1	
전쟁시 참전이지	0.136***	0.169***	0.111***	1

*p<0.05, ** p<0.01, ***p<0.001

〈표 3-4〉와 같이 주요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에 대해 신뢰도가 높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은 국방예산 확대에 찬성하고, 직업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하고, 전쟁시 참전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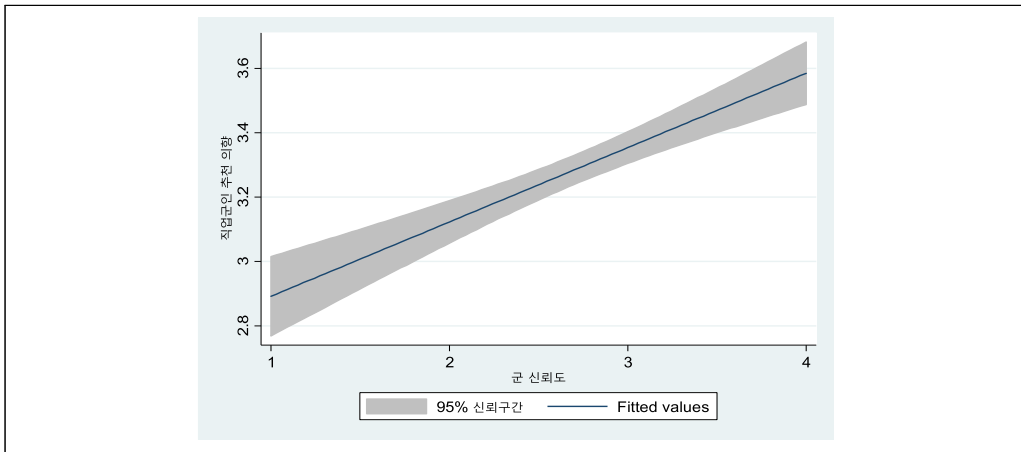
〈그림 3-22〉 군 신뢰도와 국방예산 확대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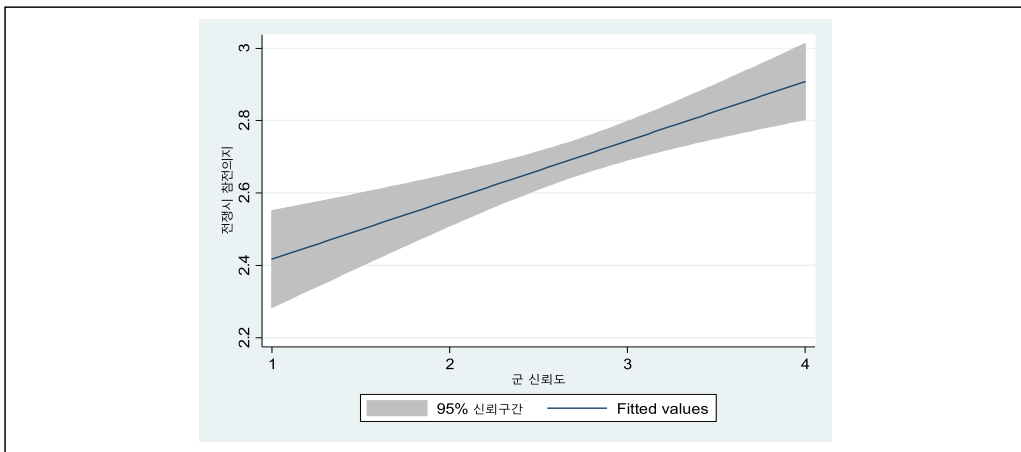
〈그림 3-22〉는 군 신뢰도와 국방예산 확대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군 신뢰도에 대한 응답, y축은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군을 신뢰한다고 응답할수록 국방예산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은 군 신뢰도와 직업군인 추천 의도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군 신뢰도에 대한 응답, y축은 직업군인 추천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군을 신뢰한다고 응답할수록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직업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한다는 응답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3〉 군 신뢰도와 직업군인 추천의지 간의 관계



〈그림 3-24〉 군 신뢰도와 전쟁시 참전의지 간의 관계



〈그림 3-24〉는 군 신뢰도와 전쟁시 참전의지 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군 신뢰도에 대한 응답, y축은 전쟁 시 참전여부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다. 군을 신뢰한다고 응답할수록 외국이나 국내 피난보다는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들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군 신뢰도는 나머지 세 개의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두 변수간의 관계만을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횡단적 회귀분석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횡단적 회귀분석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는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가용한 질문을 변수화하여 국방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 ‘직업군인 추천’, ‘전시 참전의지’ 등 네 가지 주요 종속변수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책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속변수가 서열형 불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Wooldridge, 2016).³²⁾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저자는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인 불완전 공선성 (non-perfect collinearity), 0의 오차항 기댓값 (zero conditional mean), 동분산성 (homoskedasticity)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본가정 테스트를 실시하였다.³³⁾ 먼저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s, or VIF)을 확인한 결과 10을 넘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0의 오차항 기댓값(zero conditional mean)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RESET (Regression specification error test (RESET) for omitted variables)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 모델에 누락된 중요변수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오차항의 동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쉬-파간 테스트 (Breusch-Pagan test)를 실시한 결과, 일부 모델에서 동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robust 표준편차 (robust standard error) 옵션을 적용하였다 (Wooldridge, 2016).

가. 군 신뢰도 영향요인

저자는 정부 신뢰 및 군 신뢰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군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오형나·김재훈 (2016)은 여러 문헌 검토를 통해 정부 신뢰의 주요 결정 요인을 부패, 언론의 자유, 1인당 GDP (소득 수준), 교육수준이라고 설명한다.³⁴⁾ Garb & Malesic (2016)은 군의 높은 신뢰의 요인으로 재난

32) Wooldridge, J. M. 2016.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Cengage learning.

33) *ibid.*

34) 오형나·김재훈. 2016. “4장 정부신뢰 결정요인. 정부신뢰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접근,” 김재훈 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시 효과적인 대응과 국방분야에서의 높은 성과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군의 정치화, 무기 획득 과정 간 낮은 투명성(부패) 등을 제시하였다.³⁵⁾ Yoon(2020)은 국민의 군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인식, 중앙정부 신뢰도, 교육수준,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을 제시하였다.³⁶⁾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일반국민)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정부 신뢰 및 군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군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안보관련 요인으로 ‘북한 도발가능성’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대북 군사력 우위’를 선정하였다.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불안감 증가와 이와 관련한 한국의 북한 대비 군사력 우위가 일반국민의 군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군 조직에 대한 요인으로 ‘군대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과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선정하였다. 병영생활 부조리, 군대 내 사건 및 사망사고 등 군 인권에 관련된 인식과 군 생활에 자체에 대한 인식이 군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하였다. 세 번째, 군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요인으로 ‘징병제의 공정한 시행’, ‘무기 선정의 공정성’ 등을 선정하였다. 군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된다고 인식할수록 군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군 복무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표 3-5〉와 같이 군 신뢰도 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안보요인 중 ‘북핵 위협 인식’과 ‘대북 군사력 우위’가 군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북한 핵무기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북한과 비교하여 한국군이 군사력 우위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 핵 협의그룹을 가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체형 확장억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북핵 억제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국민들에게 군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위협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며,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강군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군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해석된다. 하지만 30세 이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안보요인이 군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Garb, M., & Malešič, M. 2016. “The causes of trust and distrust in the military,” *Defense & Security Analysis*, 32(1), 64–78.

36) Yoon, S. M. 2020.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rust in the Military: Comparatives on Perspectives 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i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10(1), 64.

〈표 3-5〉 군 신뢰도 인식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군 신뢰도 인식		회귀계수		
		전체	18~30세	31~74세
안보	북한 도발 가능성	0.007	-0.115	0.026
	북핵 위협 인식	0.193*	0.334	0.187*
	대북 군사력 우위	0.277***	0.058	0.352***
군 조직	군대 내 인권	-0.028	0.387*	-0.124
	군 복무 도움	0.518***	0.423*	0.573***
국방정책	징병제 공정성	0.561***	0.315	0.628***
	무기선정의 공정성	0.729***	0.813*	0.727***
개인적 요인 (통제 변수)	거주지역	0.312**	0.615*	0.282*
	성별(남성)	0.134	-0.290	-0.210
	나이	-0.018**	-0.111	-0.002
	교육수준	-0.098	-0.165	0.005
	결혼여부(기혼)	0.442**	1.002	0.673**
	소득수준	-0.092	-0.220*	-0.082
	정치성향	-0.002	0.157	-0.032
	군 복무 경험	-0.198	0.143	0.138
샘플 수		1,069 ³⁷⁾	183	886
모형 적합도		Wald Chi-2=206.95***	Wald Chi-2=34.93***	Wald Chi-2=187.20***
Pseudo R-square		0.1244	0.1498	0.1344

*p<0.05, ** p<0.01, ***p<0.001

두 번째, 군 조직요인 중 ‘군 복무 도움’이 국민의 군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군 복무가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군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복무 기간동안의 긍정적인 경험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공유되어 군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 및 31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군대 내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군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30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군대 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군 신뢰도가 높아졌다. 젊은 층으로부터 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영부조리

37) 설문조사 인원은 일반국민 1200명이지만, ‘군 신뢰도’와 ‘무기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한 응답은 1,069명이다.

예방과 선진병영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국방정책의 투명성 측면에서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과 ‘무기선정의 공정성’ 모두 군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병제가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무기 선정 등 방위력 개선사업이 공정하게 결정된다고 인식할수록 군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방정책이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 중 거주지역, 나이, 결혼 여부, 소득 수준등이 군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반면, 개인의 정치성향이 진보 또는 보수인지는 군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군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성향에 따라 양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국방예산 확대 지지 영향요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 확대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일반국민)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로 ‘현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먼저 안보요인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대북 군사력 우위’, ‘한미동맹의 굳건함’ 등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국방정책 요인으로 ‘군 신뢰도’, ‘국방비 효율성’, ‘무기선정의 공정성’, ‘비 전통 위협 대비 필요성’ 등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군 장병 처우 관련 요소로 ‘직업군인의 특수한 어려움’과 ‘병사 봉급 수준’을 선정하였다.

〈표 3-6〉 국방예산 확대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국방예산		현 국방예산 규모	국방력 강화 위한 국방예산 증액
안보	북한 도발 가능성	0.299***	0.269***
	북핵 위협 인식	0.193*	0.205*
	대북 군사력 우위	0.110	0.191**
	한미동맹의 굳건함	0.413***	0.331***
국방 정책	군 신뢰도	0.532***	0.405***
	국방예산 효율성	0.249**	0.222*
	무기선정의 공정성	-0.060	0.373***
	비전통 위협 대비 필요성	-0.053	-0.111

종속변수: 국방예산		현 국방예산 규모	국방력 강화 위한 국방예산 증액
장병 처우	직업군인의 어려움	-0.032	0.236
	병사 봉급 수준	0.147*	0.119
개인적 요인 (통제변수)	거주지역	0.368**	0.353**
	성별(남성)	0.305	0.366
	나이	-0.009	-0.002
	교육수준	0.157	0.040
	결혼여부(기혼)	0.173	-0.090
	소득수준	-0.046	-0.074
	정치성향	0.258**	0.099
	군 복무 경험	-0.314	-0.407
샘플 수		1,032 ³⁸⁾	
모형 적합도		LR Chi-2=156.12***	LR Chi-2=181.67***
Pseudo R-square		0.0635	0.0679

*p<0.05, ** p<0.01, ***p<0.001

〈표 3-6〉과 같이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첫째, 안보 요인은 ‘북한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한미동맹의 굳건함 모두 ‘현 국방예산 규모 확대’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인식할수록 국방예산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북한 위협에 따른 안보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비예산 확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실효적인 한미연합작전을 위한 국방예산 확대에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군을 제외한 대북 군사력 우위’는 ‘현 국방예산 규모의 확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는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전력을 제외한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을 압도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군 신뢰도’, ‘국방예산 운용의 효율성’, ‘무기선정 등 방위력 개선산업의 공정성’ 등은 모두 국방예산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전통 위협 대비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무기 선정 등 방위력

38) 설문조사 인원은 일반국민 1200명이지만, ‘군 신뢰도’와 ‘국방예산 효율성’, ‘무기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한 응답은 1,032명이다.

개선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국방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국방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전략 및 군사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무기 선정 등 방위력 개선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잘 설명해야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감염병, 재난, 테러,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위협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여, 비전통 안보위협 대비를 위한 국방예산 추가 배정이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장병 처우와 관련하여 ‘직업군인의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병사봉급 수준’은 ‘현 국방예산 규모 확대’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월급수준이 2025년 기준 병장기준 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병사 처우 개선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하는 병사들의 정당한 보상 강화를 위해서 현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증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병사들의 봉급인상이 국방력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치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현 국방예산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에는 개인의 정치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보수에 가까울수록 진보적 성향의 개인보다 현 국방예산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확대에는 진보, 보수 등 정치 성향에 따라 국민 여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 직업군인 추천 영향요인

2024년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일반국민)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직업군인을 직업으로 추천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안보관련 요인으로 ‘대북 군사력 우위’를 선정하였다. 주한 미군 전력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들에게 직업군인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국방정책 관련 요인으로 ‘군 신뢰도’,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 ‘무기 선정 등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 등을 선정하였다.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방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직업군인을 추천할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 번째, 군 조직 관련 요인으로 ‘군대 내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군 복무 경험의 효용

성' 등을 선정하였다. 직업군인을 좋은 직업으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 문화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 조직에서 복무하는 구성원의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인식 할수록,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할수록 직업군인을 좋은 직업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부 처우와 관련된 요인으로 '간부 봉급 수준'을 선정하였다. 직업군인의 장점으로는 명예, 연금, 직업 안정성, 봉급 수준 등이 있지만, 이 중 직업군인의 길에 들어서 는 젊은이들은 경제적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성별, 나이, 교육수준, 결혼 여부, 소득 수준, 정치 성향, 군 복무 경험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직업군인 추천 결정요인을 먼저 분석한 후, 30세를 기준으로 연령집단을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한 30세 이하 집단과 직접 복무가 제한되는 31세 이상 집단을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속 변수로 '현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먼저 안보요인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인식', '대북 군사력 우위', '한미동맹의 굳건함' 등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국방정책 요인으로 '군 신뢰도', '국방비 효율성', '무기선정의 공정성', '비 전통 위협 대비 필요성' 등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군 장병 처우 관련 요소로 '직업군인의 특수한 어려움'과 '병사 봉급 수준'을 선정하였다.

<표 3-7>과 같이 먼저 일반국민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안보 관련 요소로 '대북 군사력 우위'는 직업군인 추천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정책 관련 요소로, 군 신뢰도가 높을수록, 징병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이 공정하게 시행된다고 인식 할수록 직업군인 추천의지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군 조직 관련 요소로 군대 내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인식할수록,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직업군인을 추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봉급 수준 관련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직업군인 모집 대상 연령 집단인 18세 이상 30세 이하 일반국민의 응답을 회귀분석한 결과, 안보 및 국방정책 관련 요인은 직업군인 추천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군 조직 관련 요인과 군 간부 봉급수준은 통계적으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군대 내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인식 할수록,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직업군인을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직업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간부 봉급 수준이 직업군인의 좋은 장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명예, 연금 등 다른 요소를 직업군인

의 최대 장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 직업군인 추천의지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군인을 자신의 직업으로 고민하는 젊은 층이 군의 조직문화와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대북 군사력 우위나 국방정책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준다.

30세 이하 젊은 응답자에 비해 31세 이상 중장년층 응답자는 ‘대북 군사력 우위’, ‘군 신뢰도’, ‘무기선정의 공정성’, ‘무기선정의 공정성’ 등 안보와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이 직업군인 추천의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세 이하 젊은 응답자와 다르게, 간부 봉급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직업군인 추천의지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직업군인 추천		회귀계수		
		전체	18~30세	31~74세
안보	대북 군사력 우위	0.120	-0.112	0.177*
국방 정책	군 신뢰도	0.226*	0.035	0.256*
	무기선정의 공정성	0.287**	-0.138	0.383***
	징병제의 공정성	0.223**	0.342	0.190*
군 조직	군대 내 인권	0.235**	0.584**	0.166
	군 복무 도움	0.863***	1.212***	0.813***
간부 처우	간부 봉급	0.244	1.004*	0.126
개인적 요인 (통제변수)	거주지역	0.051	-0.004	0.086
	성별(남성)	-0.286	0.237	-0.517
	나이	0.011	0.006	0.012
	교육수준	0.018	0.017	0.011
	결혼여부(기혼)	-0.199	-0.145	-0.200
	소득수준	-0.048	-0.086	-0.037
	정치성향	-0.050	-0.026	-0.045
	군 복무 경험	0.334	-0.037	0.521
샘플 수		1,069 ³⁹⁾	183	886
모형 적합도		Wald Chi-2=234.83***	Wald Chi-2=62.56***	Wald Chi-2=184.59***
Pseudo R-square		0.0925	0.1332	0.0896

*p<0.05, ** p<0.01, ***p<0.001

39) 설문조사 인원은 일반국민 1200명이지만, ‘군 신뢰도’와 ‘무기선정 공정성’에 대한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한 응답은 1,069명이다.

라. 전시 참전의지 영향요인

일반국민의 전시 참전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4 범국민 안보의식조사(일반국민)에서 사용된 설문문항 중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여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안보요인으로 ‘개인의 안보의식 수준’, ‘대북 군사력 우위’, ‘한미동맹의 굳건함’,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국방정책 요인으로 ‘군 신뢰도’, ‘예비군/예비전력의 중요성’, 등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군 조직 관련 요소로 ‘군대 내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군 복무 경험의 효용성’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원예비군 소집 연령이 만 40세임을 고려하여, 전체 응답자를 분석한 뒤, 만 40세를 기준으로 40세 미만, 41세 이상 응답자를 나누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8〉과 같이 순서형 로짓 회귀분석 결과 첫째, 안보 요인 중 개인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인식 할수록 전시 참전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설문응답자 분석 결과와 41세 이상 응답자 분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원예비군 또는 현역 복무 대상 연령인 40세 이하 응답자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의 안보의식 수준’과 ‘한미동맹의 굳건함’의 영향은 정(+)적인 방향으로 일치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북 군사력 우위’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은 세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국방정책 관련 요인 중 ‘군 신뢰도’는 세 분석 집단 모두에서 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예비군의 중요성’은 전체 집단, 40세 이하 집단, 41세 이상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군이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전쟁승리에 중요한 전력이라고 인식 할수록 전시 안전한 후방지역이나 외국으로 도피하기 보다는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조직 관련 요인인 ‘군대 내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군 복무 경험의 효용성’은 모두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 중 ‘군 복무 경험’이 전체 집단 및 40세 이하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 복무를 경험한 국민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국민에 비해 전시 도피하기 보다는 조국을 위해 직접 참전하거나 참전이 제한시 후방에서 지원할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정기적인 군사훈련, 정훈교육을 통해 개인의 국가관, 애국심, 공공봉사동기 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8〉 전쟁시 참전이지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전쟁시 참전이지		회귀계수		
		전체	18~40세	41~74세
안보	개인 안보의식 수준	0.166*	0.059	0.229*
	대북 군사력 우위	0.036	0.116	0.005
	한미동맹의 굳건함	0.280**	0.144	0.352**
	북한의 도발가능성	-0.139	-0.147	-0.141
국방정책	군 신뢰도	0.164	0.219	0.107
	예비군의 중요성	0.587***	0.588***	0.626***
군 조직	군대 내 인권	0.084	0.014	0.109
	군 복무 도움	0.062	0.050	0.069
개인적 요인 (통제변수)	거주지역	0.232*	0.225	0.283
	성별(남성)	0.302	0.196	0.409
	나이	-0.009	-0.049*	0.027*
	교육수준	0.067	-0.109	0.286*
	결혼여부(기혼)	-0.002	0.476	0.285
	소득수준	-0.060	-0.050	-0.009
	정치성향	-0.106	-0.121	-0.116
	군 복무 경험	0.602*	1.273***	0.189
샘플 수	1,057 ⁴⁰⁾	364	693	
모형 적합도	Wald Chi-2=147.34***	Wald Chi-2=77.39***	Wald Chi-2=116.33***	
Pseudo R-square	0.0686	0.0825	0.0779	

*p<0.05, ** p<0.01, ***p<0.001

IV.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24년 일반국민 대상 범국민안보의식조사의 국방정책에 관한 내용 중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의지’, ‘전쟁 시 참전 의지’ 등 4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위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 신뢰도’와 나머지 세 항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 국방예산 확대, 직업군인 추천의지, 전쟁

40) 설문조사 인원은 일반국민 1200명이지만, ‘군 신뢰도’와 ‘전시 참전이지’에 대한 문항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한 응답은 1,057명이다.

시 참전 의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군 신뢰도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에 매우 중요한 토대임을 의미한다. 이번 장에서는 ‘군 신뢰도’, ‘국방예산 확대에 대한 지지’, ‘직업군인 추천 의지’, ‘전쟁 시 참전 의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국민의 군 신뢰도와 국방정책 지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언

2024년 군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북 핵 위협 인식’, ‘대북 군사력 우위’, ‘군 복무의 효용성’,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 ‘방위력 개선 사업의 공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하며,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군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징병제 및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등 주요 국방정책의 공정성이 군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국방정책이 부정부패 없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결정 및 집행되고 있음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복무 경험과 가까운 30세 이하 집단에서는 군대 내 인권 수준 또한 군 신뢰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대 내 잔존하는 병영부조리를 근절하고, 군 복무가 의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발전적 군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증거에 기반한 (evidence-based) 군의 정책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OECD, 2024). 국방부는 현재의 투입물(inputs) 중심의 정책평가에서 산출물(outputs) 및 산출결과(outcomes) 중심의 정책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정책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군인복지 정책은 투입되는 예산, 인력,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 수 등 투입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투입물 중심의 정책평가는 군인복지정책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예를 들어, 복무만족도 증가, 장기복무 지원을 증가, 사관학교 및 ROTC 지원율 증가 등)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파악하기 제한된다. 산출물 또는 산출결과 중심

의 정책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중차이 분석, 단절적 시계열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정책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오동진, 2024)⁴¹⁾.

2.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지지도 확보를 위한 제언

현재 국방예산 규모(GDP의 2.22%, 57조원)의 적정성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3%로 2021년 40.7%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올해 처음으로 설문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 응답은 43.1%로 ‘국방력 강화’라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했을 때 국방비 증액에 대한 찬성 응답비율이 더 높아졌다. 국방비 예산 증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 핵 위협 인식’, ‘대북 군사력 우위’, ‘한미동맹의 굳건함’, ‘군 신뢰도’,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 ‘보수적 정치성향’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 국민들은 향후 2~3년 내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국방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비전통 위협의 대비 필요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보 및 국방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요 매체가 1, 2순위가 TV 방송과 인터넷 매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24)⁴²⁾이므로,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보 관련 사항 및 우리 군의 대응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단순한 진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여러 매체에서 접하는 안보관련 정보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적 소통을 해야 한다. 이어 더하여, 국방 및 안보분야 전문성이 뛰어난 국방대 교수진, 군 관련 민간기관 전문가, 친군 인사들, 사회 저명인사, 언론인, 종교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한 전략적 소통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낄수록, 무기 선정 등 방위력 개선사업이 공정하게 결정 및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국방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군은 앞에서 언급한 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국방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국방예산

41) 오동진. 2024. “국가안보의 숨은 영웅, 군인가족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보훈논총』, 23(3), 59-91.

42)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2024. 『법국민안보의식조사 (일반국민)』.

의 약 29%를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방혁신 4.0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역설하고,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 체계에 대해 그 필요성과 효과성, 전략적 가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한다. 국민의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강해 질수록 기획재정부와 국회도 국민의 여론을 받아드려 국방비 예산 증액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Cohen(2012)이 제시한 불평등한 대화(unequal dialogue)⁴³⁾에서처럼 군 조직의 리더십은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지도자와 진솔하지만 치열한 논의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전략적 인식을 같이하고, 전시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화가 필요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군사력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

3. 직업군인 지원을 향상을 위한 제언

직업군인 추천의지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직업군인을 추천하겠느냐는 설문에서 일반국민은 ‘권장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만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12.3%보다 22%p 높았다. 하지만 2023년 결과 대비 ‘권장함’은 0.6%p 소폭 감소한 반면, ‘만류함’은 2.0%p 증가하였다. 직업군인 추천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군 신뢰도’, ‘방위력 개선사업의 공정성’, ‘징병제의 공정성’, ‘군대 내 인권 보장 인식’, ‘군 복무의 효용성’, ‘간부 봉급 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국방 정책 측면에서 일반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방위력 개선 사업 및 징병제도 등 국방정책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 할수록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직업군인을 직업으로 권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따라서, 군 신뢰도와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군 조직 내 인권 보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군 복무가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직업군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군 복무 경험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30세 이하 청년층 집단에서 ‘군대 내 인권 보장 인식’과 ‘군 복무의 효용성’이 직업 추천의지에 미치는 효과가 중·장년층 집단(31~74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직업군인 추천 또는 지원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병영 내 잔존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선진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전역 후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돕기위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국가보훈부의 제도적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

43) Cohen, E. A. 2012.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 Simon and Schuster.

다. 1973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은 제대군인 지원 제도로 GI Bill과 제대군인 취업우대 정책 (Veterans' Preference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제대군인의 사회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44년에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지원 법안(Servicemen's Readjustment Act)」, 일명 GI Bill을 도입하였다 (Mettler, 2002)⁴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으로 복귀한 모든 제대군인들에게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지원, 직업실무교육 지원,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등을 제공하여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10년간 제대군인 220만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560만명이 직업실무 교육을 수료하였다 (Mettler, 2002). 1944년 처음 도입된 GI Bill은 이후 국제 분쟁 참전 상황에 따라 법령 추가 및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한 제대군인들의 교육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Post-9/11 GI Bill of 2008」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36개월 복무한 인員에게 최대 3년동안 연간 최대 \$27,120의 학비와 \$1000의 서적 및 사무용품비가 지원되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자신의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혜택 사용 기한(deadline)도 없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으로 Post-9/11 제대군인의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은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mber & Vespa, 2020)⁴⁵⁾. 미국 정부는 또한 2009년 연방정부 내 제대군인 고용 확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 정부내 제대군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인 「제대군인 고용위원회(Council on Veterans Employment)」설치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 내 제대군인 공무원은 2021년 9월 기준 연방정부 전체 고용인원의 30%(약 63만명), 연방정부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약 5만명)을 차지했다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23)⁴⁶⁾

직업군인의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중견간부의 조기 전역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의 처우 뿐 아니라 군인가족들의 복지도 향상시켜야 한다. 군인가족은 군인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군인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군인들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군인가족의 생활만족도는 군인의 장기복무 지원 또는 조기 전역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다 (Le Menestrel & Kizer, 2019)⁴⁷⁾. 군인가족 복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美 백악

44) Mettler, S. 2002. "Bringing the state back in to civic engagement: Policy feedback effects of the GI Bill for World War II vetera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2) 351-365.

45) Gumber, C. & Vespa, J. 2020. "The employment, earnings, and occupations of post-9/11 veterans.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46)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23. "Employment of Veteran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Fiscal Year 2021)."

47) Le Menestrel, S., & Kizer, K. W. (Eds.). 2019. *Strengthening the military family readiness system for a changing American society*.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Engineering-Medicine.

관은 2021년 정책보고서에서 군인가족 복지가 군의 준비태세 유지 및 국가방위에 필수요 소임을 밝히고,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6개의 최우선 정책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White house, 2021)⁴⁸. 美 국방부는 가족의 기능발휘, 생존 또는 발전을 위협하는 여러 방해요인들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는 가족의 능력을 가족 준비태세(military family readiness)라고 정의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군인가족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Le Menestrel & Kizer, 2019). 우리 군도 군인가족 복지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담은 국방부 수준의 정책보고서와 관련 지침 문건을 발간하고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군인가족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오동진, 2024).

4. 전시 참전의지 향상을 위한 제언

전쟁 발생시 대처 방법을 묻는 설문에서 일반국민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대비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2023년 대비 1.8%p 감소하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비율도 2023년 대비 2.0%p 감소한 반면,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2023년 대비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참전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개인의 안보의식 수준’, ‘한미 동맹의 굳건함’, ‘예비군의 중요성’, ‘군 복무 경험’ 등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측면에서, 개인의 안보의식이 높을수록,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고 인식할수록 전시 해외로 도피하기 보다는 전투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북한 정권의 실체, 북한의 군사위협 수준 및 우리군의 대응 능력, 미래 전장환경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정보를 여러 매체를 통해 정확히 제공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안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증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간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과와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을 국

48) White house. 2021. *Strengthening America's Military Family: Matching Their Devotion: Deepening Our Commitment to the Families, Caregivers, and Survivors of Service Members and Veterans*. A Report of the Joining Forces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방 정책 측면에서, 일반국민은 예비군 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 할수록 전쟁시 참전의 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시 예비군의 역할과 전략적 중요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예비군 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이스라엘은 정규군 18만명의 2.5배에 달하는 46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대 초반 전역 후에도 여성은 34세, 남성은 40~45세까지 예비군으로 연간 55일을 훈련하고 전투경험도 많아, 전투능력이 정규군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선일보, 2024)⁴⁹. 또한 3년에 1번은 25일간 실제 작전에 배치되기도 하며, 훈련도 거주지 주변이 아닌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돌아가 과거의 전우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세계일보, 2013)⁵⁰. 이러한 강도 높은 예비군 복무를 보상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한달에 \$2,34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⁵¹.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무기체계를 향상시키고, 훈련기간을 늘리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9) 조선일보. 2024.10.4. “전쟁 겪은 정예 예비군만 46만명… 이스라엘 강군의 비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0/14/HKBCDSCNO5BG7BZQFWBFAYBKUE/>

50) 세계일보. 2013.02.14. “[안보 강소국을 가다] ⑤ 이스라엘 국방정책-징병제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213023911>.

51) Jerusalem Post. 2023.11.09. “Knesset raises minimum wage for reserve soldiers.”

<https://www.jpost.com/israel-news/article-772464>.

참고문헌

-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4. 『2024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결과보고서』.
- 국방부. 2024.08.27. “보도자료: 2025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6% 증가한 61.6조원.”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550>
- 남궁근. 2021. 『행정조사방법론(6판)』. 법문사.
- 동아일보. 2024.02.12. “지원을 급감에...ROTC 필기시험 15년만에 폐지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3/123500324/2>
- 머니투데이. 2024.04.24. “싸울 군인이 없다...육군 부사관, 부대 모집계획절반도 못 채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2317383136186>
- 세계일보. 2013.02.14. “[안보 강소국을 가다]⑤이스라엘 국방정책·징병제도.”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213023911>
- 오동진. 2024. “국가안보의 숨은 영웅, 군인가족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보훈논총』, 23(3) 59-91.
- 오형나·김재훈. 2016. “4장 정부신뢰 결정요인. 정부신뢰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빅데이터를 이용한 접근”. 김재훈 편. 한국개발연구원 (KDI).
- 조선일보. 2023.10.03. “사관생도 5년간 545명 자퇴... 1학년이 제일 많아”.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0/03/YHQ52P2UOBEL5BLFDA6IXPCJNA/
- 조선일보. 2024.10.14. “전쟁 겪은 정예 예비군만 46만명... 이스라엘 강군의 비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10/14/HKB CDSCNO5BG7BZQFWBFAYBKUE/>
- 지표누리. 2024. 『기관 신뢰도』.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8&idxCd=8048>
- 한국경제신문. 2024.05.24. “軍간부 9000명 전역...‘국방 허리’ 휘청.”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420071>
- Cohen, E. A. 2012. *Supreme command: Soldiers, statesmen and leadership in wartime*. Simon and Schuster.
- Eichenberg, R. C., & Stoll, R. 2003. “Representing defense: Democratic control of the defense budget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7(4) 399-422.
- Garb, M., & Malešič, M. 2016. “The causes of trust and distrust in the military,” *Defense & Security Analysis*, 32(1) 64-78.
- Gallup International. 2024. “Fewer people are willing to fight for their country compared to ten years ago.” <https://www.gallup-international.com/survey-results-and-news/survey-result/fewer-people-are-willing-to-fight-for>

-their-country-compared-to-ten-years-ago

- Gumber, C., & Vespa, J. 2020. "The employment, earnings, and occupations of post-9/11 veterans.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 Hartley, T., & Russett, B. 1992. "Public opinion and the common defense: who governs military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4) 905-915.
- Huntington, S. P. 1961. *The Common Defense: Strategic programs in national politics*.
- Inglehart, R. F., Puranen, B., & Welzel, C. 2015. "Declining willingness to fight for one's country: The individual-level basis of the long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52(4) 418-434.
- Jerusalem Post. 2023.11.09. "Knesset raises minimum wage for reserve soldiers." <https://www.jpost.com/israel-news/article-772464>
- Josselin, D., & Malizard, J. 2022. "Determinants of defense spending: the role of strategic factors in France". *Defence and Peace Economics*, 33(8) 938-955.
- Krebs, R. R., & Ralston, R. 2022. "Patriotism or paychecks: Who believes what about why soldiers serve". *Armed Forces & Society*, 48(1) 25-48.
- Krebs, R. R., Ralston, R., Balzacq, T., Blagden, D., Shenhav, S. R., & Steinbrecher, M. 2024. "Citizenship Traditions and Cultures of Military Service: Patriotism and Paychecks in Five Democracies". *Armed Forces & Society*. 2024.
- Le Menestrel, S., & Kizer, K. W. (Eds.). 2019. *Strengthening the military family readiness system for a changing American society*.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Engineering·Medicine.
- Margulies, M., & Blankshain, J. 2002. "Specific sources of trust in generals: Individual-level trust in the US military". *Daedalus*, 151(4) 254-275.
- Mettler, S. 2002. "Bringing the state back in to civic engagement: Policy feedback effects of the GI Bill for World War II vetera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2) 351-365.
- Moskos Jr, C. C. 1977. "From institution to occupation: Trends in military organization". *Armed forces & society*, 4(1), 41-50.
- Moskos, C. C. 1986. "Institutional/occupational trends in armed forces: An update". *Armed Forces & Society*, 12(3), 377-382.
- OECD. 2013.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4.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2024*

- Results: Building Trust in a Complex Policy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2024. <https://doi.org/10.1787/9a20554b-en>.
- Rand Corporation. 2019. *Will to fight: returning to the human fundamentals of war.* https://www.rand.org/pubs/research_briefs/RB10040.html
- Saad. L. 2023. “Historically Low Faith in U.S. Institutions Continues”. GALLUP.
- Simon, C. A., Lovrich, N. P., Verboncoeur, K. G., & Moltz, M. C. 2024. “Re-examining Willingness to Fight for One’s Country: Exploring Nature of Conflict and Citizenship Status Effect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med Forces & Society*. 0095327X241269905.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23. *Employment of Veteran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Fiscal Year 2021)*.
- Wang, A. H.-E., & Eldemerdash, N. 2023. “National identity, willingness to fight, and collective a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60(5) 745-759. <https://doi.org/10.1177/00223433221099058>
- White house. 2021. *Strengthening America’s Military Family: Matching Their Devotion: Deepening Our Commitment to the Families, Caregivers, and Survivors of Service Members and Veterans.* A Report of the Joining Forces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2021.
- Wooldridge, J. M. 2016.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Cengage learning.
- Yoon, S. M. 2020. “Socio-Economic Factors Affecting Trust in the Military: Comparatives on Perspectives 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si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10(1) 64.
- Younis. M. 2023. “Confidence in U.S. Military Lowest in Over Two Decades,” GALLUP. 2023. <https://news.gallup.com/poll/509189/confidence-military-lowest-two-decades.aspx>

병역제도와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실태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 상 목*

- I. 연구배경과 과제의 제기
- II. 병역 제도의 선택과 환경변화
- III. 병영문화와 집단전투력
- IV. 요약 및 정책 제언

요약문

모병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절대과반수 이상이 징병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전문가집단은 그 반대로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군인은 과거 2020년~2023년 동안 지속되었던 모병제 선호에서 2024년도에 다시 징병제선호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국민의 약 1/3이 징병제 보완에 관심을 보였으나 전문성과 전투력향상의 관점에서 보완하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병역 부담의 형평성과 균등성을 개선하자는 의견인지가 불명확하여 구체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군인들, 특히 병사들이 징병제 시행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병역특례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축소 또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와 병역특례가 불공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병역특례 감축,

* 국방대 명예교수

현역 판정률 상향, 여군간부 확대 등의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병역대상인구 축소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 생각된다. 작금의 심각한 문제는 젠더갈등을 비롯해 병역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심화·확산되고 있어 사회결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향된 제안에 대해서는 비록 특정제안(예를 들어 여성징집 의무화)이 문제해결에 일조하더라도 포괄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엄격한 여과를 필요로 한다. 현행 징병제의 복합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괄목할 만한 생산성향상과 기능주의 노동분업 및 직업전문화, 병역의 형평문제 해소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비추어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불가피하고, 점진적이고 광범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 마스트플랜에는 미시적으로는 필요인력의 확보 및 활용 방안, 보수·계급·진급 체계, 거시적으로는 군인력구조와 군사전략 및 국가경제력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은 청사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병사봉급인상은 개인의 기회비용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가봉사를 위한 징집인력 개인의 현물세가 보수로 탈바꿈하여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와 유사한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전체국방예산이 인상되지 않으면 병사봉급의 증가분이 다른 국방예산 항목에서 충당될 여지가 크고, 특히 방위력개선과 전력유지 항목에서 충당되는 경우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이 초급간부들의 봉급인상요구로 이어져 군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기간제 간부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기형적이고 인위적인 작금의 병사봉급인상을 조속히 지양하고, 대신에 군복무 이행자가 제대후 경제활동시 일정기간 동안 과세공제액을 높이거나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정책 실현방안으로 제안한다. 이 정책은 병역의무 당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전역 후 경제활동기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가적으로는 재정부담을 분산완화하여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병영문화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기정체성 확립, 다른 한편으로는 결속·신뢰에 기반한 집단전투력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친근성 및 혁신성 평가가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고무적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청렴성 면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방성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응답이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평가가 혁신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군대내 인권보장의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병영생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외부적으로는 군대집단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소속 구성원의 자긍심과 직업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개선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에 군인 자신들은 가장 시급한 분야로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병영내 학습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병사가 간부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조직내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직무흥미와 성취도를 묻는 질문에서 계급이 낮을수록 흥미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와 간부의 차이가 매우 크고, 군대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의 1/4이 본인의 직무에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병영조직의 문화적 가치관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병영문화의 물리적 환경(병영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독서여건과 체육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유시간과 정보화환경이었다.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정보화환경의 개선 희망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욕구는 심리적 안정, 외부 소통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고 간부들 보다는 병사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주된 이유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보안문제증가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0% 이하였다.

1. 연구배경과 과제의 제기

군대집단은 협의로는 전투력향상, 광의로는 군사력강화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그에 따라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무기체계와 훈련된 인력의 가용성, 국방예산을 뒷받침하는 국가경제력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관점 이외에도 인력공급의 제도적 수단인 병역제도와 군대집단의 내부 결속력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병영문화의 역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요소이다. 병역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투력극대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제도 선택의 현실적 이면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측면의 수많은 논리들이 충돌과 타협을 거듭한다. 그에 따라 선택된 특정제도는 최적의 전투력발휘에 기초하기 보다는 쟁점의 결과물로서 시대적 상황의 불완전 복합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병역제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정치적으로는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충돌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갈등 양상은 군필자가산점제도를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갈등뿐만 아니라 병역부담의 균등성 측면

에서도 표출된다. 병역부담의 균등성 논쟁은 병역의무 필자와 미필자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병역의무 이행 형태(현역복무,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원 등의 대체복무)와 복무기간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자 사이에 팽배해 있고, 사회상황을 반영하듯 병역제도 개선과 전환 요구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논쟁은 출산기피, 초혼연령상승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대집단의 인적 구성은 직업군인의 비중보다는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징집되는 인력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 문화를 지칭하는 병영문화는 사회발전과 일면 궤를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별개로 고립되어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현재의 지배적 병영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전투력발휘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병역기피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에 따라 병영문화 개선은 끈 결속력과 동기부여 고취, 그리고 집단전투력과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2024년도 범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일반국민과 군인) 결과를 기초로 제II장은 병역 제도의 선택과 환경변화,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병영문화와 집단전투력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병역제도 선택의 제 영향요소는 무엇이고 그들 영향요소의 인과구조는 어떠한가?
2. 병역제도 선택에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 그리고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군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괴리가 존재하며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병력 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고, 부족한 병력 수를 채우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선호하며, 인구동태적 환경은 현재의 징병제도에 어떠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가?
3.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되고 있는 대폭적인 병사봉급인상은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봉급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표면화는 징집인력 개인의 기회비용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4.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징병대상을 둘러싸고 남녀 젠더갈등 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갈등이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는가?
5. 개인의 전투력 발휘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병영문화는 집단전투력 발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6. 국민들은 군대구성원의 금지와 자기정체성 확립에 기초가 되는 병영문화를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혁신성, 친근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또한 병영 문화를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병영 환경)에 대해 군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7. 군인은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점에서 본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고 있고 직무수행에 대한 성취감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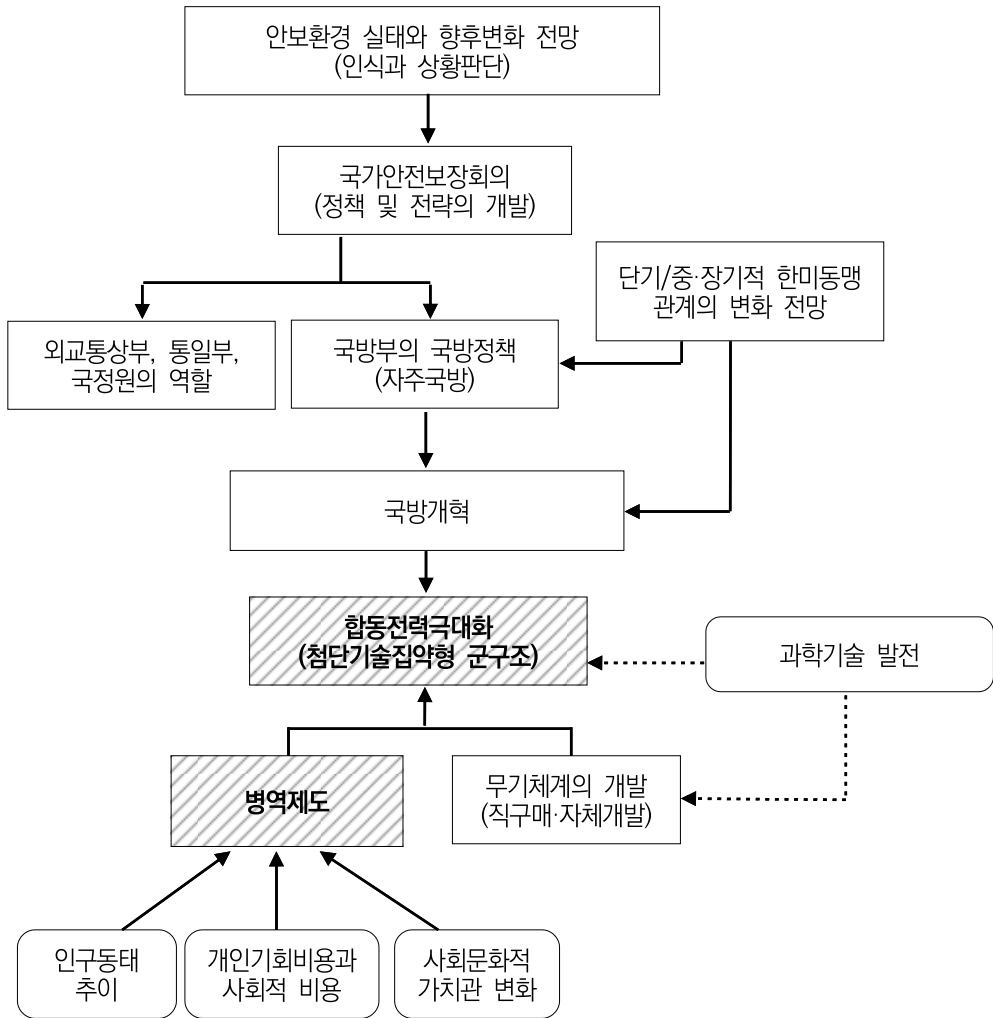
II. 병역 제도의 선택과 환경변화

1. 분석의 틀: 병역제도선택의 제 영향요소와 인과구조

병역제도의 선택은 한편으로는 국가안보 및 군사적 요인, 다른 한편으로는 비군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안보 및 군사적 요인의 가장 근본적인 요지는 <그림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안보환경의 실태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국가안보정책과 전략의 수립에 초석이 되고, 국가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인 국방정책은 우방국과의 단기 및 중·장기적 동맹관계를 고려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개혁의 핵심은 육·해·공군의 합동전력 극대화에 있다. 합동전력 극대화는 군 구조를 첨단기술 집약형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군 구조변화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발전과 새로운 군사전략의 결과물이다.

한편, 병역제도는 앞서 언급한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협의의 군사력은 인력과 무기체계의 조합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인구동태추이는 병역제도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재래식전투의 개념에서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적은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해 노동집약적 군구조가 선호된다. 반대로 무기체계중심의 기술집약적 군 구조는 인력공급의 제약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거나 또는 인건비가 저렴하더라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는 전투력강화를 위해 그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림 4-1> 병역제도의 제 영향요소와 인과적 구조



병역제도 선택의 또 다른 비군사적 고려요소는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다. 징병제도 하에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포함하는 인력 개인이 복무기간동안 받는 상징적 의미의 보수와 민간 경제활동 시 받을 수 있는 보수와의 차이를 개인의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이 비용이 클수록 개인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라 함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병사의 보수와 비가시적인 병사개인의 기회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클수록 노동집약적 인력중심의 징병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첨단 기술집약형 군 구조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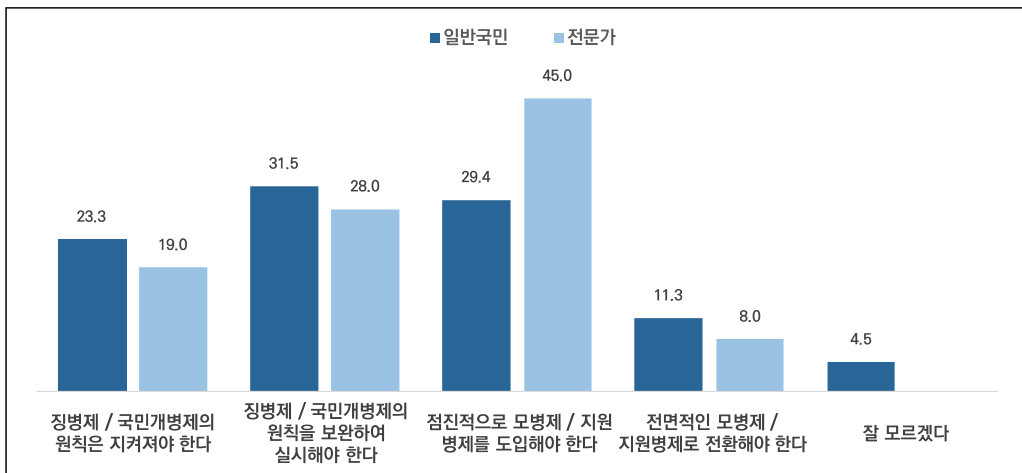
끝으로 병역제도 선택에 간과하지 말아야 또 다른 비군사적 관점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갈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흡수능력이다. 징병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강 권력에 의한 징집으로 이미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인력이 병역대상인구 보다 적은 부분징집제에서는 유희인력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여부와 그 형태, 강도 및 기간에 따라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대상에서 여성을 제외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남성의 동의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가에 따라 병역제도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언제라도 표출될 수 있는 소위 잠재된 사회갈등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남녀관계가 상호보완적이 아니라 경쟁관계의 성격을 띠어 병역의무를 남성으로 제한하는 병역법의 유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 병역제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 실태와 차이에 대한 논의

본 절에서는 병역제도 선택을 두고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및 군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의 차이가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안보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 대해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29.4%),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23.3%)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2023년과 비교하여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1.3%로 2023년에 비해 5.4%p 증가하였으며, ‘징병제·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31.5%로 4.7%p(2023년 3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모병제 전환에 대한 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모병제 보다는 징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국민의 인식과는 달리 전문가집단의 45.0%는 ‘점진적으로 모병제·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전면적인 모병제·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8.0%)를 합칠 경우, 전문가집단의 다수가 모병제 전환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자아낸다. 일반국민이 전면징집제(국민개병제도)의 특성으로 작용하는 병역부담의 균등성과 형평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에 안보전문가들은 징병제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노동집약적 군 구조와 비전문성 및 징집된 병사의 관리 부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반국민이 징병제 보완에 관심을 갖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사 결정권자들은 국민들의 보완의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징병제보완이 전문성과 전투력향상의 관점에서 보완하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병역부담의 형평성과 균등성을 개선하자는 의견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후속연구와 조치가 요망된다.

한편, 군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기별로 징병제와 모병제 선호가 혼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2019년 사이에는 군인의 과반 이상이 징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4년(2020년~2023년) 동안에는 병역제도에 대한 군인의 생각이 일반국민과는 다른 모병제선호 현상을 보이다가 2004년도 조사에서는 다시 징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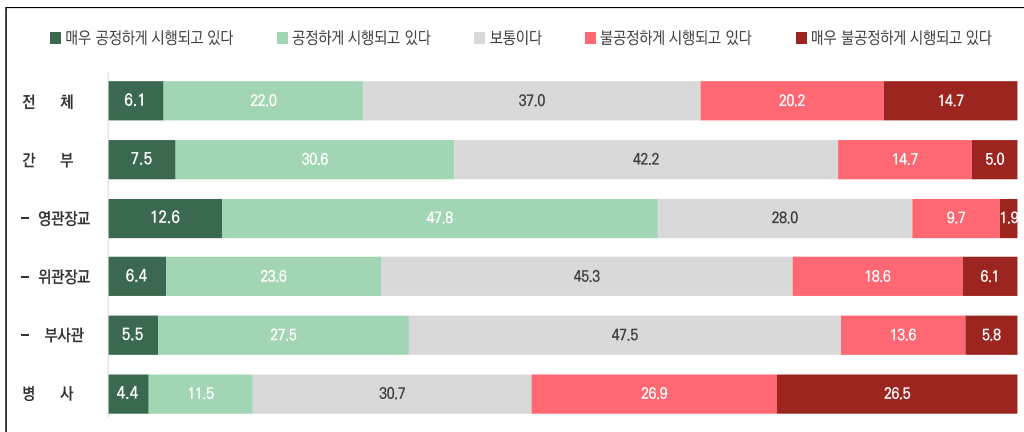
〈표 4-1〉 군인의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28.8	26.2	16.3	16.8	19.8	17.3	24.7
징병제 /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하여 실시해야 한다	27.7	26.3	28.0	28.8	24.8	24.0	27.4
점진적으로 모병제 /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	31.2	35.2	39.4	36.9	36.1	37.2	31.0
전면적인 모병제 / 지원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12.1	12.2	9.9	10.0	13.6	13.8	12.1
잘 모르겠다/무응답	0.3	-	-	7.5	5.8	7.6	4.8

즉, 군인들에 있어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선호가 절대과반을 기준으로 나눠지고는 있으나 모병제선호가 시기별로 50% 이상과 이하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곧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의미하는 의무복무의 당위성이 군인들에게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가운데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투전문가집단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기를 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군인의 관점에서 현재의 징병제 시행이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2024년도 군인안보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의 징병제도가 불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34.94%인 반면에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은 28.1%에 머물러 공정성 측면에서 제도시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 시행에 대한 의구심은 간부보다는 병사들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간부 응답자의 38.0%가 '공정'하다, '불공정'이 19.7%인 반면에 병사 응답자의 53.4%가 '불공정', '공정'은 15.9%에 불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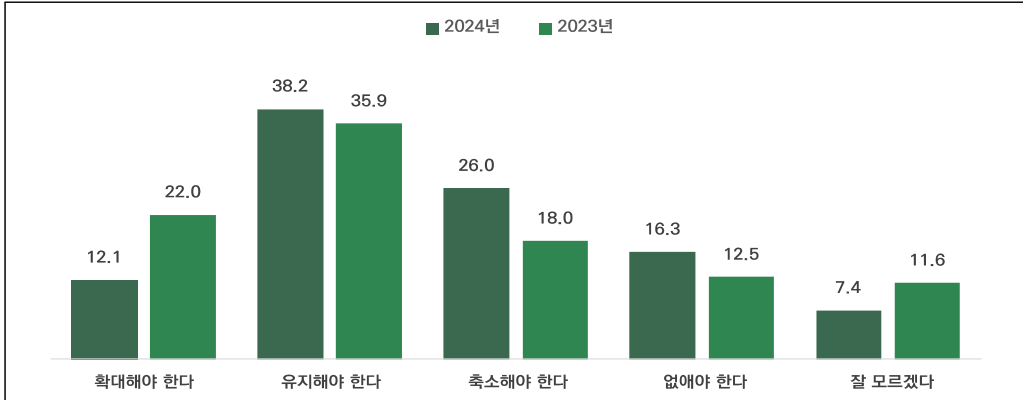
〈그림 4-3〉 징병제도 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전술한 징병제도 불공정 시행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 제도적 여건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술·체육·과학 특기자의 병역특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으나 불공정에 대한 뚜렷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4-4〉 예술·체육·과학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의견(군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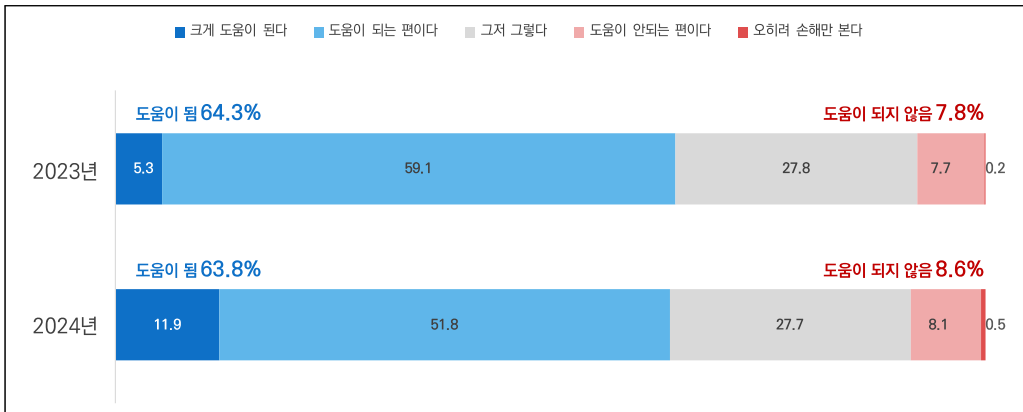


2023년도에 비해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6%p 감소한 50.3%이고,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42.3%(2023년 30.5%)로 조사되어 불공정의 주된 원인이 병역특례제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¹⁾

한편, 군복무 경험과 사회생활의 연계에 대해서는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63.8%, 전문가 77.0%, 군인 63.7%로 나타남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군복무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비교(일반국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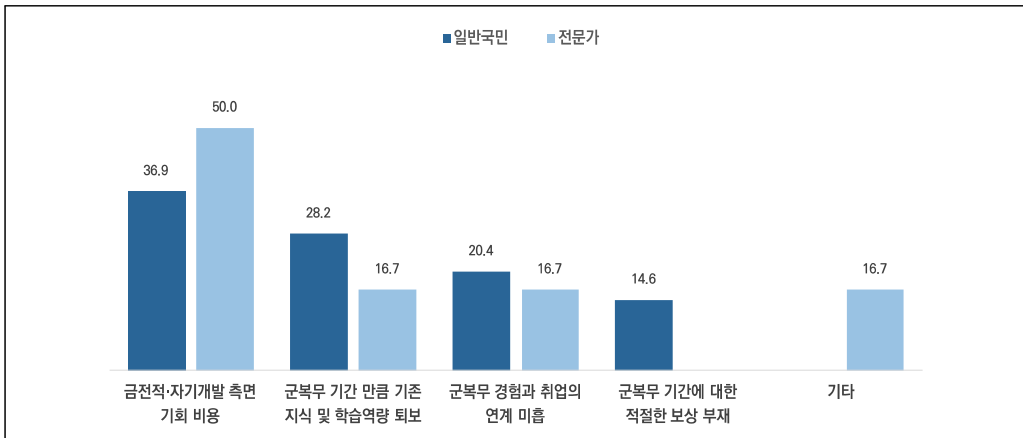


1)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혜정, 2017,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법』, 20(1) 참조.

반면에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의 비율이 10% 이하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이유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전적·자기개발 측면의 기회 비용’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2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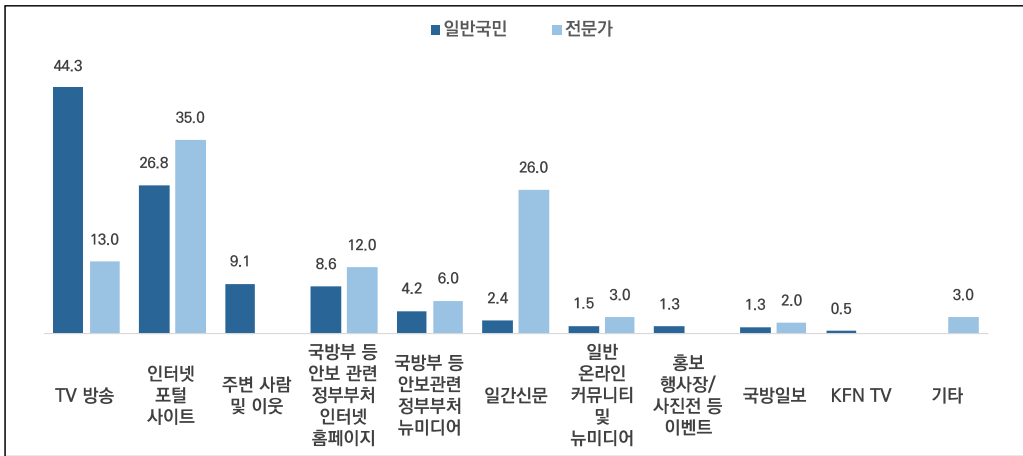
기본지식 및 학습역량퇴보에 대한 우려는 병사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부재(42.9%)에 이어 병사의 27.2%가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이 간부들에게서 적지 않게 지적됨에 따라 보직과 임무 배분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인식된다.

한편, 기존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군복무과정의 지식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라는 응답이 47.0%(매우 긍정적으로 변화 14.9%,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 32.1%)로 ‘부정적 변화’(28.5%)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사들이 한편으로는 군복무 동안의 학습역량퇴보를 우려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학습역량과 지식수준에 어떠한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망된다. 여기서 하나의 추정으로 ‘기존지식 및 학습역량’이 당사자의 전문지식영역(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는 반면에 지식수준 향상은 전공이외의 영역과 안보 및 군사관련 지식을 내포하는 의미일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수준의 긍정적 변화라는 응답이 나올 수 있었던 여러 원인을 분석하여 군대복무에 대해 건전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 특히 병역대상자를 상대로 이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공유방법의 관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선된 매체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TV 방송'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26.8%), '주변 사람 및 이웃'(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1순위)

(단위: %)



반면에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미디어(8.6%) 및 인터넷 홈페이지(4.2%), 국방일보(1.3%)와 국방TV(0.5%)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대국민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국방홍보매체(국방백서, 국방일보, 국방FM, 국방TV, 국방관련기관 뉴미디어)의 인지 여부를 묻는 조사 결과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방관련기관 뉴미디어를 접했다는 응답이 다른 매체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비인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표 4-2〉 지난 1년 동안 국방 홍보 매체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국방백서	국방일보	국방FM	국방TV	국방관련기관 뉴미디어
인지	1.9	4.4	5.2	12.9	27.7
비인지	98.1	95.6	94.8	87.1	72.3

3. 병력 수와 부족에 대한 인식과 인구동태적 제약

징병제도의 유지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현재의 대량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의 공급이 인구동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대답이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소요병력규모를 충원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인구동태적 추이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표 3>은 남성출생인구와 남성사망률 및 불용자원을 고려하여 징집가용인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연도별 출생인구에 성별 출생 비율을 고려하여 남성인구를 산정한 후 출생 후부터 징집대상연령이 되는 만 19세까지의 평균사망률(0.6%)을 참조하여 징집 대상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불용자원²⁾ 즉 신분결함과 신체결함으로 인해 평시에는 소집되지 않으나 전시에는 소집되는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 규모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평균 징집대상인구의 약 2.5%에 해당됨으로 징집가용인력은 징집대상인구 보다 적다.

도출결과를 보면, 가용남성인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1988년에는 출생인구가 80년대 출생인구 중 가장 낮은 338,605명을 기록하고 있어 징집가용인력이 328,159에 달했다. 1992년에 출생인구의 증가로 징집가용인력이 최고 38만 명에 달했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도에 입영하는 1999년생의 경우 가용인력은 3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의한 징집가용인력의 감소는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2016년생이 입영하는 2035년도에는 가용인력이 겨우 20만 명에 달한다.

<표 4-3> 인력수급과 잉여인력 추이

입영 연도	출생 연도	출생 인구	성별 구성비 (여자=100)	남성 인구	남성 사망률 (%) ¹⁾	징집대상 인구	가용인력 ²⁾
2003	1984	682,217	108.3	354,700	0.6	352,572	343,758
2004	1985	662,510	109.4	346,125	0.6	344,048	335,447
2005	1986	641,644	111.7	338,553	0.6	336,522	328,108
2006	1987	629,432	108.8	327,980	0.6	326,012	317,862
2007	1988	637,462	113.3	338,605	0.6	336,573	328,159
2008	1989	646,197	111.7	340,955	0.6	338,909	330,437
2009	1990	658,552	116.5	354,371	0.6	352,245	343,439
2010	1991	718,279	112.4	380,106	0.6	377,826	368,380
2011	1992	739,291	113.6	393,181	0.6	390,822	381,051

2) 불용자원이란 징병검사에서 5급(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와 생계곤란으로 면제를 받은 자, 또 징병검사이후 질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어 면제를 받은 자, 그리고 군에 입영하여 입영전 신검에서 면제를 받은 자 등이며 기타 저학력, 수형, 고아 등으로 면제 받은 자도 포함된다.

입영 연도	출생 연도	출생 인구	성별 구성비 (여자=100)	남성 인구	남성 사망률 (%) ¹⁾	징집대상 인구	가용인력 ²⁾
2012	1993	723,934	115.3	387,690	0.6	385,364	375,729
2013	1994	728,515	115.2	389,986	0.6	387,646	377,955
2014	1995	721,074	113.2	382,859	0.6	380,562	371,048
2015	1996	695,825	111.6	366,985	0.6	364,783	355,664
2016	1997	678,402	108.2	352,561	0.6	350,445	341,684
2017	1998	642,972	110.1	336,941	0.6	334,919	326,546
2018	1999	616,322	109.6	322,275	0.6	320,342	312,333
2019	2000	636,780	110.2	333,840	0.6	331,837	323,541
2020	2001	557,200	109.0	290,597	0.6	288,854	281,632
2021	2002	494,600	110.0	259,076	0.6	257,522	251,084
2022	2003	493,500	108.7	257,036	0.6	255,494	249,107
2023	2004	472,761	108.2	245,690	0.6	244,216	238,111
2024	2005	435,031	107.8	225,680	0.6	224,326	218,718
2025	2006	448,153	107.5	232,176	0.6	230,783	225,013
2026	2007	493,189	106.2	254,009	0.6	252,485	246,173
2027	2008	465,892	106.4	240,169	0.6	238,728	232,760
2028	2009	444,849	106.4	229,321	0.6	227,945	222,247
2029	2010	470,171	106.9	242,925	0.6	241,468	235,431
2030	2011	471,265	105.7	242,162	0.6	240,709	234,691
2031	2012	484,550	105.7	248,989	0.6	247,495	241,307
2032	2013	436,455	105.3	223,861	0.6	222,518	216,955
2033	2014	435,435	105.3	223,338	0.6	221,998	216,448
2034	2015	438,420	105.3	224,869	0.6	223,520	217,932
2035	2016	406,243	105.0	208,076	0.6	206,827	201,657

주: 1) 연령별 남자사망률은 0.6%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01년 말 기준으로 0-9세의 평균사망률(0-9세: 0.8%, 10-19세: 0.4%)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2) 징집대상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가용인력 대비 불용자원(신분결함과 신체결함의 제2 국민역과 병역면제) 비율을 일괄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병무청, 『병무연보』; 자체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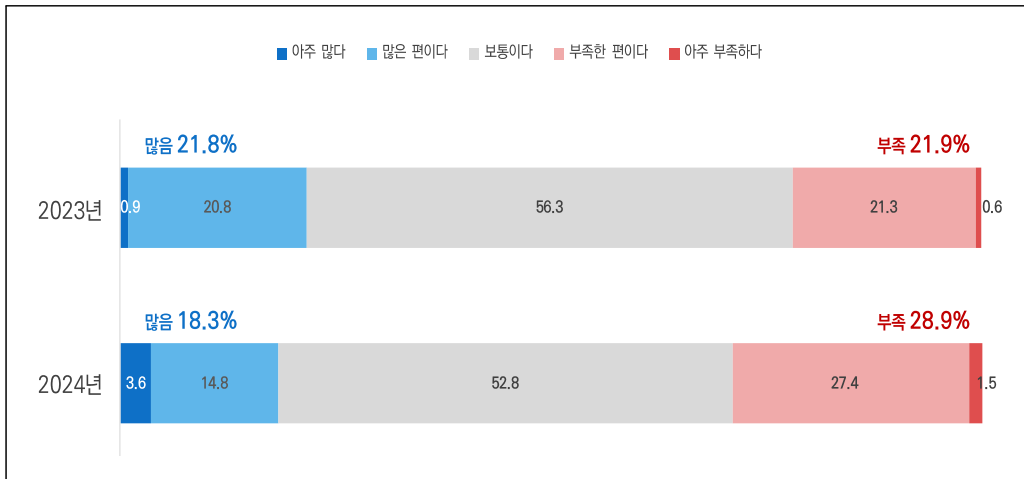
문제는 「국방개혁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30만 명 병사소요인력이 18개월간 복무할 경우에 20만 명의 징집가용인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부사관 및 간부 충원에 필요한 인력을 고려할 경우, 필요인력의 충원을 위해서는 현역성 대체복무인 경찰지원과 교도대원, 그리고 대체복무인력(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역)의 운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거나 이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그와 더불어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동태적 전망은 대량징병제 유지가능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발견된

다. 2024년도 조사에서는 현재 병력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9%로 ‘많음’(18.3%)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10.6%p 높게 나타났다. 2023년(21.9%) 대비 병력수 부족에 대한 인식이 7.0%p 증가했으며, ‘많다’는 응답은 18.3%로 2023년(21.8%)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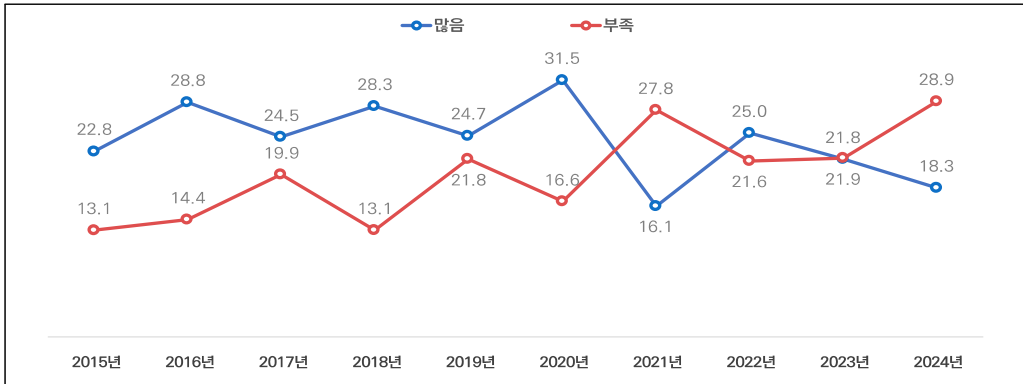
(단위: %)



병력부족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15년~2020년 사이에 뚜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혼조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일관되게 병력수가 많다는 의견이 부족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현상을 보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 기존추이와는 달리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많다는 의견이 소폭 높았고, 2023년에는 거의 같았으며, 2024년에는 역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변화와 최근의 혼조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하는지는 명확히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추정으로서 가능한 것은 2020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전체 병력 수에 대한 느낌과 인식이 통계적으로 표현되었다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는 군 소요인력의 충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출산을 감소와 병역대상인구 급감에 따라 표출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분쟁, 대만을 둘러싼 미중안보갈등에 대한 최근의 잦은 언론보도가 국가안보와 병력 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을 적지 않게 가져왔다고 추정된다.

〈그림 4-9〉 현재 병력 수에 대한 인식추이

(단위: %)



한편, 이러한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일반국민은 ‘병역특례 감축’(49.7%), ‘현역 판정률 상향’(31.8%), ‘여군간부 확대’(17.1%) 등의 성향을 보였고, 이러한 해결방안 성향은 전문가집단에서도 ‘병역특례 감축’ (50.0%), ‘여군간부 확대’(2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거의 동일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력부족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병역특례 감축이나 현역 판정률 상향으로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인구절벽과 같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의 활용이 부분적으로는 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활용을 여성간부 직위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대규모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국한하는 현재의 병역법을 수정하여 여성인력을 징집의무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과 사회집단에서 제기되고 있어 병역법을 둘러싸고 또 다른 형태의 갈등, 특히 젠더갈등이 우리 사회에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제도는 국가안보를 위한 인력공급 측면의 제도적 수단이지 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포괄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결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향된 제안에 대해서는 비록 특정 제안이 문제해결에 부분적으로 일조하더라도 엄격한 여과가 요구된다.

급격한 병역자원감소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은 여성인력 활용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팔목할 만한 생산성향상과 기능주의적 노동분업, 그리고 직업전문화에 기초한 모병제의 도입과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모병

3)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과 사회적 비용 및 모병제 전환에 필요한 추가 국방예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 상목, 2017. “국방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병제 전환의 파급효과에 대한 소고: 모델이론과 실증분석,”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송윤선·이용, 2020. “병영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총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20(1) 참조.

제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 대중군대의 감소, 사회적 대표성 부족 등이 지적되지만 기술발전의 복합체인 현대무기체계의 운용에 모병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투승리를 위한 전장 투입가능 상시 인력이 커진다는 점이 모병제의 장점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징병제 교육의 핵심이 징집병사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어 넣는 것에 있다면 동기부여가 팽배한 전문인력의 전투력은 현저히 높고, 징병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병역의 형평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점에서 제도전환을 위한 광범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마스트플랜에는 미시적으로는 필요인력의 확보방안과 보수·계급·진급체계, 거시적으로는 군 인력구조와 군사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변화를 상정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병사봉급인상과 사회적 비용의 표면화

징병제도는 국가공동체를 집단으로 방어한다는 민주주의 책임의식의 합법적 산물로서 프랑스혁명과 프로이센 군구조 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소요인력을 위협상황에 따라 신속히 총원할 수 있고, 국가의 강권력에 의해 징집되는 인력에 대해 인위적으로 낮은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국방인력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감논리는 예산상의 비용(budgetary costs)만을 고려한 주장으로 의무복무자 개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또는 현물세(natural tax)에 기초한 사회적 비용⁴⁾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을 통해 징병제가 인위적으로 낮은 병사의 보수로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유효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⁵⁾

한편,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작금에 들어 시행되고 있는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으로 비가시적이었던 사회적 비용이 국방예산의 인건비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병사월급은 병장기준으로 2022년 81.7만원,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으로 인상되어⁶⁾ 과거 개인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했던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이 연평균 3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가시적 사회적 비용(국방예산)으

4) 군복무인력 각 개인이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봉사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현물세를 사회적비용이라 간주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에는 직접적 소득 측면의 기회비용 이외에도 학업중단, 교육과 결혼 시기, 직장선택 등에 대한 불안정성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연간 비가시적 사회적 비용(약 8조원), 국방예산상의 가시적 사회적 비용(약 2조원)을 합쳐 전체 사회적 비용은 약 10조원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이상목, 2019. "병역환경변화와 모병제: 도입가능성의 고찰과 정책제언," 『교수논총』, 국방대학교. 참조.

6) 2023년 기준 병장봉급이 165만원인데, 이 수치는 월봉급 125만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군인적금(내일준비금)을 40만원 한도까지 넣었을 때를 상정하고 있다.

로 탈바꿈되고 있다. 그 결과 병사봉급이 불과 3년 만에 81만 7천 원에서 20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방예산 인건비가 한해에 8천억 원 증가하였다. 특히, 내년도 병장봉급으로 책정된 205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209만 6천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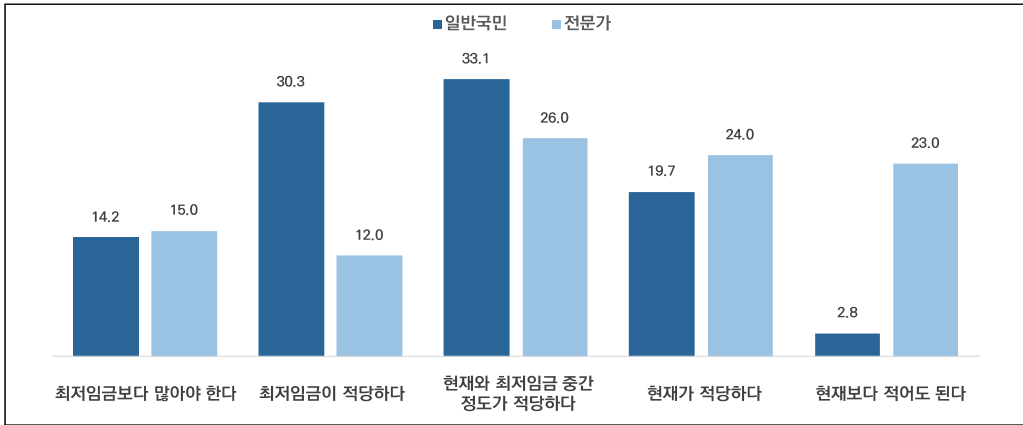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의 병사 봉급수준에 대한 인식은 2024년도 설문조사(일반국민)에서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적당하다'(30.3%), '현재가 적당하다'(19.7%),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14.5%)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가 적당하다'와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로 응답한 비율이 52.8%로 현재보다 병사봉급이 오르더라도 인상폭이 최저임금 이하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수준 또는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45.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병사봉급인상에 대해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비효율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으나 '시간당 최저임금'을 '많고 적음'의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설문응답을 유도한 점이 과도한 봉급인상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관점은 징집된 병사가 받아왔던 봉급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취득한 경제활동의 결과물(시장임금)이 아니라 징병제의 근간인 국민개병원칙, 다시 말해 국가안보를 위해 강권력으로 징집되는 사회구성원의 노고와 봉사에 대한 답례(상징적 의미의 보수)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병사봉급인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방예산총액의 증가가능성과 기존예산구조 및 항목 조정의 문제, 보수격차를 둘러싼 계급별 내부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설문이 시행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념인 임금을 적용하려면 우리의 제도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직업화)이어야 하고, 당연히 그 보수의 기준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병사의 구체적 역할(노동생산성)에 상응하게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집단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병사봉급 인상정책을 우려하듯 일반국민과는 다소 다른 모습, 즉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라는 비율이 23.0%에 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일반국민(2.8%)에 비해 20.0% 이상 높아 그 우려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군인간부를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 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이 적당'(17.3%)과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23.8%)는 의견이 41.1%인 반면에 '현재보다 적어도 된다'라는 비율이 27.2%, '현재가 적당' 18.2%,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비율이 13.5%를 보여 최저임금 이하를 선호하는 비율이 58.9%를 보였다.

〈그림 4-10〉 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상술한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해 볼 때, 병사봉급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표면화는 개인의 기회비용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징병제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예산절감효과는 사라지고 국가봉사를 위한 징집인력 개인의 현물세가 보수로 탈바꿈하여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모병제의 전투전투인력에게 지급되는 수준에 근접할 만큼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기형적이고 인위적인 작금의 병사봉급인상을 중단·지양하고 국가재정부담을 분산완화하면서 동시에 군복무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군복무 이행자에 대해 제대후 경제활동시 일정기간 동안 과세공제액을 높이거나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세제상의 혜택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⁷⁾ 이 정책은 복무 당사자에게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제대후 경제활동기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가적으로는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체국방예산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병사봉급의 증가분이 다른 국방예산 항목에서 충당될 여지가 크고, 특히 방위력개선 항목에서 충당되는 경우 비록 국방예산이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증가하더라도 군사력증강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역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재의 정책은 징병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국방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채 대량의 징집병사들에게 모병제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불함에 따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론 과다인력을 운영하고, 무기체계 축적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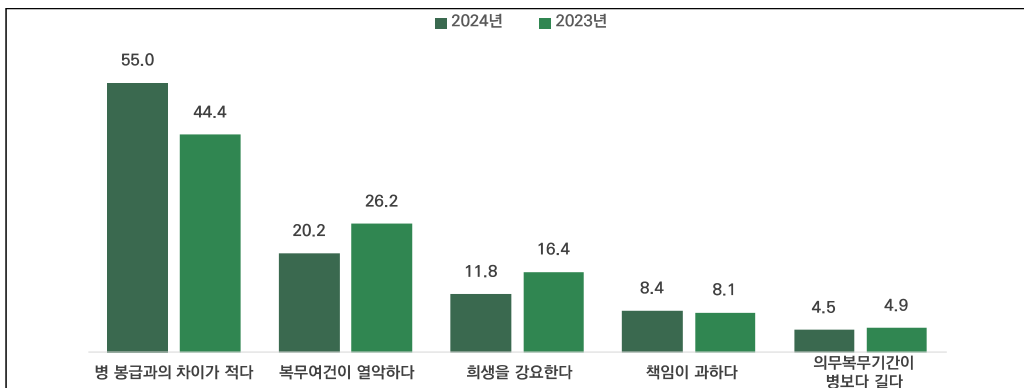
7) 기회비용 상쇄와 병역의 형평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상목, 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정책적 접근과 정책제언,” 『제도와 경제』, 통권 제5권 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참조.

는 군사력 수준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⁸⁾

셋째는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이 타 구성원, 특히, 초급간부들의 봉급인상요구로 이어져 군대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⁹⁾ 다시 말해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 증액은 곧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작금의 병사봉급인상은 대폭적인 인건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역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전력증강을 지체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봉급인상조치가 가져다 올 파급효과를 보다 폭 넓게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된 결과라 판단된다. 특히, 급작스러운 일방적 병사봉급인상은 간부의 지원의사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사에 비해 의무 복무형 기간제 간부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에 봉급차이가 줄어들어 간부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안보의식조사에서는 초급간부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 ‘병사봉급과의 차이가 적다’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복무여건 열악(26.2%), ‘희생을 강요한다’(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4년도 들어 ‘병봉급과의 차이가 적다’라는 응답이 55.0%로 증가하여 병사봉급인상의 부작용이 초급간부 확보 측면에서 더욱 뚜렷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병봉급과의 차이가 적은 것을 원인으로 보는 경향은 부사관(66.4%)이 위관장교(50.6%)와 영관장교(4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다.

〈그림 4-11〉 초급간부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군간부대상)



8) 예산제약과 등안보곡선 사이의 최적점(무기와 인력의 조합)이 급격한 인건비증가로 안보수준 저하점으로 이동하는 학술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상목, 2017. “국방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병제 전환의 파급효과에 대한 소고: 모델 이론과 실증분석,”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참조.
 9) KBS뉴스(2024. 8. 27)에 의하면 병사봉급인상에 대한 초급부사관의 심정이 다음과 같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하사 4호봉임에도 월급이 세후 180만 원을 못 넘기고 있다. 제 월급과 비슷해지는 광경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적이 많다. 병사월급을 기하급수적으로 급하게 올리기 보다는 장기간 시간을 두고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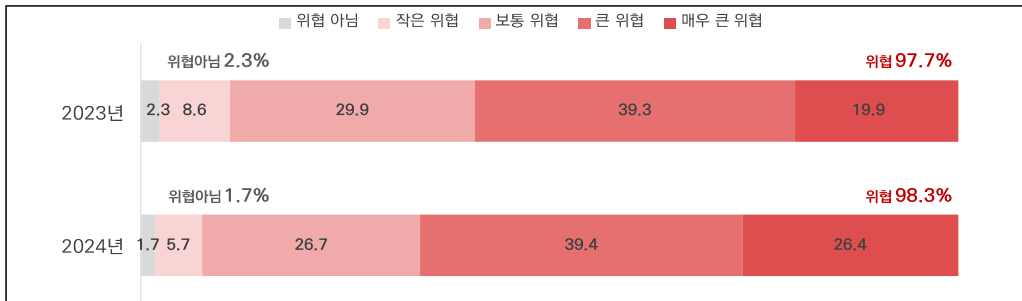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조사기관에서도 발견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병 급여인상이 초급간부 지원의사에 미치는 영향”)를 보면, 병사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렸을 때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수가 207명에서 121명으로 41.5%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⁰⁾ 상술한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인상된 병사봉급인상의 부작용을 기초로 병사의 적정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5.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젠더갈등

징병제도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국가 강권력에 의한 징집 그 자체가 이미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소요인력이 병역대상인구 보다 적은 부분징집제에서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여부와 그 형태, 강도 및 기간에 따라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휴병력을 병역과 무관한 민간 및 공공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 강제징집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국가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 대상인 구에서 여성이 제외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남성의 동의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는가에 따라 병역제도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¹¹⁾

〈그림 4-12〉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사회집단 간 갈등 심화)

(단위: %)



10) KBS뉴스(2024. 08. 27) [https://news.kbs.co.kr\(검색일: 2024. 10. 8.\)](https://news.kbs.co.kr(검색일: 2024. 10. 8.)).

11) 원래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채용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군복무자가 당초 군복무기간 동안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할 수 없어 군면제자 보다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된 제도이고, 병역의무이행을 장려하고 군 복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국가산점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필자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쟁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상목, 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쟁점과 정책제언,” 『제도와 경제』 통권 제5권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참조.

이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병역 이행자와 미필자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사회전반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갈등해소와 형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시급성은 설문조사에서도 발견된다. 군인(간보와 병사)을 대상으로 한 안보의식조사(2023년)에서 응답자의 97.7%가 사회집단 간 갈등심화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그보다 높은 98.3%에 달하고 있다

III. 병영문화와 집단전투력

군대구성원의 집단전투력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상호 결속 및 신뢰가 팽배할 때 극대화되고, 병영문화는 이들 요소들을 형성하는 주요 환경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국민들이 군대집단의 정신적 병영환경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개방성, 청렴성, 신뢰성, 혁신성, 친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군내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직무만족의 관점에서 군대구성원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병영문화의 물리적 환경(병영환경)에 대해 군인들의 인식을 개관·논의한다.

1. 분석의 틀: 집단전투력과 병영문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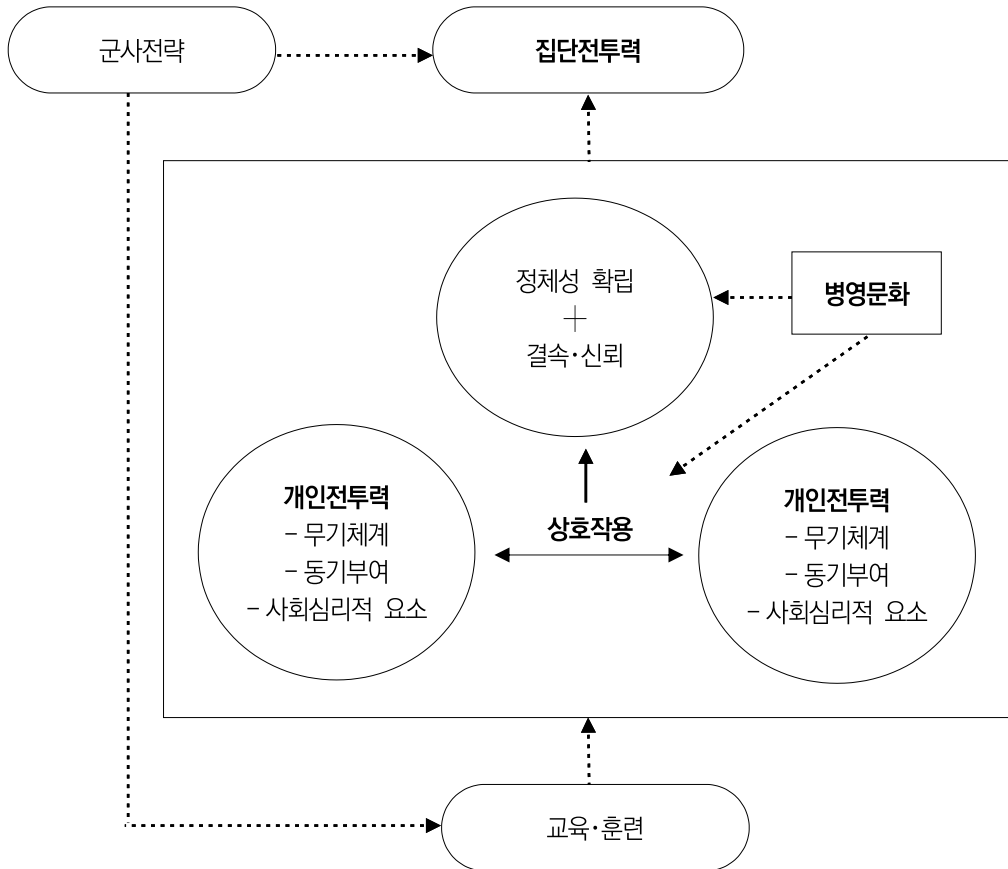
군대집단은 협의로는 전투력, 그리고 광의로는 군사력강화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개인전투력 발휘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비단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다. 전투력 발휘에 학력수준과 신체적 조건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주장과 더불어 그 반론으로써 학력수준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병사 개인의 무기체계 수준과 전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소(psychosocial factors)¹²⁾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¹³⁾ 여기에는 학력수준이 높은 자원이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투력발휘에 필요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징병제에서 시행해 왔던 교육훈련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수정·개선해 나가야 하고, 징집된 병사에게 군복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

12) 여기서 심리사회적 요소는 '해당 직업과 임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그에 기초한 병사개인의 심리상태'(psychological factors under the aspect of social conditionality)로 이해된다.

13) Semsdorf, Mattias. 1998. *Wehrpflicht- und versus Freiwilligenarmee*, p.204.

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4-13〉 집단전투력에 대한 병영문화의 역할



한편, 전투력 발휘에는 병사 개인의 무기체계 수준과 전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심리 사회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개인의 전투력발휘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군 구성원의 결속력과 상호신뢰에 근거한 집단전투력 발휘에는 병영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의 지배적 병영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전투력발휘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병역기피 행태로 분출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병영문화개선이 집단결속력과 동기부여를 고취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단전투력은 위로는 군사전략, 아래로 부터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는 한편, 바람직한 병영문화를 매개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상호 결속 및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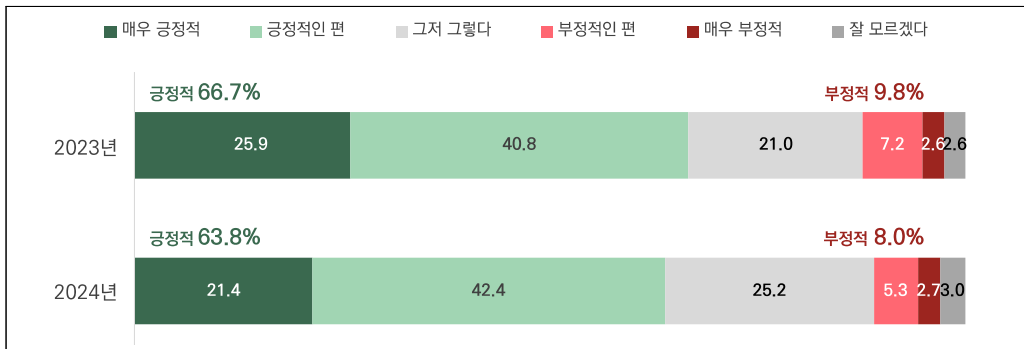
가 팽배할 때 극대화된다.

2. 병영문화의 영향요소와 정체성

병영문화는 개인 전투력을 집단전투력으로 결속시키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간부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군인안보의식조사에서 병영문화개선 노력이 전투력 발휘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3.8%로 ‘부정적’(8.0%)이라는 응답보다 55.8%p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4〉 병영문화개선 노력이 전투력 발휘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



2023년 대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p 감소했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5년 이후로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병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절에서는 국민들이 사회전체의 하부조직인 군대집단의 병영문화를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혁신성, 친근성, 그리고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평가가 군인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긍심과 집단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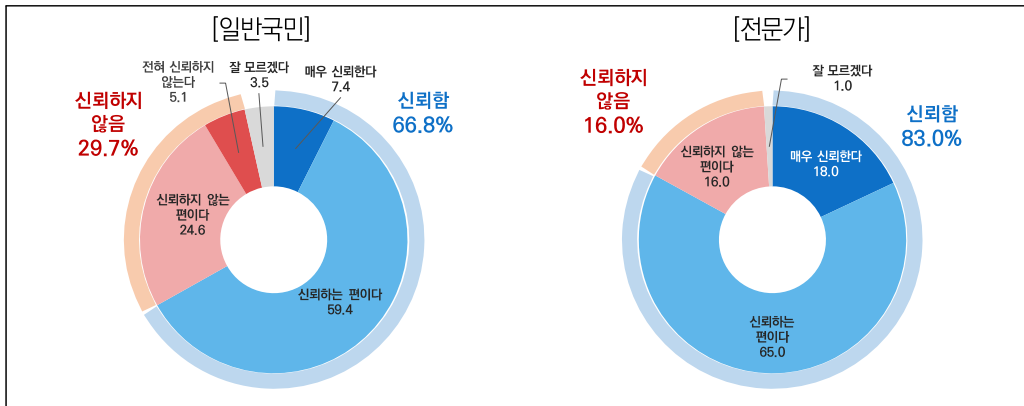
1) 신뢰성(믿음)

무기체계, 동기부여와 더불어 개인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사회심리적 요소는 군대 구성원 개인이 사회가 어떠한 임무수행과 역할을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임무수행과 역할을 곧 군에 대한 신뢰로 이해하는 경우, 일반국민의 66.8%가 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집단은 83.0%의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66.8%)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뢰하지 않는다’(29.7%)보다 37.2%p 높게 나타났고, 2023년 대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p(2023년 63.6%) 증가했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5.5%p(2023년 3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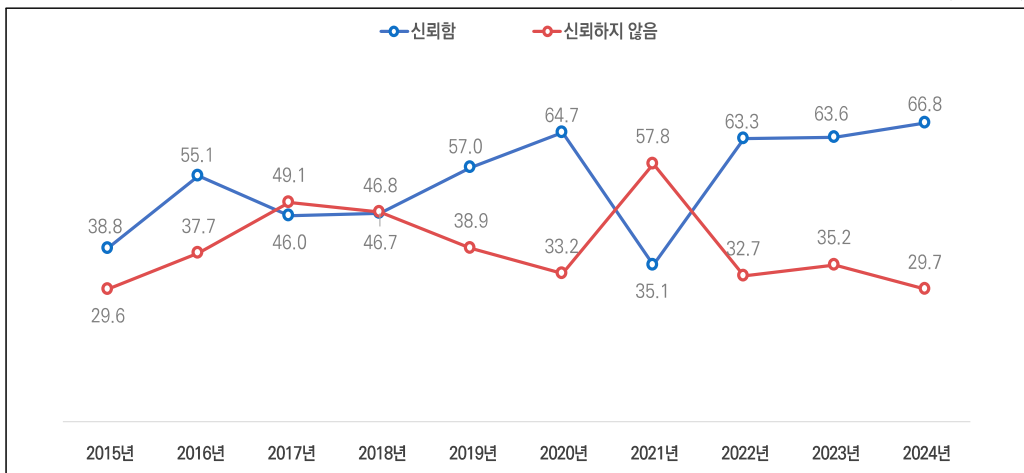
(단위: %)



그 추이를 보면 2015년 대비 우리 군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이 28.0%p 증가한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불과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신뢰제고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림 4-16〉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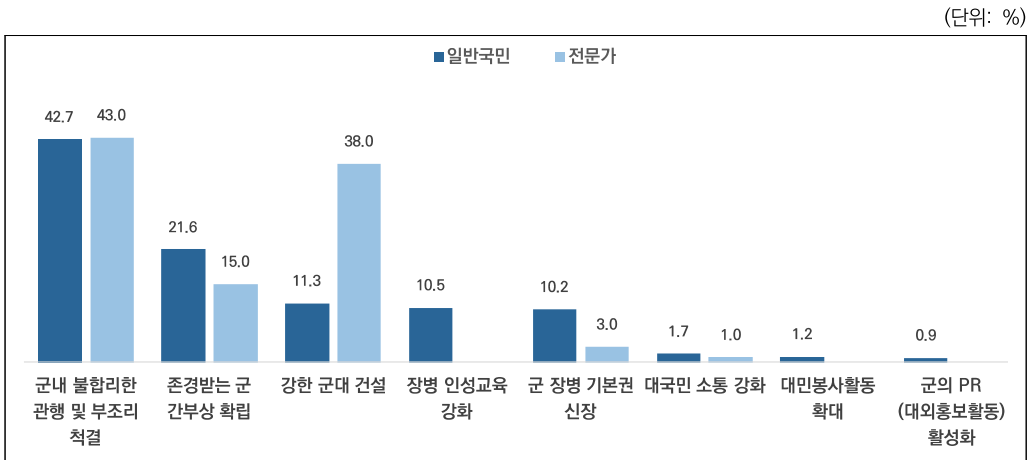
(단위: %)



대국민신뢰도가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 58.2%, 전문가는 71.0%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군의 신뢰도 증가를 위해 전문가들이 ‘강한군대 건설(38.0%)’을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43.0%)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일반국민들은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21.6%)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선순위 면에서 ‘인성교육강화와 기본권 신장’(20.7%)을 ‘강한 군대건설’(11.3%) 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강한군대건설이 전문가집단의 시각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강한군대건설이 인성교육 및 기본권 신장의 중요성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군대의 존재목적이 강한 군대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척결과 기본권보장 및 인성교육이 뒷받침되는 병영문화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여서 정책적 합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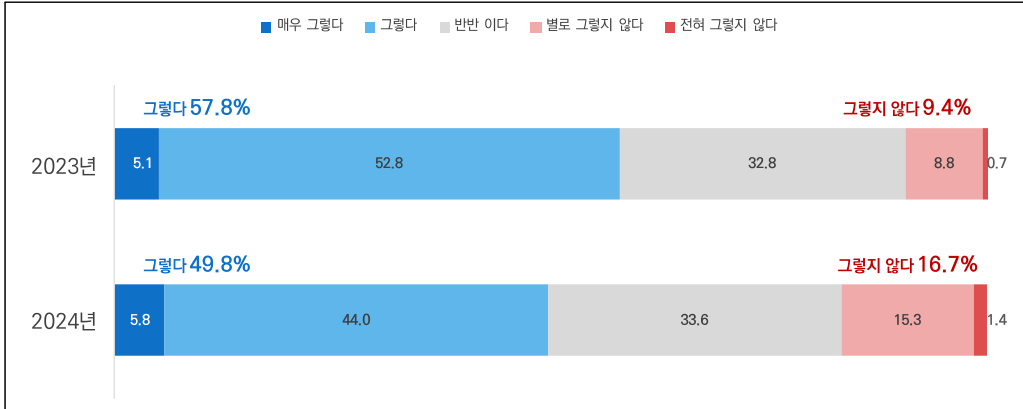
〈그림 4-17〉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1순위)



한편, ‘군에 대한 신뢰도’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항을 대신하여 직설적 표현인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라는 물음을 제시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49.8%, 전문가 66.0%로 나타나 신뢰도를 묻는 문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믿을수 있다’라는 비율이 7~8% 하락하고, 대신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비율만큼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8〉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믿을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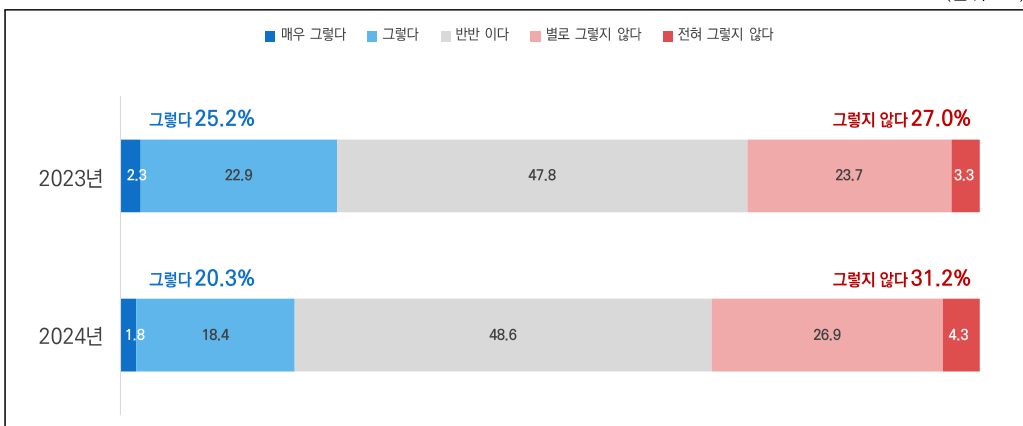


2) 청렴성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 비율이 31.2%로 ‘그렇다’(20.3%) 비율보다 10.9%p 더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대비 ‘그렇다’ 비율은 20.3%로 2023년(25.2%) 대비 4.9%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 비율은 31.2%로 2023년(27.0%) 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렴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였다. 우려되는 점은 2022년과의 비교 결과이다, 국방부 및 한국군이 ‘청렴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 비율은 2022년 대비 9.6%p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 비율은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국방부 및 한국군의 청렴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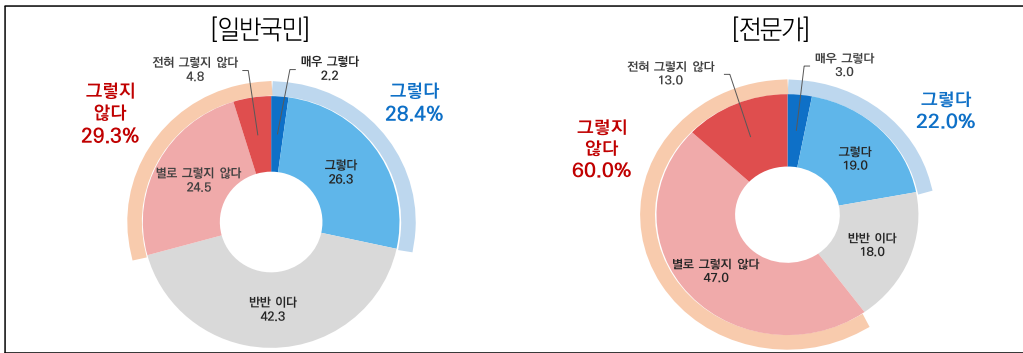


3) 개방성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그렇다'(28.4%) 비율보다 0.9%p 더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대비 '그렇다' 비율은 28.4%로 2.1%p(2023년 30.5%) 감소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1.9%p(2023년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전문가집단에서는 개방성에 대해 응답자의 60.0%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그림 4-20〉 국방부 및 한국군의 개방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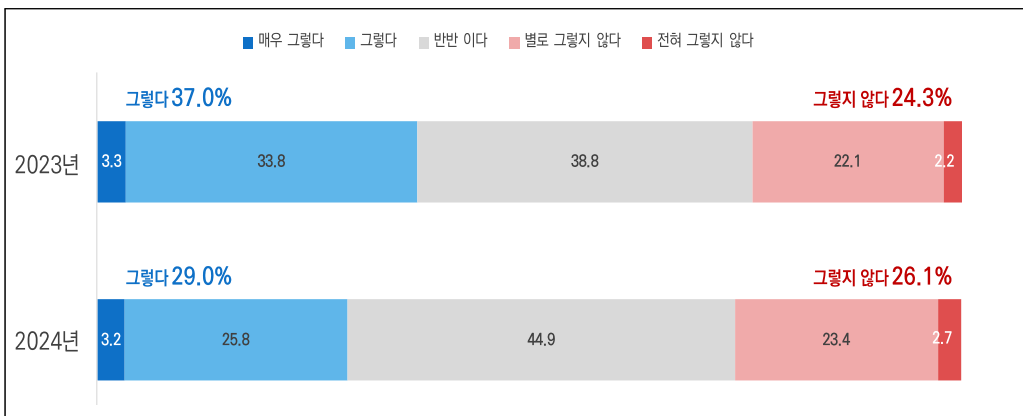
(단위: %)



4) 혁신성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다'라는 의견에 '그렇다' 비율이 29.0%로 '그렇지 않다'(26.1%) 비율보다 2.9%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1〉 혁신성에 대한 전년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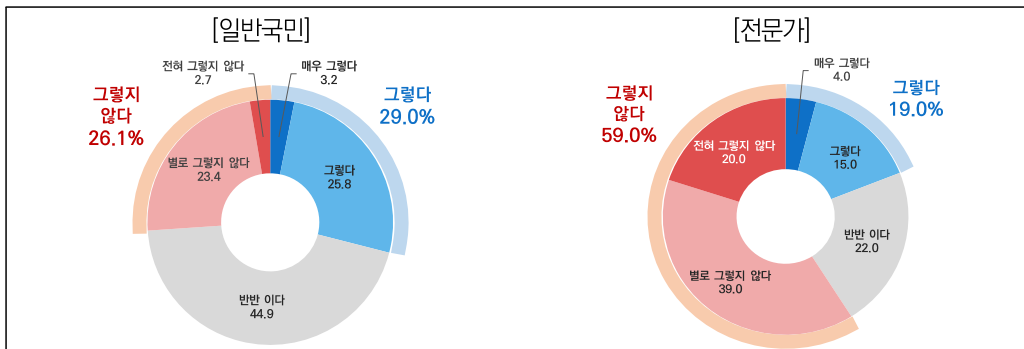


‘그렇다’ 비율이 2023년(37.0%) 대비 8.0%p 감소했으나, ‘그렇지 않다’ 비율은 2023년(24.3%) 대비 1.8%p 증가하였다.

문제는 개방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혁신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에 있어 ‘그렇지 않다’ 비율이 59.0%로 ‘그렇다’ 비율(19.0%)보다 무려 40.0%p 더 높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그림 4-22〉 국방부 및 한국군의 혁신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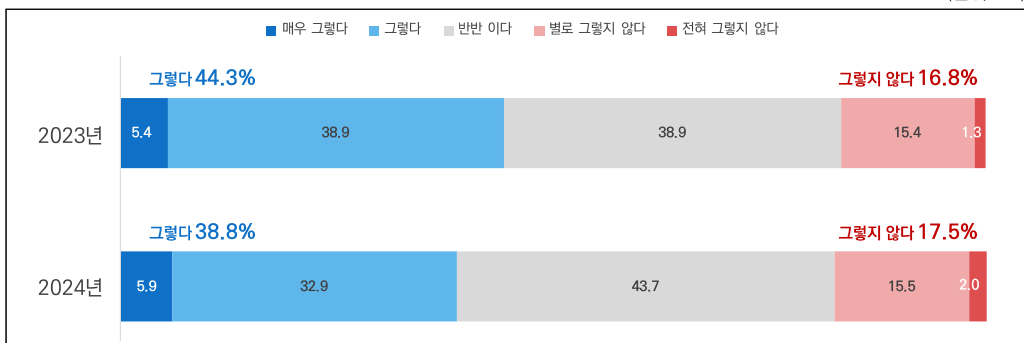
5) 친근성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라는 의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그렇지 않다(17.5%)’ 비율보다 21.3%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대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p(2023년 44.3%) 감소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0.7%p(2023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친근성 하락의 이유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4-23〉 국방부 및 한국군의 친근성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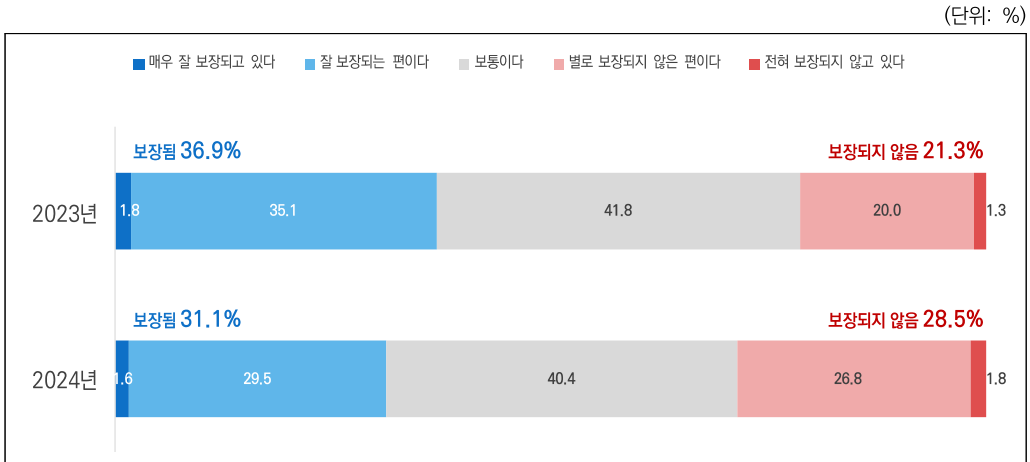
(단위: %)



한편, 군대내 인권보장의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병영생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할 뿐 아니라 군대집단의 대외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군인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자긍심과 직업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권관련 설문조사 결과, 군내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보장되지 않음'(28.5%)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p(2023년 36.9%) 감소하였으며, '보장되지 않음'은 7.2%p(2023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되고 있다'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지만 응답자 3명중 1명 꼴로 군대내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점은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함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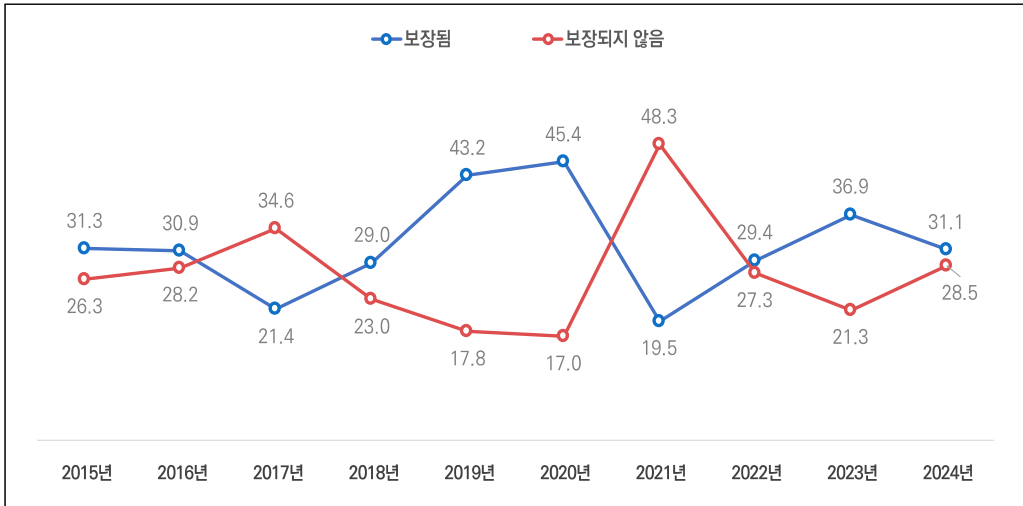
〈그림 4-24〉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추이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2015년~2020년 사이에는 '보장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감소하여 2020년에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45.4%에 달하는 긍정적 추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추이는 2021년에 19.5%로 급감하였고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어 어떠한 이유로 군대내 인권침해에 대한 여론이 급작스럽게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25〉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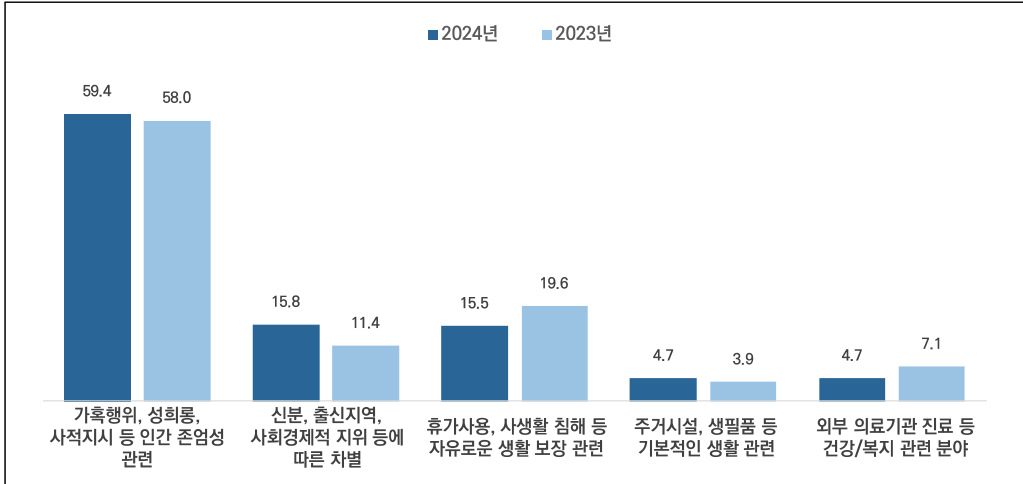
(단위: %)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15.8%),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1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인식은 2021년의 70% 수준에서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망된다. 더욱이 전문가집단에 있어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아 군대내 인간존엄성 침해를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영내 악습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 현저한 괴리를 보인다. 간부는 ‘사회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보다 적은 수준’(30.4%), ‘다소 및 매우 심각’(17.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병사들은 21.2%가 ‘사회보다 다소 및 매우 심각’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회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8%에 그쳐 병사가 간부에 비해 병영 내 악습수준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림 4-26〉 군대 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단위: %)



이상의 병영문화적 특이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의 군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제고 현상이 발견되는 점과 친근성 및 혁신성 평가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 그러나 청렴성 면에서는 청렴하다는 비율이 2년 연속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개방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평가가 긍정과 부정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전문가집단의 응답비율이 60.0%에 달할 만큼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 평가가 혁신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높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과 전문가집단 모두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가장 우선하고 있고, 이러한 도덕적 기준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과 ‘인성교육과 기본권 신장’을 강한 군대건설 보다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 모두가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침해를 최우선 척결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4. 직무와 물리적 병영환경에 대한 만족

직무만족도는 조직내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직무만족도는 세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인 가치와의 일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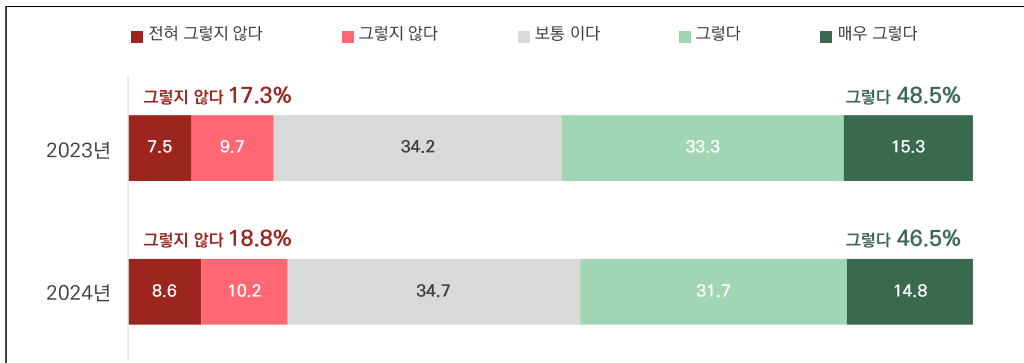
직무수행에 대한 흥미와 직무수행의 성취감 등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2024년도 군인안보의식조사에서는 조직 내 소속감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인 가치와의 일치감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고(문항제외), 2023년도 조사에서는 그 문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설문대상이 병사를 제외한 간부로 한정하고 있어 계급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조사항목(직무수행에 대한 흥미와 직무수행 성취감)을 기초로 직무만족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직무에 대한 흥미

직무에 대한 흥미를 묻는 질문에서 군인 전체적으로는 2024년도에 ‘담당업무에 흥미가 있다’는 의견이 46.5%로 ‘그렇지 않다’(18.8%)보다 27.7%p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4-27〉 직무만족에 대한 의견(담당업무에 대한 흥미)

(단위: %)



계급별로 보면 간부는 55.7%가 흥미를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12.7%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사는 35.3%만이 흥미를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26.2%에 달해 간부와 병사들 사이에 직무에 대한 흥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직무흥미에 대한 의견은 영관급 장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관장교, 부사관, 병사의 순으로 나타나 계급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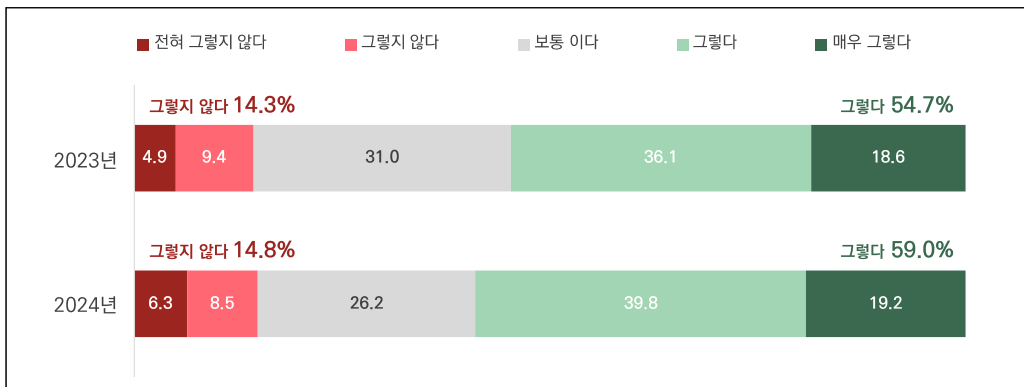
2) 업무수행 성취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2023년도 보

다 높은 59.0%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간부의 긍정적 응답비율은 68.5%로 ‘그렇지 않다’(8.1%)보다 60.4%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병사에게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7.3%로 ‘그렇지 않다’(23.0%)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4.2%p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업무수행 성취감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매우 크고, 병사의 4명 중 1명꼴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의무복무 수행에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4-28〉 직무만족에 대한 의견(업무수행 성취감)

(단위: %)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록 제한된 항목에 기초한 조사결과이지만 간부가 병사에 비해 직무수행에 대한 흥미와 직무수행 성취감을 더 높게 느끼고 있고,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대조직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의 1/4이 본인의 직무에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병영조직의 문화적 가치관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3) 병영생활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조사에 이어 병영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독서여건(65.2%)과 체육활동(63.6%)에 대해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화 환경(45.5%)과 자기계발(49.4%)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유시간(21.2%)과 정보화환경(26.6%)이었다.

〈표 4-4〉 병영환경에 대한 의견(병사)

구분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종합		
						만족	보통	불만족
체육활동	26.1	37.5	23.4	7.2	5.8	63.6	23.4	13.0
자유시간	20.5	32.0	26.4	12.7	8.4	52.5	26.4	21.2
자기계발	18.6	30.8	32.7	11.0	7.0	49.4	32.7	17.9
정보화 환경	18.1	27.4	27.8	15.0	11.6	45.5	27.8	26.6
독서여건	26.6	38.6	24.4	6.6	3.9	65.2	24.4	10.4

자유시간 보장에 대한 희망은 군 인권보호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 군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를 묻는 설문에서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5%에 달할 만큼 높고, 특히 병사의 경우는 64.2%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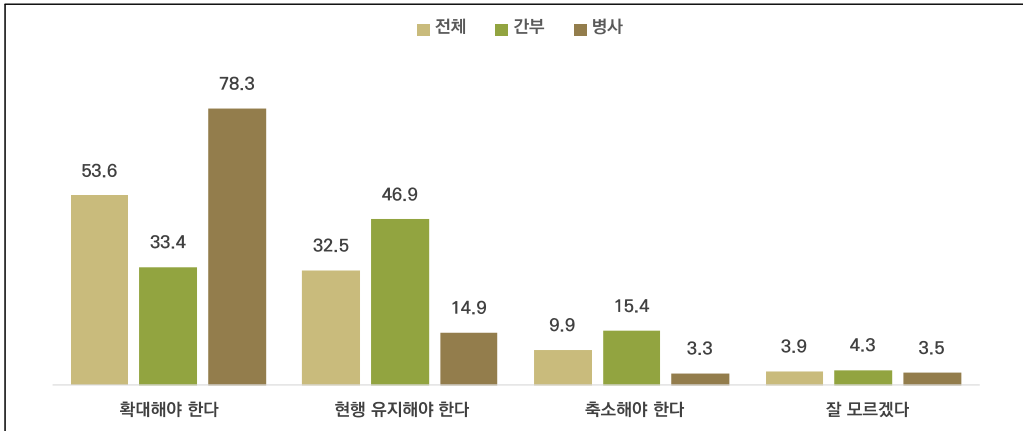
〈표 4-5〉 군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

구분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 관련	주거시설,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	신분,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외부 의료기관 진료 등 건강/복지 관련 분야	기타
전체	52.5	22.3	12.0	5.4	5.4	2.5
간부	27.3	39.0	15.6	7.8	5.2	5.2
병사	64.2	14.5	10.3	4.2	5.5	1.2

한편, 정보화환경과 휴대전화 사용을 유사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정보화환경의 개선희망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욕구는 간부(33.4%)에게도 적지 않으나 병사(78.3%)들에게는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9〉 군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휴대전화기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병사)로는 군생활만족도(27.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심리적 안정(19.7%), 외부와의 소통(15.9%), 자기 개발(16.6%), 병영 부조리예방(14.5%) 등이 골고루 제시되었다.

〈표 4-6〉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찬성이유

구분	군 생활 만족도	심리적 안정	외부와의 소통	자기 개발	병영 부조리 예방	기타
전체	28.0	20.1	17.4	14.2	12.2	8.1
간부	29.2	21.0	20.3	9.5	7.9	12.1
병사	27.4	19.7	15.9	16.6	14.5	6.0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라는 응답이 4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20.4%) 등이며 보안문제증가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0% 이하로 나타났다.

〈표 4-7〉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반대이유

구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보안문제 증가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 등 범죄 증가
전체	47.6	19.9	18.9	13.6
간부	47.2	20.4	18.8	13.6
병사	49.3	17.6	19.1	14.0

IV. 요약 및 정책 제언

모병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절대과반수 이상이 징병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전문가집단은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 전환을 필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괴리는 일반국민이 국민개병제에 대한 병역부담의 균등성과 형평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안보전문가들은 징병제의 단점으로 작용하는 노동집약적 군구조와 비전문성 및 병사관리 부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4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모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4년도 조사에서는 다시 징병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군인의 관점에서 현재의 징병제 시행이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병사들에게서 불공정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병역특례가 불공정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군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일반국민의 비율이 비록 소수이지만 그 원인으로 금전적·자기개발 측면의 기회 비용과 군복무 기간 만큼 기존 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를 지적하였다. 기본지식 및 학습역량퇴보에 대한 두려움은 병사들 설문 조사에서도 나타났고 군복무 경험과 취업의 연계 미흡이 적지 않게 간부들에게서 지적됨에 따라 보직과 임무 배분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동시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본지식 및 학습역량 퇴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병사를 대상으로 군복무 동안의 지식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응답이 50% 가까이 나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군대복무에 대해 건전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 특히 병역대상자를 상대로 이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국방부 등 안보관련 정부부처 미디어와 국방일보 및 국방TV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공유방법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개선된 매체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병제 선호에 대한 각 집단별 반응이 시기적으로 혼재하는 가운데 인구동태적 추이를 고려한 결과 현역성 대체복무인 경찰지원과 교도대원, 그리고 대체복무인력의 운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거나 이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 병역특례 감축, 현역판정률 상향, 여군간부 확대 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나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

다. 심각한 문제는 젠더갈등을 비롯해 병역을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심화·확산되고 있어 갈등해소와 형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의 시급성은 일반국민과 군인 응답자의 95% 이상이 사회집단 간 갈등심화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국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그에 따라 정책결정권자들은 사회구성원의 결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향된 제안에 대해서는 비록 특정제안이 부분적 문제해결에 일조하더라도 포괄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엄격한 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현대사회의 괄목할 만한 생산성향상과 기능주의 노동분업 및 직업전문화, 병역의 형평문제 해소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여 모병제로의 제도전환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점진적이고 광범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 마스트플랜에는 미시적으로는 필요인력의 확보 및 활용, 보수·계급·진급 체계, 거시적으로는 군인력구조와 군사전략 및 국가경제력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은 청사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병사봉급인상과 징병제의 사회적 비용 표면화는 개인의 기회비용 축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국가봉사를 위한 징집인력 개인의 현물세가 보수로 탈바꿈하여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병제와 유사한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2024년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53% 정도가 '현재와 최저임금 중간정도가 적당하다'로 응답하여 병사봉급이 오르더라도 인상폭이 최저임금 이하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에 45.8%에 달하는 응답자가 대폭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배경에는 병사봉급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에 대한 결과물(시장임금)이 아니라 국민개병제에서 징집 사회구성원의 노고와 봉사에 대한 답례(상징적 의미의 보수)의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문항이 병사의 봉급을 마치 시장임금인 것처럼 인식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병사봉급이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책정되어야 할지를 물은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 전에 병사봉급인상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방예산총액의 증가가능성과 기존예산구조 및 항목 조정의 문제, 보수격차 축소에 따른 계급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단지 봉급의 상향조정 수준만을 물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 생각된다.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는 다른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인건비인상 만큼 전체국방예산이 인상되지 않으면 병사봉급의 증가분이 다른 국방예산 항목에서 충당될 여지가 크고, 특히 방위력개선 항목에서 충당되는 경우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병사봉급의 대폭인상이 초급간부들의 봉급인상요구로 이어져 군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특히 병사에 비해 의무복무형 기간제 간부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에 봉급차이가 줄어들어 간부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기형적이고 인위적인 작금의 병사봉급인상을 조속히 지양하고, 대신에 군복무 이행자가 제대후 경제활동시 일정기간 동안 과세공제액을 높이거나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정책 실현방안으로 제안한다. 이 정책은 병역의무 당사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전역 후 경제활동기간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가적으로는 재정부담을 분산완화하여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병영문화가 개인 전투력을 집단전투력으로 결속시키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군간부의 60% 이상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민들이 군대집단의 병영문화를 신뢰성, 청렴성, 개방성, 혁신성, 친근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국민의 군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제고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점과 친근성 및 혁신성 평가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 현상이다. 그러나 청렴성 면에서는 2년 연속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평가가 긍정과 부정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전문가집단의 응답이 60.0%에 달할 만큼 부정적이고, 이러한 부정평가가 혁신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높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단지, 전문가들이 군의 신뢰도 증가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에 이어 강한군대 건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에 일반국민들은 강한 군대건설 보다 존경받는 군 간부상 확립과 인성교육강화와 기본권 신장을 우선시 하는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이 현상은 군대의 존재목적이 강한 군대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불합리한 관행척결과 기본권보장 및 인성교육이 뒷받침되는 병영문화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여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군대내 인권보장은 병영생활의 전반적 내부분위기를 대변할 뿐 아니라 군대집단의 대외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소속 구성원의 자긍심과 직업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국민은 군내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가혹행위, 성희롱, 사적지시 등 인간 존엄성 관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높았으나, 정작 군대내 구성원(군인) 자신들은 가장 시급한 인권개선분야로 휴가사용, 사생활 침해 등 자유로운 생활 보장을 지적하였고, 특히 병사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병사가 간부에 비해 병영내 학습수준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내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는 계급이 낮을수록 흥미와 성취도를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병사의 1/4이 본인의 직무에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병영조

직의 문화적 가치관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될 우려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병영문화 형성의 물리적 환경(병영생활환경)에 대해서는 독서여건과 체육활동에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자유시간과 정보화환경이었다. 정보화환경과 휴대전화 사용을 유사개념으로 간주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정보화환경의 개선 희망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욕구는 간부에게도 적지 않으나 병사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기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병사)로 군 생활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이 주로 지적되었고, 비록 소수이지만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를 이유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보안문제증가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0% 이하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2034. 『범국민안보의식조사(군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3, 2024. 『범국민안보 의식조사(일반국민)』.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통계』 (<http://stat.nabo.go.kr/fn03-48.JSP>).
- 김학연. 2020, 『전투의지 고양을 위한 병영문화 발전방안』. 국방대학교 정책연구보고서
- 송윤선. 이용. 2020, “병영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20(1).
- 이상목. 2011.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성과 군필자 가산점제도: 쟁점과 정책제언,” 『제도와 경제』 통권 제5권 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 이상목. 2017. “국방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병제 전환의 파급효과에 대한 소고: 모델이론과 실증분석,” 『규제연구』 제26권 제1호.
- 이상목. 2019. ‘병영환경변화와 모병제: 도입가능성의 고찰과 정책제언,’ 『교수논총』, 국방대학교.
- 이혜정. 2017.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1).
- 홍두승 외. 1999. 『군복무주기상 병사심리분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KBS뉴스. 2024. 08. 27. <https://news.kbs.co.kr>(검색일: 2024. 10. 8.).
- Koenig Michel. 2000. *Die gesamtwirtschaftliche Effizienz der Wehrpflicht*. Cuvillier Verlag Goettingen 2000.
- Semsdorf, Mattias. 1998. *Wehrpflicht - und versus Freiwilligenarmee*.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2024

2024년 12월 31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_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인쇄_ 화신문화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상담가능】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 www.ds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3302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별로 1040
T. 041 831 6412 www.kndu.ac.kr